총 목 차

1. 한국통일의 시각에서 본
국제정세 장기전망 I

2. 70년대 북괴 역량전망 47

3. 통일을 위한 역량배양방안 91
(정치 및 외교적 측면에서)

4. 인위적장벽 및 긴장완화규정 129

5. 선의의 경쟁을 위한 방안 173

주 지 사 항

본 자료는 국가 안전보장상 중요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하기 바랍니다.

1. 본 자료는 제공대상자 이외의 취급 회람을 금하며, 복제 복사를 금합니다.
2. 본 자료는 원형대로 보관하며 만약 망실하였을 시는 즉시 발행처에 신고해야 합니다.
3. 본자료는 계속 보관의 필요가 없을 시는 발행처에 자진 반환해야 합니다.

한국통일의시각에서본국제정세장기전망

목 차

I. 국제관계의 기본추세 5
1. 시기구분 5
2. 국제관계의 유형변화 5
3. UN의개조 8
II. 세계정세 11
1. 미국의세계정세 11
2. 미소관계 14
3. 기타의동향(기타열강, 지역기구, 중립주의세력) 17
III. 아세아태평양정세 18
1. 전반적추세 18
2. 미 국 20
3. 일 본 26
4. 중 공 29
5. 소 련 30
6. 월남전종결과 아시아태평양지역 협력체제의 강화 32
IV. 한반도주변정세 35
1. 미 국 35
2. 일 본 38
3. 한미일 삼각협력체제 39
4. 소 련 41
5. 중 공 42

6. 북괴, 중공, 소간의 북방삼각동맹 43

7. 전반적상황과 한국통일문제와의 관련 43

Ⅰ. 국제관계의 기본추세

1. 시기구분

1970 년대부터 2000 년까지 세계적규모의 국제관계는 다음과 같은 단계적진화과정을 밟아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제 1 기 (1960 년대후반기 ……1970~1979 년) 전후체제전환기 〔전후후기 · 과도기〕

제 1 단계 (70 년대전반) 군사적양극상태와 정치적다극상태, 혼합대결국제체제로 특징지워지는 시기.

제 2 단계 (70 년대후반) 군사적 · 정치적 다원상태로의 이행, 혼합공존국제체제로 특징지워지는 시기.

제 2 기 (1980~2000 년) 신국제질서기

다각적 세력균형하에 국제협조에 주력하는 다극공존국제체제의 시기.

2. 국제관계의 유형변화

제 1 기인 전후체제전환기 (1970 년대)에 있어서는 60 년대후반부터 뚜렷해진 국제정치다원화 · 평화공존 및 지역주의의 성행과 같은 추세가 가일층 촉진되고 이에따라 과거 25 년간 국제정치의 기본테두리가 되어온 전후체제 (얄타 · 포쓰담체제)가 변질 · 개편되고 그 대신 세계적 규모로 새로운 세력구조와 국제질서가 형성되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캐프란」 교수는 현단계는 대치한 양극화국제정치체제하에 있으며 앞으로는 체제구성국의 행동여하로 견고한 양극화국제정치체제나 경합적세력균형국제정치체제로 복구될수도 세계정부국제정치체제로 승화

될수도 있다 하였는데 작금의 모든 정세에 비추어 70년대를 통해 경합적 세력균형국제정치체제로 이행되어 나갈 공산이 크다.

이러한 전환을 촉구하는 요인은 다음과 같다.

① 미소가 핵포화상태라는 말로 표시되는 바와 같이 타국에 비해 압도적으로 유세한 군사력과 양자간의 군사적균형아래 평화공존과 긴장완화를 추구하는 것이 서로의 이익이 된다고 깨닫게 되었다는 것 (미소의 세계전략구상과 외교유형 및 맥락의 변화)

② 미소의 핵균형에서 오는 핵전쟁불가능전망은 도리혀 미소의 국제정치면에서의 지위를 상대적으로 저하시킨 반면에 서독, 불란서, 인도, 중공, 일본등이 경제적으로 크게 성장하고 군사적으로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 그들의 국제정치상의 영향력이 증대되어 오고 있다는 것.

③ 한때 통일된 진영을 이룩하고 있던 국제공산주의세력간의 단결이 민족주의와 자유화의 물결앞에 깨어지고 그대신 공산권내에서의 이념적·권력적 영도권 장악을 위해 서로 경합하고 있다는 것.

④ 신생국들이 민족주의적자각속에 성장하여 자체의 힘과 자신을 갖고 국제무대에서 자율적으로 행동하며 국지분쟁에 독자적으로 대처할 능력과 책임을 갖추게 되었다는 것.

⑤ 미소가 공히 국내경제사정으로 인해 동서간의 경제교류확대를 희구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남북문제의 해결이 시급하게 되었다는 것.

⑥ 현대과학기술의 발표은 지구의 상대적규모를 축소시키고 국가간의 상호의존성을 높히고 우주개발, 해저개발, 공해규제등에서 국제협조

Ⅰ. 국제관계의 기본추세

1. 시기구분

1970 년대부터 2000 년까지 세계적규모의 국제관계는 다음과 같은 단계적진화과정을 밟아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제 1 기 (196 0 년대후반기 ……1970~1979 년) 전후체제전환기 〔전후후기 · 과도기〕

제 1 단계 (70 년대전반) 군사적양극상태와 정치적다극상태, 혼합대결국제체제로 특징지워지는 시기.

제 2 단계 (70 년대후반) 군사적 · 정치적 다원상태로의 이행, 혼합공존국제체제로 특징지워지는 시기.

제 2 기 (1980~2000 년) 신국제질서기

다각적 세력균형하에 국제협조에 주력하는 다극공존국제체제의 시기.

2. 국제관계의 유형변화

제 1 기인 전후체제전환기 (1970 년대)에 있어서는 60 년대후반부터 뚜렷해진 국제정치다원화 · 평화공존 및 지역주의의 성행과 같은 추세가 가일층 촉진되고 이에따라 과거 25 년간 국제정치의 기본테두리가 되어온 전후체제 (얄타 · 포쓰담체제) 가 변질 · 개편되고 그 대신 세계적규모로 새로운 세력구조와 국제질서가 형성되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캐프란」교수는 현단계는 해치한 양극화국제정치체제하에 있으며 앞으로는 체제구성국의 행동여하로 견고한 양극화국제정치체제나 경합적세력균형국제정치체제로 복구될수도 세계정부국제정치체제로 승화

될수도 있다 하였는데 지금의 모든 정세에 비추어 70년대를 통해 경합적세력균형국제정치체제로 이행되어 나갈 공산이 크다.

이러한 전환을 촉구하는 요인은 다음과 같다.

① 미소가 핵포화상태라는 말로 표시되는 바와 같이 타국에 비해 압도적으로 유세한 군사력과 양자간의 군사적균형아래 평화공존과 긴장완화를 추구하는 것이 서로의 이익이 된다고 깨닫게 되었다는 것 (미소의 세계전략구상과 외교유형 및 맥락의 변화)

② 미소의 핵균형에서 오는 핵전쟁불가능전망은 도리혀 미소의 국제정치면에서의 지위를 상대적으로 저하시킨 반면에 서독, 불란서, 인도, 중공, 일본등이 경제적으로 크게 성장하고 군사적으로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 그들의 국제정치상의 영향력이 증대되어 오고 있다는 것.

③ 한때 통일된 진영을 이룩하고 있던 국제공산주의세력간의 단결이 민족주의와 자유화의 물결앞에 깨어지고 그대신 공산권내에서의 이념적·권력적 영도권 장악을 위해 서로 경합하고 있다는 것.

④ 신생국들이 민족주의적자각속에 성장하여 자체의 힘과 자신을 갖고 국제무대에서 자율적으로 행동하며 국지분쟁에 독자적으로 대처할 능력과 책임을 갖추게 되었다는 것.

⑤ 미소가 공히 국내경제사정으로 인해 동서간의 경제교류확대를 희구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남북문제의 해결이 시급하게 되었다는 것.

⑥ 현대과학기술의 발달은 지구의 상대적규모를 축소시키고 국가간의 상호의존성을 높히고 우주개발, 해저개발, 공해구제등에서 국제협조

의 새로운 차원을 개척해 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

이시기를 통해 국제구조는 「군사적양극상태, 정치적다극상태」로 부터 「군사적·정치적다극상태」로 점진적으로 이행해 갈것인데 이과정을 통해 국제정치의 양상도 더욱 복잡하고 동태적인 것이 되어 나갈 것이다. 여기에 있어서는 「이데올로기」 획일성의 상실과 민족주의의 복활에 따라 국가이익을 위선적으로 추구하려는 60년후반이후의 국제정치다원화단계에서 나타난 경향이 더욱 증대되어 국제관계의 전개양식이 보다 복잡해지고 복수의 진영간 또는 지역간의 종합적균형유지에 더욱 많은 신경을 쓰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국가간의 관계에 있어 위협의 문제만 하드라도 그 근원을 특정국가로 한정할 수 없는데다가 빈곤·사회불안등 국내적요인이 더욱 부각되어 이에 대처할 방안도 군사력은 물론 경제, 사회, 문화면의 노력까지 포함한 다각적인 조치가 요청됨에 이르렀으므로 70년대이후에는 국제문제에의 접근에 있어서도 국가의 종합력이 중요시되는 가운데 국내문제까지 포함한 종합체제적접근방식 (Total System Approach)을 취할 것이 긴요하다. 그밖에도 모든 관계국은 현상유지를 위주로 하는 미소양초대국이나 현상변경을 희구하는 그밖의 국가나 할것 없이 각기의 국가이익을 원만히 조정, 조화해 나가야 하는데 여기에 있어서는 그어떠한 형태의 대국주의도 사이비 국제주의도 배타적민족주의도 일체 배제한 가운데 각국이 세계평화와 공동번영을 지향하는 높은 정치적경륜과 인류적예지에서 자국의 국가이익을 설정하고 나아가 이를 지역이익 또는 진영이익 그리

고 세계이익과 조화•양립시켜 나갈것이 간요하다.

이 시기를 다시 세분하면 70년대전반의 제1단계에 있어서는 군사적양극성과 정치적다원성의 혼합체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화전의 양계기가 병존하나 그주조는 대결에 있어 초강대국의 핵우산아래 현재의 대립적동맹체제가 지속되어 위협성과 응보사이에 합리적균형이 잡혀질것 같이 보이는 국제적중간지대에서의 분쟁이 여전히 전개될 것이다. 다음 70년후반의 제2단계에 있어서는 초강대국과 강대국간의 핵전력상의 격차가 줄어들어 군사상으로나 정치상으로나 다극화상태로 이행하는 가운데 공존화해의 기운이 대립•항쟁에의 압력을 극복하고 전세계적으로 안정이 회복되어 나갈 것이다.

제2기 신국제질서기이후는 정확히 추단을 내리기 어려운 미래의 일이므로 상론은 다음 기회로 미룬다.

3. UN의 개조

1970년의 UN창립25주년기념총회에서는 UN25주년기념선언, 제2차개발10년전략, 우호협력에 관한 국제계원칙선언을 채택하였으나 UN의 실질적 혁신강화를 위한 결정적조치는 취해지지 않았다.
따라서 국제연합이 보편적 세계기구로서 본래의 사명을 다하여 새로운 세계질서를 창설해 나가는데 구심력이 되도록 국제연합헌장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1970년대는 물론 그후에도 계속 나타날 것이다. 이상적으로 말하면 국제분쟁의 평화적해결, 국제적정치현상의 평화적변경의 제도화, 표결절차의 개선, 거부권의 배제, 총회권한의

의 새로운 차원을 개척해 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

이시기를 통해 국제구조는 「군사적 양극상태, 정치적다극상태」로부터 「군사적·정치적다극상태」로 점진적으로 이행해 갈것인데 이과정을 통해 국제정치의 양상도 더욱 복잡하고 동태적인 것이 되어 나갈 것이다. 여기에 있어서는 「이데올로기」 획일성의 상실과 민족주의의 복활에 따라 국가이익을 위선적으로 추구하려는 60년후반이후의 국제정치다원화단계에서 나타난 경향이 더욱 증대되어 국제관계의 전개양식이 보다 복잡해지고 복수의 진영간 또는 지역간의 종합적균형유지에 더욱 많은 신경을 쓰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국가간의 관계에 있어 위협의 문제만 하드라도 그 근원을 특정국가로 한정할 수 없는데다가 빈곤·사회불안등 국내적요인이 더욱 부각되어 이에 대처할 방안도 군사력은 물론 경제, 사회, 문화면의 노력까지 포함한 다각적인 조치가 요청됨에 이르렀으므로 70년대이후에는 국제문제에의 접근에 있어서도 국가의 종합력이 중요시되는 가운데 국내문제까지 포함한 종합체제적접근방식(Total System Approach)을 취할 것이 긴요하다. 그밖에도 모든 관계국은 현상유지를 위주로 하는 미소양초대국이나 현상변경을 희구하는 그 밖의 국가나 할것 없이 자기의 국가이익을 원만히 조정, 조화해 나가야 하는데 여기에 있어서는 그 어떠한 형태의 대국주의도 사이비 국제주의도 배타적민족주의도 일체 배제한 가운데 각국이 세계평화와 공동번영을 지향하는 높은 정치적경륜과 인류적예지에서 자국의 국가이익을 설정하고 나아가 이를 지역이익 또는 진영이익 그리

고 세계이익과 조화·양립시켜 나갈것이 간요하다.

이 시기를 다시 세분하면 70년대전반의 제1단계에 있어서는 군사적양극성과 정치적다원성의 혼합체계가 지속되는 가운데 화전의 양계기가 병존하나 그주조는 대결에 있어 초강대국의 핵우산아래 현재의 대립적동맹체제가 지속되어 위험성과 응보사이에 합리적균형이 잡혀질것 같이 보이는 국제적중간지대에서의 분쟁이 여전히 전개될 것이다. 다음 70년후반의 제2단계에 있어서는 초강대국과 강대국간의 핵전력상의 격차가 줄어들어 군사상으로나 정치상으로나 다극화상태로 이행하는 가운데 공존화해의 기운이 대립·항쟁에의 압력을 극복하고 전세계적으로 안정이 회복되어 나갈 것이다.

제2기 신국제질서기이후는 정확히 추단을 내리기 어려운 미래의 일이므로 상론은 다음 기회로 미룬다.

3. UN의 개조

1970년의 UN창립25주년기념총회에서는 UN25주년기념선언, 제2차개발10년전략, 우호협력에 관한 국제계원칙선언을 채택하였으나 UN의 실질적 쇄신강화를 위한 결정적조치는 취해지지 않았다. 따라서 국제연합이 보편적 세계기구로서 본래의 사명을 다하여 새로운 세계질서를 창성해 나가는데 구심력이 되도록 국제연합헌장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1970년대는 물론 그후에도 계속 나타날 것이다. 이상적으로 말하면 국제분쟁의 평화적해결, 국제적정치현상의 평화적변경의 제도화, 표결절차의 개선, 거부권의 배제, 총회권한의

강화, 군축기구, 세계개발기구의 보충등의 방향으로 나갈 것이 요망되나 그 실현성은 요원하다. 다만 가까운 장래에 속하는 70년대 중에 론의 및 통과될 가능성이 비교적 있다고 생각되는 UN개조안의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안전보장이사회 및 총회에서의 표결권을 변경할 것.

② 국제연합상설군을 설치하여 국제연합의 평화유지기능을 강화할것.

③ 안전보장이사회의 구성을 개신할것.

④ 적국조항을 삭제할것.

⑤ 중공 및 기타의 비가맹국을 국제연합에 가입시켜 국제연합구성의 보편성을 구현할것.

⑥ 총회의 의사절차의 효율을 높힐것.

⑦ 국제연합 사무총장의 권능을 확대하여 사무국의 효율을 높힐것.

70년대는 「제2차유엔개발년대」이자 「군축의 년대」로 설정되어 있어 우주개발·해저개발, 남북문제해결, 전략무기제한등이 「잇슈」로서 대두될 것이다. 가맹국수는 1971년현재 127개국이나 분단국가일괄가입안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고 또한 신생국가가 더 생겨날 것이므로 70년대말까지는 가맹국수가 140개국전후가 될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UN내부의 세력구조와 투표류형도 더욱 미묘복잡해지고 아아국가군 및 후진국가군(남방계)의 단합된 세력이 상대적으로 커질것으로 보인다. 70년대중에는 중공의 UN대표권문제도 해결될것인데 그때에는 세계적세력구조를 반영하여 안전보장이사회상임이사국구성이 개편되어 현재의 5대상임이사국인 미·소·영·불·중(국부) 가운데서

영·불·중이 탈락하고 그대신 중공이 들어가 미·소·중공 3대국으로 구성된다던지 영·불·중·일·이·인·부라질 통일아랍공화국등이 교호로 준상임이사국이 된다던지 할지도 모른다.

Ⅱ. 세 계 정 세

1. 미국의 세계정책

「키신저」대통령특별보좌관은 70년대의 미국의 외교임무에 관한 전망적견해가운데서 다음 제점을 강조하였는데 이들은 70년대를 통해 미국•국방•외교정책의 토대를 이루어 나갈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1) 정치적다극화로 인하여 미국은 그 의도하는 바를 타국에 강요할수 없게 되었으며 따라서 미국이 당면한 최대의 난제는 복수화된 세계의 창조력을 자유로히 발휘시키면서 세계적다극화의 기반위에 새로운 국제질서를 확립해 나간다는 것이다.

(2) 앞으로 미국은 동맹정책의 발현양식을 달리해 나가야 하며 여기에 있어서는 종래와 같이 상대방의 전면적인 정복을 의미하는 절대적안전보장의 원리에 입각하지 말고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성격을 띠운 국제협정에 의거한 상대적안전보장을 목표로 해 나가야 한다. 향후10년간에 있어 미국의 기여는 철학적이어야 한다. 앞으로 미국은 단결 그 자체만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단결과 자율성을 양립시킬수 있는 공통된 관념과 새로운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물리적인 세력균형보다 도의적인 세계균형, 창조적인 세계질서와 평화에 더 관심을 쏟아야 한다. 미국은 세계각지역이 지역별로 주요한 책임을 인수해 나가는 것을 지원함과 아울러 각지역내부운영에 관여하기 보다는 국제질서의 전체적테두리에 더 큰 관심을 쏟아나가야 한다.

(3) 핵시대에 있어서는 어느정도 적과의 협조가 강요되고 있으며 갈등이 있을때에도 피해를 입지않도록 한계가 그어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공산측의 평화공존정책을 화해노력으로 속단하여 이에 말려 들어가서는 안된다.

이상을 요컨데 앞으로 미국의 세계정책은 그대전제로서 자유세계의 결속을 여전히 존중하기는 하지만 핵무기효용도의 한계성과 세계의 정치적다원화로 말미암아 미국이 앞으로 무력위주로 국제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말고 지적 창의성을 갖고 균형잡힌 외교정책을 추구하는 가운데 새로운 세계질서를 창조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닉슨」 대통령은 70년대 미국의 세계정책을 70년2월18일 국회에서 발표한 외교정책교서인 「평화를 위한 새전략」가운데서 총괄적으로 천명하였는데 그 기본원측과 방향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국제관계에 있어 전후의 시기는 이미 끝났다. 70년대의 오늘날 미국인은 위기의 원인을 구명하고 긴 안목에서 지속성있는 평화의 기틀이 될 국제관계를 이룩하는데 이바지 할수 있는 기회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오늘의 평화는 창의성과 탄력성있는 과정이어야 하며 이를 향해 현실주의적 접근을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첫째 우방제국과 계속 협동관계를 유지강화해 나갈것이다. 세계평화라는 대의는 우리에게 공약을 계속 지키도록 요구할 것이며 또한 우리는 공약을 계속지켜 나갈 것이나 여기에 있어서는 미국자체의 국가이익에 대한 현실적인 평가에 입각할것이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에게 책임을 다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미국이 책임으로 부터 후퇴

하려는 것이 아니라 책임의 분담을 뜻하는 것이다.

둘째 미국이나 미국우방들의 기본적 이익을 무력으로 위협하는 자들이 있는한 미국은 강력한 힘을 갖추어나간다. 한편 우리자신의 힘은 다른나라의 힘과의 상관관계에서만 중요성을 갖는다는 점에도 유의하여 다른나라들과 협조적으로 군비통제를 하는데도 우선적배려를 한다.

세째 긴장완화와 평화를 위해 공산제국과도 협상할 용의가 있다. 미국은 동서관계를 개선하고 모든 나라의 안전을 증진하기 위해 대소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모든 가능한 기회를 동맹국과의 협조하에 계속 탐구해 나갈 것이다. 어떠한 나라도 미국의 영원한 적이 될 필요는 없다.

「닉슨•독트린」에 보조를 마추어 미국의 군사전략도 현실적인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다. 즉 기왕의 「유연반격전략」은 지양되는 정치적목적과 군사적대가간의 함수관계에서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새 전략이 설정된 것이다. 그리하여 60년대의 2.5 전략은 1.5 전략으로 전환되었다. 종래 2.5 전략하에서는 ① 통상병력으로 NATO의 전위방위에 당하며 ② 중공의 전면공세로 부터 한국 혹은 동남아를 방위하고 ③ 나아가서 소규모의 긴급작전을 동시로 수행할 능력을 갖추어두었다. 그러던 것이 1.5 전략하에서는 미국이 평시에 구주 또는 아시아에서의 공산측의 대규모적인 공격에 대처함과 동시에 아시아에서 중공이외의 나라로 부터의 위협에 대해 동맹국을 지원하고 기타지역의 긴급사태에도 대처하기에 알맞는 병력을 유지해나가게

된다. 결국 미군병력을 보다 소규모로 그러나 보다 기동이 높고 보다 효율적인 것으로 만드러 나가자는 것이며 이에 따라 미국방비를 삭감하고 통상병력을 감축하고 해외주둔군을 철수 내지 감축해 나가려는 것이다. 그 반면에 있어 ABN을 비롯한 전략병력과 그 연구개발비만큼은 증가시키고 있는 것이 주목된다.

2. 미소관계

60년대에 핵포화상태에 들어가 군사면에서 일종의 힘의 균형을 이룩한 이래 미소는 전면적전쟁은 벌이지 못하면서도 양자간의 이해의 대립으로 상호경쟁의 강도는 더 늘어나 왔다. 즉 미소양초대국은 공존체제를 유지하면서 이념대립을 주축으로 하는 냉전체제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상호접근해 왔지만 각기의 국가이익, 국내사정 그리고 국제정세의 변동에 따라 때로는 협조기운이 부각되기도 하고 때로는 대립면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왔던 것이다.

그러던 것이 70년에 들어와서 부터는 미국이 「닉슨·독트린」하에 국제긴장완화에 노력해 왔으며 소련도 현상유지의 노선으로 부터 서방측의 중서화해노력에 호응하는 적극적태도로 전환하였기 때문에 미소간의 공존체제는 더욱 공고해지고 협조관계가 증진되었다. 핵확산금지조약의 발효, 전략무기제한회담의 본격화, 미소간의 우주협정조인, 중동휴전의 성립, 구주의 긴장완화촉진등이 이를 실증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미소의 접근이 가장 크게 「클로즈·업」된 지역이

구주이다. 70년8월에 소련과 서독간에 상호불가침조약이 조인된 것은 동서관계에 획기적전환을 가져온 일이었다. 구주의 긴장완화와 구주방위에 대한 자체부담의 삭감을 희구하는 미국의 정책방향이 서독의 동구유화정책과 근본적으로 상치되고 있지는 않다는 점이 독·소 불가침조약 실현을 뒷받침하였던 것이다. 반면에 소련이 구주의 현상을 동결시킨다는 전제에서 동서구간의 화해를 실현시키려 든것은 힘에 의한 현상의 타개가 불가능해 진데다가 2차대전의 전후처리과정에서 획득한 동구공산권의 유지가 동구공산제국의 자주화 및 자유화경향 증대에 따라 점차 힘겨워지고 있다는 정세추이에 기인하는 것이다. 또한 소련이 내세우고 있는 아주안보구상도 대국적으로는 아주에서도 현상을 고정화시키려는 의도의 표현이라 볼수 있는데 이같이 소련이 구주와 아시아에서 현상유지를 지향하는 정책적방향을 시사하고 나온 것은 동국의 양지역에서의 팽창주의적 노력이 그 역사적 한계에 도달하였고 이제는 자체의 세력권유지조차 곤란을 느끼게 되었기 때문인것 같다.

그러면서도 때로는 미국과 경쟁적인 측면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 실예로 70년중만 하여도 소련은 전구주안보회의를 추진해 가면서 서독과 서백림간의 교통을 방해하여 동서간의 긴장을 고조시키기도 하였고 미국의 중동평화해결안을 수락하면서도 무력증강을 동결키로 한 스에스운하지대에 지대공미사일을 이동시켜 중동문제의 해결을 곤란케 한바 있었다. 소련이 대외정책면에서 이같이 강온 이중성을 나타내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현상유지를 위해 평화공존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면서도 이념적으로는 공산권내의 주도적입장을 수호해 나가야 한다는 이중적처지때문인 것이다. 다시 말해서 사회주의혁명의 조국으로 자처하고 있는 소련으로서는 현상타파를 부르짖고 소련의 혁명성에 도전하고 있는 중공과의 힘겨운 공산권내 주도권경쟁을 감안, 미국과의 지나치게 노골적인 평화공존은 주저하지 않을 수 없는 측면도 있는 것이다.

앞으로 70년대를 통해서 미소양국은 현재까지의 추세를 이어받아 동서관계재조정 내지 개선에 보다 신축성 있는 태도를 보여 나갈 것이다. 「닉슨•독트린」은 더욱 현실화되어 나가고 「브레즈네프•독트린」은 더욱 현실적위력을 상실해 가는 가운데 미소 공히 국제정치다원화의 현실을 수락하고 새로운 국제질서의 창설에 공동으로 기여해 나가지 않을수 없을 것이다. 다만 여기에 있어서는 미•소의 중공과의 관계가 관건이 되겠는데 중•소의 재접근은 미국의 경계를 불러 일으키고 미•중공의 접근은 소련의 시의를 불러 일으킨다는 점에서 이들간에는 미묘한 삼각관계가 존재하는데 상호견제의 다각적세력균형을 이루는 방향으로 나갈 것이 요망되고 있다.

70년대를 통하여 소련은 구주에서 계속 전구주안보회의의 개최를 추진하고 동서구간의 관계정상화가 실현된 기틀위에서 구주문제에 대한 발언권을 확립해나가려 할 것이다. 또한 중동에서 소련은 아랍권에 구축해 놓은 영향력을 통하여 이 지역에 부식되어 있는 서방측의 석유이권을 잠식해 가며 동시에 중동지역의 기독

해군기지를 활용하여 지중해 및 인도양에 해군함대를 진출시킬 것이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이스라엘과 아랍간 대립의 장기적현상유지에 편승하려는 것이지 미국과의 직접적인 충돌도 불사하는 급격한 현상타파를 의도하는데 연유한 것은 아닐것이다.

3. 기타의 동향(기타열강, 지역기구, 중립주의세력)

70년대를 통하여 미소양초대국이외에 영국·불란서·서독·중공·일본·인도등이 강대국으로 등장하여 국제정치상 영향력을 증대시키므로써 세계적권력구조가 다극체계위에 재편성되어 새로운 국제질서가 형성될 것이다.

구주, 미주, 아시아, 태평양, 아중동, 동구공산권, 아시아공산권등 주요지역별로 지역협력기구가 발전, 통합되어 국제긴장을 완화하고 궁극적으로 세계평화와 보편적 국제협조에 기여하려는 노력을 가중해 나갈것이다.

구주에서는 모든 정세가 안정되고 그 대신 국제적관심이 아시아 태평양지역으로 보다 많이 쏠리게 될 것인데 이지역은 착잡한 세력관계속에 화전의 계기가 엉크러진 가운데 새로운 지역질서를 점진적으로 형성해 나갈 것이다.

한편 이러한 추세속에 비동맹중립주의제국은 단일세력으로서의 존재가치와 존립명분을 재검토하지 않을수 없게 되고 기존의 지역질서난에 각기 분산적으로 흡수되어 지역단위로 완충역할을 하거나 지역적 평화와 안전을 국제적으로 보장케 하는데 앞장서려 할지도 모른다.

Ⅲ. 아시아 • 태평양정세

1. 전반적추세

구주에서 정세가 전반적으로 안정을 지향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는 착잡한 세력관계와 긴장상태가 온존되는 가운데 지역내의 권력구조가 재편성되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있어 유념할 것은 아시아•태평양지역이 구미제국과는 다른 특수상황으로 말미암아 구미의 세력균형유형이나 지역기구류형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고 내부운동의 복잡성과 내부작용의 강열성으로 말미암아 아시아•태평양국면에서의 세력관계는 기계적인 세력균형의 도식에서 볼것이 아니라 변천하는 유동적인 것으로 파악하여 자국마다 능동적인 대응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70 년대를 통하여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전은 각국의 안보태세와 미•소•중공•일본과 같은 강대국 및 대한민국•태국•인도•호주와 같은 상위중진국을 주축으로 한 다각적세력균형에 의존하게 될것이다. 그중 일차적중추가 될 미•소•중공간의 삼극체제 또는 이에 일본까지 추가한 사극체제는 우호•중립•적대관계간에 매우 다양한 세력결합상황을 상정케 하는 만큼 허허실실의 유동성을 보여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서 특히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다.

(1) 미•소•중공 삼대국간의 관계 또는 미•소•중공•일본

4대국간의 관계가 양극체제의 변형이 될지 또는 3극 내지 4극 체제로서의 독자성을 가지게 될지 그리고 이것이 아시아·태평양권내에서의 세력관계에 그칠 것인지 또는 세계적규모의 세력구조까지를 변혁시킬 것인지 다시말해서 전후체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인지는 앞으로의 사태추위에 달려 있다.

그런데 모든 추세에 비추어 볼때 아시아·태평양지역에는 독자적인 4극체제가 형성되고 이것이 세계적규모의 세력구조까지를 변혁시켜 새로운 국제질서의 창조에 관여하게 될 공산이 크다.

(2) 미소양국은 기존체제의 영도국으로서 현상유지가 그들의 기본이익과 합치된다.

그러나 신흥세력으로서의 중공의 입장에서 볼때는 현상타파가 그의 기본이익이 된다는 점에서 미소와 중공간에는 대립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 중공이 남방진출을 단념하게 될때 그 대안으로서 북방팽창을 시도하게 될 가능성이 있고 소련이 그나름의 아주집단안보구상을 내세운데 나타난 바와 같이 아주에서 대중공압제책을 취하고 있는 것과 구주해빙무드조성에 이니시아티브를 취하고 있는 것과의 사이에는 상호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미국으로서는 세력균형의 파괴에서 3자간의 어떠한 결합상태하에서든 핵전쟁에 말려들어가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소련이나 중공의 어느 한편과도 결정적으로 영합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고 보고 있는것 같다. 한편 미일안보체제하에 안전과 번영을 누려온 일본은 4극체제안에서 독자적역할을 취하면서 다른 3대국과의 균형잡힌 국제관계를 통해 국가적실리를

추구해 나갈것으로 보인다.

2. 미 국

닉슨·독트린은 1969년 7월에 「괌」도에서 처음으로 천명된 이래 현실면에 적용한 결과와 반응을 되살피며 그 실질을 조정, 보완해 왔는데 앞으로 70년대를 통하여 더욱 탄력성과 성숙미를 가미하는 가운데 계속 적용되어 나갈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닉슨·독트린」하의 미국의 새아시아정책의 핵심적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미국은 태평양국가이기도 한 만큼 아시아제국과의 조약상의 기존공약은 존중해 나가되 미국의 국가이익에 비추어 대외공약의 비중에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아시아지역분쟁에의 군사적개입은 선택적으로 한다. 그러나 아시아우방들이 강대국이나 핵보유국의 위협을 받을 경우에 미국은 개입할 것이다. ② 아시아에서의 미국의 역할을 감소시키는 대신 지역내의 토착국가가 내란이나 외부로 부터의 간접침략에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자주국방태세를 강화해 나갈 것을 기대한다. 그리고 역내제국은 장기적으로 집단안보체제를 형성해 나갈수도 있을 것이다. ③ 「대결아닌 협상」으로 공산국가와의 관계를 개선하고 역내 주요국가와의 사이에 다각적 세력균형을 추구한다. ④ 미국은 자조의 의사가 있는 아시아제국의 자주적행동을 대등한 동료국으로서 측면지원해 나간다.

이상은 일반원칙이며 미국은 아시아에서 당면하는 개개의 특정문제에 대하여 신중한 사려와 면밀한 개별적 세부정책으로 임해야

한다는 점과 앞으로 미국아시아정책의 성패는 아시아의 지역협력을 측면지원하는등 하여 아시아우방과 수호관계를 강화해 나가는데 있을뿐 아니라 미국과 중공 및 소련과의 관계가 여하히 되어 나가느냐에도 달려 있는데 미국으로서는 다른 열강도 미국과 똑같은 정신에서 「헤게모니」추구를 말아주기 바란다는 점을 강조한바 있다. 다시 말해서 미국은 소련•중공의 어느 일방과도 결정적으로 밀착하지 않은 가운데 다각적세력균형을 유지하고 나아가 미•일•소•중공의 4대국이 교호적으로 긴장을 완화함으로써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안전을 유지하고 그러는 가운데 이 지역에서의 미국의 부담을 경감시켜 나가려는 것인데 이러한 정책로선은 70년대를 통해 지속되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본격적 실천단계에 들어간 미국의 새 아시아정책은 71년현재까지 월남전의 월남화와 인도지나적규모에서의 종전 및 문제해결추구, 미일협력체제의 강화, 대중공접근의 진행, 한국방위의 한국화등으로 구체화되어 왔다. 이같이 지금까지 역사화된 실적과 미국행정부의 그후의 일련의 정책성명, 미국내정사정 및 국제정세의 전반적추세에 비추어 볼때 「닉슨•독트린」하의 미국의 새 아시아정책의 본질은 신국제주의니 신고립주의니 하는 일면성만을 갖고 있지 않는 매우 신축성과 탄력성이 있는 것이고 미래의 새지역질서를 창조하려는 원대한 비전까지 갖춘 것이나 그 심층부에서 살펴볼때 미국이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추구하는 기본이익에는 변함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는 어쨌든 이와같은 미국아시아정책의

의관적변화나 전략적전환은 닉슨행정부나 공화당정권시에만 끝일 것이 아니라 앞으로 10년, 20년이란 한시기동안은 일관성을 갖고 지속되어 나갈 것으로 보여 진다.

「닉슨」대통령이 71년 2월25일 미국회에서 발표한 「1970년대의 미국외교정책-평화의 구축」이라는 제목의 외교교서의 「동아 및 태평양지역」에 관한 부문중 다음의 개소는 70년대를 통해 미국이 이지역에서 전개해 나갈 정책방향을 시사하는 것으로서 함축하는바 크다. 「아시아• 태평양지역은 안정된 세계평화체제를 창조하는 과업의 핵심이 되고 있다.••••오늘날 새아시아가 출현하고 있다. 「닉슨•독트린」은 전후시기의 마지막 흔적이 사라지게 되는 한시대에 대처하여 미국의 역할을 조정하는 시발에 불과하다. 세계제2차대전의 낡은 적대관계는 사라졌거나 또는 사라지고 있다. 또한 전후시대의 낡은 종속관계도 그러하다. 오는 10년대에는 이두가지의 장송을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아시아국가들은 강대해지고 있다. 이국가들은 그지역의 국제적구조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더욱 큰 역할을 맡을수 있고 또한 그렇게 할 결의를 갖고 있다. 이국가들은 합력하여 지역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로써 그들보다 강대한 국가들의 정책으로 부터 더욱 더 독립하고 따라서 그들 강대국의 정책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칠것이다.」

「미래의 동아체제는 아직 분명치 않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한나라만의 지배적영향을 받지 않으리라는 것은 분명하다. 오히려 그 체제는 두개의 지주 즉 지역적집단으로서 행동하는

아시아국가들의 집단적이익과 이 지역에 관련이 있는 4대국의 정책에 토대를 둘 것이다. 다음 10년대에는 각국이 다른 나라들의 합법적이익에 맞추어 그 정책을 조정해야 한다. 이미 시작된 그러한 과정으로 부터 태평양지역에는 새로운 국제질서가 창조되고 있다. 미래를 위한 도전은 그 체제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일이다.」

「아시아지역주의의 범위와 효율성은 이제 상당한 수준에 도달하였다.。。。。아시아에서 지역주의가 활기를 띠우고 있다는 것은 이지역의 미래의 정치구조에서 아시아의 약소국들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한가지 보장이기도 하다.」

외
6
유

<미지상군의 감축>

비미국화정책에 따라 미국은 70년대를 통하여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도 해외주둔미군의 감축 내지 철수를 계속함으로써 국제긴장의 완화를 촉진할 것이다.

월남으로 부터는 71년 5월현재로 26만 5,500명을 철수시켜 28만 4,000명이 잔류하고 있으나 72년말의 미국대통령선거시까지는 잔류병력도 그 대부분을 철수시키고 그이후는 극소병력만을 월남문제의 완전해결시까지 상징적으로 잔류시킬것이다. 한국에서도 6만 4,000명의 주한미군중 2만명이 이미 71년 6월까지 철수하였고 한국군현대화의 진전에 따라 그 병력을 더욱 감축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주일미군도 점진적으로 철수시켜가고 있으며 72년에는 사또오, 닉슨공동성명에 따라 오끼나와에 대한 시정권을 일본에 반환

하기로 되어 있는데 다만 오끼나와에 시설한 미군기지 만큼은 일본 본토의 미군기지와 마찬가지로 일본정부와의 협의하에 계속 사용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그밖에 자유중국•비율빈 및 태국으로 부터도 주둔미군을 이미 일부 감축하였거나 앞으로 감축 또는 철수시킬 계획으로 있다.

이와 아울러 미국은 「괌」도와 「마리아나」군도를 연한 선을 서태평양방위의 일선으로 삼고 「하와이」에 있는 미태평양군총사령부를 중심으로 태평양기동전략태세를 견지해 나가고 방위지원공약을 한 나라에 대해서는 해공군지원을 위주로 해 나갈것이다. 그리고 기존의 이변적 및 다변적상호안보조약을 내부적으로 조정하여 아시아•태평양연합방위체제를 정비해 나갈것이다. 이와 같은 군사적 안보조치와 더불어 대공정치협상등 비군사적노력을 통한 전쟁억지 및 긴장완화에 더욱 주력해 나갈것이다.

<미•중공접근>

미국은 「대결아닌 협상」을 통해 중공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중공을 세계공동사회로 이끌어 냄으로써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안정과 세계평화에 기여하려는 정책을 이미 행동에 옮겼거니와 70년대 및 그 이후를 통해 이의 관철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위해 미국으로서는 ① 바르샤와 미•중공회담을 통한 중공의 중의 타진 ② 중공주변의 군사적포위망의 완화

③ 긴장완화의 기수로서의 일본이 미국을 대신해서 중공과 절충하는 일이라는 단계를 거쳐 나갈것으로 보인다. 70년초에 미국회에 게기된 중공문제에 관한 결의안은 미국이 앞으로 대중공정책에 있어 (1) 무역 및 문화의 협력확대를 통해 양국간의 긴장완화를 도모할 것. (2) 중공의 UN 가입을 반대하지 않는 반면 자유중국의 UN 의석을 유지할것을 건의하였다.

그후 중공을 승인하는 서방자유국가의 증대, 25차 UN총회에서의 중공대표권문제표결에 있어서의 중공지지표단순과반수획득 등 정세변화에 따라 71년 4월의 이른바 탁구외교를 전기로 미중공관계는 급속한 상호접근과 개선의 징조를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의 전망은 다음과 같이 대체로 희망적이다.

(1) 현재 중단중인 바르샤와에서의 미•중공대사급회의는 71.2년의 적절한 시기에 재개되어 본격적 미중공협상에의 길을 열을 것이다.

(2) 대중공해운 및 통상제한조치의 해제에 이어 비전략물자면에서의 교역을 증진해나가고 궁극적으로는 미중공통상이 정상화될 것이다.

(3) 문화인•언론인•체육인의 교류로 부터 시작하여 관광자에게 문호를 개방하고 양국간에 지도층의 교환방문까지 행하게 될 것이다.

(4) 미국으로서는 「하나의 중국, 하나의 대만」 「일민족 2국가」의 이중대표제방식, 또는 「분단국동시가입방식」이면 간에 자유중국

의 의석은 확보하면서 동시에 중공도 UN에 대표시키는 방안을 추진해 나가려하고 있는데 중공으로서는 국부를 축출하고 중공만이 단독으로 UN의석을 차지할것을 의도하고 있는 만큼 70년대 초반기를 통해 중공을 둘러싼 UN외교와 아시아열강외교는 복잡성을 띠울 것으로 예상된다.

⑤ 중공으로서는 UN외교, 대미외교, 대일외교등과 관련해서 인지문제 및 기타의 중공주변지역문제에 관해서 관계열강과 흥정하려 나설 것이므로 미국으로서는 중공주변에 사실상의 세력권을 획정하는 가운데 안정된 새 지역질서의 형성을 모색해 나갈 것이다.

3. 일 본

일본은 60년대에 이룩한 세계제3위의 경제력을 배경으로 1970년대를 통하여 국제사회 그 중에서도 특히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보다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나갈 것이다. 60년대 중엽의 월남전 격화이후 일본경제가 동남아에 적극적으로 진출한데 이어 69년11월의 미일공동성명을 계기로 일본은 동북아에 대한 정치적 관심도 증대시키게 되었는데 이는 중공의 경계심을 불러 일으켜 중공으로하여금 일본군국주의의 부활을 비난케 하였는가 하면 일부 아시아제국의 반발을 일으켜 비율빈의 로물로외상으로하여금 일본이 아시아민족과 함께 살려는가 아니면 세계공업선진국으로서 아시아에서 초연히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려는가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비판케 한바 있었다.

「일본은 경제대국은 될지언정 군사대국은 절대로 되지 않는다」고 사또오수상은 70년의 제25차 UN총회연설에서 강조하였으나 70년 10월에 발표된 이른바 방위백서와 제4차방위력정비계획등은 일본 자신은 끝내 평화적자세를 유지하려 하고 있지만 오늘의 국제사회가 「힘의 지배」원리하에 움직이고 있는 이상 자체방위력의 강화는 부득기할 뿐아니라 당연한 권리와 의무라고 강조하고 있다.

제4차방위계획은 72년부터 76년까지 5년간에 방위지출로서 총191억불 계상하고 있는데 이는 아시아에서 핵보유국인 중공에 다음가는 방대한 국방예산이다.

제9조 무력방기조항을 폐지하는 방향으로의 일본헌법의 개정은 70년대를 통해 줄곧 거론될 것이나 끝내 실현은 보지못할 것이다.

그러면서도 일본의 군사력만큼은 계속 증강되어 나갈 것이다. 그러는 동안 70년대초기에는 경제대국으로서의 실리만을 추구하고 정치, 군사면의 역할은 맡으려 하지 않는 제스처를 취하였다가 점차 「닉슨•독트린」하의 미국이 기대하는것 처럼 아시아에서 명실공히 미국의 대체세력으로서 등장하여 경제, 정치, 군사의 3개분야에서 보다큰 역할을 하고 보다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것이다. 이와 아울러 UN안보이사회 상임 또는 준상임이사국이 되려는 운동을 더욱 강화해나갈것이며 그렇게될 공산도 있다.

그러나 또한편으로는 70년대 중엽에 있을지도 모르는 일본정계의 개편여하에 따라서는 연립내각이 성립되어 종전의 외교정책로선을 전환하고 중도적입장에서 정경분리의 이중외교를 위주로 하는 가운데

아시아·태평양일반안보체제의 방향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새세력관계와 새국제질서를 모색해 나갈지도 모른다.

미·소·중공등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열강은 70년대 후반기에 이르러 일본이 정치적·군사적 강대국으로서 너무 비대해질 경우에 이를 상호견제하고 전체적으로 세력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집단조치로서 아시아·태평양일반안보회의같은 것을 소집하여 상호불가침조약이나 아시아·태평양비핵무장지대설치로 일반안보체제를 형성하려 들지도 모른다.

<일·중공접근>

국제적 「무드」의 변화에 따라 70년부터 대중공접근을 시도하게 된 일본은 「주은래 4원칙」과 군국주의부활비난등의 욕을 당하면서도 각서무역관계를 연장해왔는데 미중공접근에 힘을 얻어 일본은 앞으로 「중화인민공화국」정부와 정부간 접촉을 취하며 민간무역을 확대하며 기자·재외인등 교류를 증대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중공UN대표권문제에 관해서는 중공의 UN가입을 지지하되 자유중국의 의석은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하나의 중국·두개의 정권」이라는 이중대표제의 방향으로 사태를 전진시켜 나갈것으로 예상된다. 기본적으로 미국의 대중공로선을 뒤따르지 미국을 앞질러 독수하려 들지는 않을 것이다.

4. 중 공

중공은 문화혁명기간중 취해오던 강경외교로선을 지양하고 69년 4월의 구전대회를 전기로 유연한 대외로선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온 결과 중공승인국수가 증대되고 UN중공대표권문제표결상황이 중공에게 호전되는등 국제적지위의 향상을 보았다. 그러나 본질에 있어서는 정통국제공산주의전략을 방기치 않고 미소양초대국을 적절히 대항·조종·견제하면서 미소에 의한 이원적 세계지도체제를 타파하고 나아가 국제적 제1중간지대와 국제적제2중간지대에도 적극 침투해 들어가고 마지막으로 미제를 타도한 후 중공을 중심으로 세계공산혁명을 완수하려하고 있다.

특히 아시아에서는 미일을 이간하고 일본을 내부분열시켜 이를 궁극적으로 중립화하려는 전략적포석을 지속해 나갈것으로 보인다.

군사능력면에서 볼때 중공은 72년까지에 중거리탄두탄(IRBM)을 실전화시키고 늦어도 75년까지는 대륙간탄두탄(ICBM)을 실전화하게 될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중공으로서는 이러한 무기를 행사해서 핵전쟁의 위험을 무릅쓰기 보다는 이를 배경으로하여 재래식국지전형인 「민족해방전쟁」의 수행을 고무하거나 세계농촌전략을 추진해 나가거나 중공주변에서 그의 정치목적을 달성하는데 유리하게 작용할 심리적도구로 원용해 나갈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는 북경-평양-하노이-푸놈펜을 연하는 「아시아민족해방통일전선」이라는 「반제추축」을 중심으로 동북아와 동남아를 연한 중공주변일대에서 특히 한반도, 대만해협 및 「마랏카」해협등지에서 그들의 이른바 「혁명적계릴라」

전을 배후지원하거나 재래식국지전을 직접 도발해 올지도 모른다.

그러나 국제긴장의 완화와 다각적세력균형을 희구하는 국제적압력 아래 중공이 무력혁명전략을 지양하고 월남전종결을 받아디리고 월남종전후의 동남아지역협력과 동남아중립화국제보장을 위한 관계제국간의 국제회의소집에 동조해온다던지 또는 중공주변전지역에 걸친 세력관계재편성과 다각적 세력균형체제의 형성을 위해 아시아・태평양비핵무장지대의 설치 또는 상호불가침조약의 체결을 제의하고 나올 가능성이 전혀 없지도 않다.

UN대표권문제에 관하여 중공자체로서는 그들이 주장하는대로 대만문제까지 해결한 기초위에 중공정권만이 전중국을 대표하는 유일의 정권으로서 UN에 가입되고 UN안보이사회의 의석을 차지한다는 방식에 따를때에 한해서 UN에 가입하려 들을것이기 때문에 이문제의 해결에는 아직도 간여곡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어쨌든 73.4년까지에는 이문제가 타결되어 중공의 세계공동사회참여가 실현될 것으로 전망된다.

5. 소 련

한때 국경문제를 위요하고 무력충돌의 가능성마저 제기시킬 정도로 악화되었던 중소분쟁은 69년 10월부터의 국경협상의 개시, 71년 1월부터의 대사교환재개등으로 소강상태를 회복하였는데 중소국경문제는 평화적으로 전면해결될때까지 현상을 유지해 나갈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구전대회이후의 중공의 외교공세재개에 따라 중소양국은

전세계적규모로 외교전을 재개해 나갈것으로 보이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도 치열한 외교공방전이 전개될 것으로 관망된다.

소련은 이미 69년5월이래 수차에 걸쳐 아시아집단안보체제구상을 제창해 왔는데 그목적은 주로 핵보유국으로 성장하고 팽창주의적 경향을 지니고 있는 중공을 봉쇄하고 나아가 일본과 인도 및 기타의 국가가 중공과 제휴하여 소련에 맞서지 못하게 하는 한편 핵무기에 대한 욕망을 포기하고 안전을 도모하도록 아시아국가를 설득하려는데 있어 왔다. 이구상은 아시아국가들로 부터 별반 고무적인 반응을 받지못하였고 따라서 가까운 장래에 실현될 가능성은 없기는 하나 소련으로서는 앞으로도 기회있을 때마다 이러한 구상을 되푸리하여 소련이 아시아대륙에 영향을 주는 모든 문제에 개입할수 있는 아시아국가라는 것을 모든 아시아국가에게 부각시키도록 아시아외교를 계속강화해 나갈것이다.

1950년2월에 체결된 「중소친선·상호원조조약」은 30년의 유효기간을 가진 것이며 아직 공식적으로는 파기되지 않았으나 그 실효성은 의문에 싸여져 있다. 70년대를 통해 중소완전화해의 전망은 희박하고 중공의 UN가입과 안보이상임이사국피선으로 세계적권력구조가 적어도 삼극화되어 나갈것으로 보인다. 소련은 영토문제와의 관련에서도 자유중국의 장래에 대해서 침묵을 지켜 온만큼 중공의 UN대표권문제에 있어서는 그조건을 싸고 미묘한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소련은 해군의 인도양진출과 더불어 아시아 많은 자유국가와

의 외교적 · 경제적관계수립에 노력해 왔는데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을 가중해 나갈것이다. 특히 일본과 인도를 중공에 대한 견제세력으로 삼으려고 이들에게 의식적으로 접근해오고 있으며 그중 일본에 대해서는 미일제휴를 약화시키고 일본이 핵무장을 하지않고 일본이 아스팍에서 주도역할을 주도역할을 하지않고 일본이 중공과 접근, 협조않기를 바라고 있다. 소련이 「시베리아」와 소련극동지방의 개발에 일본의 참여를 권한것은 일본의 관심을 중공시장에서 돌리기 위한 것이었는데 앞으로도 일본을 각종수단으로 유혹하려 나설것이다. 미중공접근 및 일중공접근으로 아시아정세가 유동화됨에 소련으로서는 중공·월맹이간, 북괴 유인, 일본에 대한 압력강화등으로 나설 기미마저를 보이고 있다.

6. 월남전종결과 아시아·태평양지역협력체제의 강화

현시점의 모든 정세로 보아 월남전쟁은 점차 축전되어 자연소멸될 가능성이 크며 설혹 협상을 통해서 해결되는 방향을 걷는다할지라도 「파리」의 공식협상 또는 「제네바」회담과 같은 국제회의에서 타결되기 보다는 인지분쟁에 직접 관여되고 있는 모든 세력이 참가한 비밀협상에서 해결책이 찾아질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그시기는 늦어도 70년대전반기말 즉 1975년까지가 될것이다.

월남종전후는 미·일·소·중공 4대국간의 상호견제에 의한 다각적세력균형하에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평화가 유지될 것이며 아울러 이는 4대국의 정책과 이지역내제국의 집단이익의 조화위에 형성될

지역협력체제에 입각하여 이지역의 새로운 국제질서가 창조되어 나갈 것이다.

그중 동남아에 관해서 본다면 월남전후 이지역의 힘의 공백상태를 메꾸어 세력균형을 유지할 방도로서 관계국회의를 열어 인도지나연방(Confederation of Indochina)을 형성함과 아울러 동남아제국간의 지역협력체제를 동남아공동체(Southeast Asia Community)로 발전통합시켜 나가고 동남아전체의 중립화를 국제적으로 보장하려 시도해 나갈지도 모른다.

보다 광범하게 아시아태평양지역협력체제의 육성강화에 있어서는 ASPAC(아시아 태평양이사회)과 ASEAN(동남아국가연합)이 중심역할을 할것이나 특히 대한민국이 주도해온 ASPAC이 책원지자 원동력이 되어, ASPAC헌장을 제정하고 ASPAC사무총국을 설치하고 콜롬보계획, 아시아개발은행, 아시아생산성본부, SEATO, ANZUS 등 기존순지역기구를 총연합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종합적, 포괄적, 전일적 지역공동체인 아시아·태평양공동체(Asian-Pacific Community)로 확대·발전시켜 나가게 될것이다. 70년대전반기에 있어서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토착국가들이 주체적역할을 하고 또한 아시아·태평양지역집단안보를 위해 평화와 전쟁의 쌍방에 대비하는 신축성있는 자세에서 기존의 쌍무적·다변적 방위체제를 보전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보다 포괄적인 연합태세를 갖추어 나갈 것이다. 그러나 70년대 후반기에 이르러 그때까지엔 UN에 가입하였을 중공이 대외정책을 완화하여 진정 평화공존을 추구하게 된다면 다각적 협력체제로서의

아시아태평양공동체는 아시아공산권과의 Detente까지 추구하는 탄력성포용성을 가진 집단적 외교기반으로서 작용하고 나아가 아시아공산권까지를 포섭한 보다 광역의 아시아•태평양공동사회로 확연될 가능성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닐지 모른다. 그러나 설혹 이것이 현실화된다 할지라도 오랜 시일을 요할것이며 빨라도 1980 년대이후가 될것이다.

Ⅳ. 한반도주변정세

1. 미 국

<정치외교면>

미국은 70년대를 통하여 동북아지역의 세력균형유지에 큰 장애가 되지않는 범위내에서 종래의 대한정책 및 대동북아정책에 수정을 가하려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닉슨·독트린」을 한국의 특수성에 따라 신축성있게 적용해 나갈것인데 여기에 있어서는 72년으로 끝나는 현「닉슨」행정부하에서는 각종 대한공약을 계속 준수해 나갈 것이나 72년의 대통령선거의 결과 닉슨행정부가 계속 집권하던지 또는 민주당정권으로 교체되던지간에 73년이후는 대한공약을 일부 수정하여 대 한개입도를 더욱 감소시켜나갈 가능성도 전혀 없지는 않다.

70년4월 「바네트」씨는 「70년대에 있어 동부아시아의 상황은 지금처럼 동결된채로 남아 있지 않을 것인데 동북아에서 미국의 이익과 반대되는 사태발전이 일어나더라도 그사태가 전체적인 안정에 해를 끼치지 않는한은 참아야 한다」고 하였다. 사실 미국은 70년대를 통하여 동북아에서 일본으로 하여금 미국의 대행역할을 담당시켜 세력균형을 유지하는 가운데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억제하고 중공과도 공존해 나가려 할 것으로 보이나 불행히도 한반도에서 북괴의 오산으로 국지인 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호응하여 동사태에 개입하지 않을수 없을 것이다.

UN에서의 한국문제토의에 관해서는 미국이 70년대초에는 현재의 전략을 계속 견지할 것이나 점차 「두개의 분단국가론」으로 기우러져 73년전후부터 「분단국가일괄가입안」을 들고 나오거나 「남북한동시초청」 및 「남북한일괄UN가입」에 찬성하게 될지도 모른다. 다시말해서 물리적인 변화는 초래치 않고 「법적해석의 문제」에서 현실적후퇴를 할 전망이 없지 않다.

나아가 70년대후반기에 들어가서는 한국통일문제의 실질적해결을 위해 소·중공에 접근코 한국문제에 관한 국제회의의 소집을 주장하는데 까지 나설지도 모른다.

<군사·안보면>

70년대를 통하여 미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한미양국간의 군사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나 한반도에서의 긴장완화책의 일환으로서 주한미군을 종국에 가서는 사실상 완전 철수하게 될것이다. 즉 미군감축은 단계적으로 진행되어 71년까지에는 2만병력의 감축을 끝마치 4만명이 잔류하게 되고 「프리덤·볼트」작전을 통해 시험된 바와 같이 공수기동력의 증대로 북괴측의 게릴라-정규전 혼합전략에 대처할 태세를 확립한다.
이어 72년에 일만병력을 추가 감축하여 3만명이 잔류하되 북괴재침시에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미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하여 한국에 대한 미군출병력을 증가시킨다. 75년이후에는 주한미군을 완전철수시키고 UN군사령부만을 상징적으로 잔류시키게 될지도 모른다. 한편 국군장비현대화를 위한 군사원조는 70년대전반기를 통해

계속될 것이나 이는 북괴와의 군사적균형을 유지하는 가운데 북괴의 모험적인 전쟁도발을 압제하려는데 그 주안점이 있는 것이다.

<경제면>

종래의 경제원조를 삭감, 내지 정지하고 그 대신 차관형식으로 전환하거나 경제•기술협력조치를 강화시켜 나갈 것이다.

<한국통일문제와의 관련>

미국은 대한민국이 북괴와 대화하는것을 요구할 것이며 또한 비적성공산국가와의 교류를 배후에서 촉진하여 국제긴장의 완화를 더욱 촉구하려 할것이다.

한편 북괴는 71~75년까지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가 진행되는 동안 그의 중단을 필요케 하지 않을 정도로 대한민국에 대한 도발행위를 계속할 것이고 평화적통일제안에 대해서는 수락하기 어려운 여러가지 조건을 붙여 실질적으로 부정적반응을 계속 보여나갈 것이다. 그러나 75년부터 79년까지 미군완전철수후는 북괴측이 산발적도발행위와 정치•선전공세는 계속하면서도 그 태도에 제한된 융통성을 보이면서 국제적 문화•체육행사에의 동시참여를 모색하고 서신교류 및 문화인•언론인•체육인교류에 적극성을 보이고 UN동시초청안을 수락할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대한민국으로서는 자주국방을 위한 군사비의 증대가 부득기해 질것이다. 경제면에서는 미국의 경제원조정단이 우리나라 경제건설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대미의존을 지양한 자주적이고 건전한 경제계획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

필요해질 것이다.

2. 일 본

<정치외교면>

정경분리원칙하에 남북한과 공히 관계하며 교포북송을 계속할 것이다.

그러면서도 소·중공과 접촉하여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적 현상변경을 위해 거중조정역할을 하려 할것이며 UN에서의 한국문제토의에 있어서도 대한민국을 계속 지원하면서 미국의 전략과 공동보조를 취해 나갈 것이다.

<군사안보면>

일본의 독자적 군사력강화는 북괴에 대한 억제효과도 있겠지만 또한면에 있어서는 이에 대항하기 위한 공산측의 군사력증대를 자극할수도 있을 것이다.

한일안보협력의 구체적형태로는 (1) UN군일원으로의 참전 (2) 한일연합군의 편성 (3) 유사시의 병참지원과 해공지원 또는 (4) 군사적불관여와 군사외적영역에서의 간접지원의 네가지를 상정할 수 있는데 평시에는 (4)를 취하였다가 유사시에는 (3)의 노선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

75년이후 만약에 미일안보체제가 변질되어 더욱 유연화된다면 유사시 주일미군의 대한발전을 저해하게 될지도 모른다.

<경제면>

중공과의 관계로 인해 동북아시아의 국제경제체제가 어떠한 형태를 취해 나갈것인가에 따라서 한일경제관계도 많은 영향을 받을 것인데 일본으로서는 한일양국간의 무역격조를 시정하고 양국간의 경제•기술협력을 증진하려는 제스처만이라도 취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는 한국의 경제건설을 촉진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일본의 발언권을 강화시키게도 될것이기 때문이다.

<한국통일문제와의 관련>

현상유지 즉 분단의 고정화가 당분간 계속될 것이나 일본과 북괴의 접근을 통해 북괴의 자유화 촉진시킬 가능성도 없지 않다. 또한 아시아•태평양•국제체제안에서 증대되는 일본의 영향력과 거중조정역할로 한반도에서의 긴장완화와 한국통일문제의 평화적해결에의 전기를 마련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게 될지도 모른다. 한일안보협력과 경제협력도 그러한 대국적•장기적 전망에서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3. 한미일삼각협력체제

「닉슨•독트린」•미일공동성명 그리고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일기본조약 및 제협정등을 상호연결, 조화시키는 가운데 한미일 삼각협력체제를 내부조정하고 더욱 긴밀화해 나갈것이 70년대를 통해 필요해질 것이다.

미국은 궁극적으로는 미·소·중공·일본 4강대국간의 상호견제적 세력균형체제하에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평화를 확보할것을 구상하고 있다. 일본은 미일안보체제를 유지할 것을 기본정책으로 하면서도 70년대후반기에 이르러서의 정세변화에 따라서는 이를 아·태쌍가침조약 또는 아·태일반안보체제로 대치시킬 것을 고려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리고 일본은 한국안보를 위해 군사적방법으로 기여하기 보다는 정치·외교적방법으로 기여하려는데 더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한일양국간의 안보협력형태로서는 군장비의 보급과 수리 및 기술훈련의 선에 머무른다-다시 말해서 일본의 군수산업력과 군사기술을 한국안보에 원용한다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한미일삼국간에 기술적조정을 잘 할것이 긴장해지고 있다. 그리고 안보와 경제력은 직결되어 있는 만큼 한미일 3개국은 정부 및 민간의 양수준에 걸쳐 군사·경제면의 상호기여를 목적으로 하는 삼각협력체제를 더욱 강화해 나갈것이 요청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볼때 이는 우리의 안보 및 통일노력에 있어 핵심적배후기반이 되는 것이다.

이 한미일삼각협력체제는 나아가 보다 포괄적인 외각적 국제질서안에 편입될수 있다.

4. 소 련

<정치외교면>

소련은 동북아에 있어 중공을 견제하고, 북괴를 자기편으로 유인하고 일본과 공존하고 미국과 경쟁적으로 공존해 나갈것을 70년대를 통해 기본노선으로 삼아나갈 것이다.

중공과 재밀착한 북괴를 소련편으로 다시 유인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소련은 71년 7월 6일로서 만료되는 「소련과 북괴간의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을 제6조규정에 따라 향후 5년간 연장될것이 확실하다. 그리고 UN에서의 한국문제토의에 있어서는 북괴를 계속 지원하고 분단국일괄가입안을 추진하려 나설지도 모르나 경우에 따라서는 한국문제에 관한 국제회의의 소집을 제안하고 나올 가능성도 있다.

<군사·안보면>

소련역시 한반도에서의 분쟁으로 미국과 대결하는 전쟁에 말려들어가기를 원하지 않고 있으므로 북괴의 전쟁기도를 억제할 것을 기본으로 할 것이나 남북한간의 단독대결로 될일수 있을 경우에는 북괴를 군사적으로 간접지원할런지도 모른다. 한편 연해주-동해-태평양-지나해를 연하는 소련의 해군력 진출은 대한민국, 일본 및 중국을 자극할 수 도 있을것이다.

5. 중 공

<정치 외교면>

중공은 구전대회이후 대외적으로 강온양면로선을 취하고 있으나 적어도 중공과 북괴와의 관계에서 보는한 정통적혁명전략을 다같이 고수하는 가운데 혁명적·투쟁적단결로 양국간의 동맹관계를 더욱 굳혀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70년대중엽에 이르러 중공의 UN대표권문제가 해결되어 중공이 세계기구에서 국제정치문제에 직접 관여하게 된다면 UN에서의 한국문제토의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될것이다. 즉 UN에서 중공이 북괴를 지원하여 남북한동시초청안이나 남북한일괄 UN가입안을 들고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중공이 국제사회에 적응하여 순리적인 태도로 나올경우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한국통일문제해결에 긍정적영향력을 행사할수도 있을것이다.

북괴로서는 무력통일가능성이 희박해지고 중공으로 부터 UN을 통한 평화적통일을 종용받게 되면 여기에 있어서도 전략적으로 유리한 지보를 차지하려고 정치·외교공세를 적극화해 나갈것이다.

<군사면>

중공은 북괴와 미·일에 대한 혁명적공동투쟁 전선을 기일층 강화해 나가면서 북괴의 대한민국에 대한 군사적도발을 간접적으로 지원해 나갈것이다. 71년7월11일로 만료되는 「중공과 북괴간의

우호 • 협력 및 상호원조조약」은 향후 10년간 연장될것으로 확실시되나 제2의 한국전쟁이 북괴의 도발하였을 경우에 과연 중공이 첫번째 한국전쟁모양으로 군사적으로 직접 • 개입참전하게 될런지는 확실치 않다.

6. 북괴 • 중공 • 소간의 북방삼각동맹

중공과 소련 및 미국간에는 미묘한 삼극관계가 있으며 최근의 미중공접근도 쌍방이 다같이 소련에 대한 정치적 • 심리적 견제를 노리고 있는것이다. 이에 못지 않게 북괴와 중공 및 소련간의 이른바 북방삼각동맹의 내부관계도 상호유인의 착잡성을 로정시키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공산주의 기본전략면에서 이상 삼자가 본질적으로 일치되고 있다는 것은 국제적게릴라훈련음모에 있어서의 대합작으로 실증되고 있는 바와 같다. 그렇기는 하나 북괴가 대한민국을 재침하여 제2의 한국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중공과 소련이 연합하여 군사적으로 직접개입할지는 의심스러우며 기껏해야 무기장비를 지원하거나 정신적 • 심리적으로 성원하는데 그칠 것으로 생각된다.

7. 전반적상황과 한국통일문제와의 관련

70년대의 세계대세와 아시아 • 태평양정세의 전반적추세에 비추어 한반도주변에서도 미 • 소 • 중공 • 일본의 4대국간에 상호견제적 세력균형체제가 모색되어 나갈것이다.

그러는동안 한반도에서는 군사적균세의 대치상태하에 현상을 유지하면서 관계국간에 전쟁억제와 긴장완화를 위한 외교적노력이 전개될 것이다. 또한 중공의 UN대표권문제처리와 아울러 UN에서의 한국문제토의도 활발해질 것인데 70년대전반기에 있어서는 현테두리대로 한국문제토의가 계속되다가 후반기에 이르러서는 자동상정지양, 한국문제불토의거나 아니면 UN결의안에 따르는 한국통일문제해결, 새로운 국제회의를 통한 한국통일문제해결의 촉진간에 신국면으로 들어서게 될 것이다.

이마당에 있어 대한민국으로서는 민주평화통일에 유리한 국제적환경을 조성함과 아울러 통일에 대비하는 국내태세정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야 하는데 여기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일을 예상하여 충분히 대비해야 한다.

1971년이후 다음과 같은 비정치적국제행사에 남북한이 공동참여하도록 강요될 것이다. 세계탁구대회(1971. 일본 나고야), 아시아동계올림픽대회(1971, 일본삽뽀로), 세계올림픽대회(1972, 독일 뮌헨), 세계올림픽대회(1976, 미국시카고), 세계박람회, 국제학술회의, 국제예술대회등.

1970년대후반기에 이르러서는 주변강대국이 남북한간의 평화공존을 강요하게 되는 가운데 남북한이 간접적접촉을 시도하게 되어 서신왕래, 문화인, 언론인, 체육인교류가 이루어지고 비무장지대가 공용되고 남북한불가침조약체결과 상호군축이 논의됨에 이를지도 모른다. 그리고 북괴가 UN의 권위·권능을 인정함에 따라서는 남

북한대표동석하에 UN에서 통한문제가 구체적으로 론의되고 UN통한결의를 남북한이 다같이 수락함으로써 남북한이 직접 접촉하여 남북총선거를 준비하게 될지도 모른다.

이단계에 이르면 남북대표자회의가 개최되고 가족상봉을 위시하여 남북한공개교류가 이루어지고 남북한쌍가침조약하에 상호군축이 이루어지고 UN감시하의 남북총선거가 실시되어 국토통일을 완수하게 된다.

〔1971년5월현재〕

70년대 북괴 역량 전망

목 차

1. 북괴 권력구조의 전망 53

가. 김일성 독재체제 강화과정 53

나. 족벌정치체제의 구축 53

다. 권력구조의 전망 56

(1) 1971 ~ 1976 년간 56

(2) 1976 ~ 1980 년간 56

2. 북괴외교관계의 발전전망 58

가. 북괴를 위요한 국제정세전망 58

(1) 미·중·소 관계발전이 북괴에 미치는 영향 58

(2) 한미일관계가 북괴에 미치는 영향 59

나. 북괴의 대중소관계의 전망 60

(1) 북괴의 대중소관계현황 60

(2) 북괴의 대중소관계전망 60

다. 북괴의 대일관계전망 63

라. UN문제 64

(1) 북괴의 대 UN 태도 64

(2) 단기 (76 년까지) 전망 65

(3) 장기 (80 년까지) 전망 65

3. 북괴 경제전망 66

〔1〕 7 개년경제계획 66

외
1
유

가. 주요생산목표와 경과 ---------- 66

나. 개년경제계획의 실패요인 ---------- 68

〔Ⅱ〕 6개년경제계획 ---------- 69

가. 6개년경제계획의 기본방향 ---------- 69

나. 6개년경제계획의 전망 (71~76) ---------- 71

(1) 문제점 ---------- 71

(2) 6개년경제계획의 성패가능성 ---------- 72

다. 76년이후의 경제전망 ---------- 75

4. 사회문제 ---------- 77

가. 사회주의사회의 징표와 그실현 ---------- 77

(1) 생산수단의 사회주의화 ---------- 77

(2) 집단주의체제형성 ---------- 77

(3) 사회주의적 분배 ---------- 78

(4) 프로레타리아 독재 ---------- 78

나. 세대관계 ---------- 79

다. 지향세력 ---------- 80

라. 자유화수정주의문제 ---------- 83

5. 군사문제 ---------- 86

가. 현황분석 ---------- 86

나. 전 망 ---------- 87

다. 대남공작 (남조선혁명) ---------- 88

(1) 현황분석 ---------- 88

(2) 전 망 90

1. 북괴 권력구조의 전망

가. 김일성 독재체제 강화 과정

김일성은 해방 직후 자기의 일인 독재 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국내 공산주의 거물인 현준혁을 암살한후 계속 북한지역내 민족주의 세력을 제거하였고 휴전 직후에는 자기의 가장 위협세력인 남노당파의 숙청을 단행함으로서 정적의 제거와 패전의 책임을 벗는 일조이석의 효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당시 김일성의 정치 연륜미숙과 또한 6.25의 산물인 중공세력의 팽창은 연안파와 소련파 그리고 남아 있는 국내공산주의 세력으로 부터 위협을 당하지 않을수 없기에 1956년부터 1958년 사이에 소위 8월종파사건을 계기로 이들에 대한 숙청을 단행하였다.

따라서 김일성이 일단 자기의 1인독재체제를 확립시킨것은 1958년이며 이를 계기로 북한지역내에서 완전한 사회주의 경제체제로 넘어가게 되었다.

나. 족벌정치체제의 구축

김일성은 1958년 자기의 독재체제를 구축한 후 근 10년간 대폭적인 숙청은 없었으나 그간의 대내외 정세는 복잡하여 반 김일성 세력을 잉태하게 되었다.

즉 1956년 부터 시작된 중소간의 이데오로기 분쟁은 60년대에 들어서면서 부터 극렬화되었고 이것은 북괴로 하여금 양자간의 초연

한 위치를 견지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으며 이로인해 북괴는 대소관계의 악화를 초래하였고 그 결과 북괴는 경제 국방정책에서 심대한 타격을 받게 되었다.

또한 60년대에 들어서면서 부터 월남사태는 본격적인 전쟁 상태로 접어들었고 이것은 한반도에서의 전쟁의 불이 붙을 수 있는 위협이 증대되었다.

그리고 대소관계의 악화와 전쟁발발위험의 증대는 북괴가 추진한 7개년경제계획에 큰 차질을 가져 왔고 그 결과는 북한 주민들의 생활을 압박 궁핍을 강요하게 되었으며 이는 또한 김일성을 둘러싼 당 고위층간의 정책대립의 알력을 가져오게 되므로서 반 김일성 세력이 대두되었다.

그래서 1967년3월부터 박금철, 이효순을 비롯한 당 고위층 100여명을 숙청하고 1968년에는 중간간부의 숙청 그리고 1968년말부터 1969년초에 이르러 민보상 김창봉 총참모장 최광, 대남공작책임자 허봉학 등을 수정주의, 소극주의, 지방주의, 종파분자라는 갖가지 누명을 씌워 대대적인 숙청을 단행하였으며 5차당대회 직전인 1970년7월경 나머지 김광사, 이종옥, 석산 김익선 등 고위 경제, 사상통제담당책임자들을 제거시키고 5차당대회에서 김일성의 실제인 김영주를 실질적인 후계자로 확립시키고 또한 그 주위를 신진 핵심분자들로 대체함으로서 김일성의 영구집권, 족벌정치 체제는 확립되었다.

김일성이 자기의 친동생인 김영주를 후계자로 확정시키기 까지는 여러가지 고충을 겪었으며 또한 위에서 본 바와같이 대내외적인

정책 차질에서 불가피하여 자기의 동생밖에 믿을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따라서 김영주가 1961년 4차당대회시에는 당내 서열이 47위였으나 66년 당대표자회때에는 24위 그리고 67년 숙청이후에는 11위의 서열에 있다.

금반 5차당대회에서 6위의 서열에 등장되었다.

김영주가 현재 6위의 서열에 있으나 실질적인 후계자란 입증은 김영주보다 상위인 최용건, 김일, 박성철, 최현의 성분을 분석해 보면 명확해 진다.

즉 최용건(1900년생)과 최현(1906년생)은 고령으로 그들의 활동능력은 한계에 다다랐고 실력자로서의 쌍벽을 이루고 있는 김일과 박성철은 대내와 대외를 분단시키므로서 권력 분산을 피하였다.

또한 당 정책을 집행하는 비서국에 박성철과 최현을 배제시키므로서 완전한 실권을 행사할 수 없게 만들었으며 김일은 비서이나 1950년말 평양방위 실패의 책임을 씌워 임춘추등과 같이 숙청을 시켰다. 다시 등용했을 뿐아니라 과거 일제시 부터 김일성의 심복으로서 같이 행동해온 자이기때문에 그의 약점과 그의 김일성에 대한 맹종으로 김일성 체제에 위험요인은 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1967년 당 조직책임자였든 박금철을 숙청한것도 김영주를 당의 핵심이며 실권부인 조직책임자로 앉칠려는 속셈이었으며 이를 장악함으로서 권력 독점에 장해요인을 마음대로 제거할수 있게 되므로서 실질적인 제2인자로 등장 김일성 족벌정치 체제를 확립시켜 놓았다.

다. 권력구조의 전망

(1) 1971 ~ 1976 년간

북괴의 6개년 경제계획이 끝날뿐 아니라 6차당 대회가 예상되는 향후 6년까지의 북괴 권력구조의 전망을 살펴보면 국제정치면에서 예상치 않는 획기적인 변화가 없는한 북괴의 권력구조는 현 김일성 체제가 계속 유지될 것이며 김영주의 권력기반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그 이유는

첫째 김일성, 김일, 박성철 등의 연령이 계속 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시기이며

둘째 적극적인 김일성 우상화 정책으로 김일성에 대한 신격화가 확립, 그와 권력 쟁탈의 대상이 전무하며

세째 중소간에서 자주로선 견지로 대외로 부터 적극적인 전복지원의 가능성이 없으며

네째 김영주를 조직책임자로 한 김일성 내지 불평세력을 사전 임의 제거할 수 있는 기반이 확립되었고,

다섯째 현 6개년 경제계획이 성패의 결말과 그 책임을 질 단계에 까지 이르지 않고 있으며

여섯째. 계속적인 긴장 조성으로 대주민통제를 지속시킬수 있기 때문이다.

(2) 1976 ~ 1980 년간

북괴의 권력 구조면에서 변화를 가져올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시기는 바로 이 70년대 후반부터라 보겠다.

물론 이 시기도 전반기에 확립하여 놓은 김일성—김영주 체제의 강화와 또한 김영주의 절대 권력 확보로 김영주 중심의 권력체제를 지속시킬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요인으로 인해 현재의 강경 체제 보다 약화 내지 혼란이 싹틀 가능성이 있다.

첫째 김일성을 비롯한 소위 항일 「빨찌산」 출신 세력들이 고령으로 쇄퇴

둘째 따라서 권력은 김영주에게 집중되나 현 김일성 만큼의 신격화나 절대권력을 행사할 수 없는점 (김일성의 극단적인 우상화 즉 조상들에 대한 혁명투사 날조가 김영주에게도 영향을 주며 김영주도 항일 투사로 날도되 겠지만)

세째 여러개의 파벌 형성의 가능성

즉 김영주를 비롯한 소위 만경대 혁명 학원의 골수세력, 해방후 소련 및 동구제국에서 유학한 선진세력, 북괴내에서 생장 등용된 세력, 군세력

네째 국제 긴장의 해빙 무드 즉 미•중공간의 접근, 중공의 UN 가입 및 분단국가의 동시 UN 가입등 대화의 광장확대,

다섯째 탈이데오로기 현상

여섯째 6개년 경제계획이 실패됐을때의 책임문제 등을 들수 있다.

Ⅱ 급 비 밀

2. 북괴외교관계의 발전전망

가. 북괴를 위요한 국제정세발전

(1) 미•중•소 관계발전이 북괴에 미치는 영향.

70년대 전반적인 특성을 살펴본다면 군사적 양극화와 정치적 다극화중심의 현상이 공존할것이며 또한 이는 극동에서 군사적 양주축을 이루고 있는 미국과 소련이 공존되며 정치적 다극화 중심의 표본인 중공, 일본을 주축으로 공존한다는 것이 70년대 특징으로 지어질수 있을것이다.

즉 60년대가 미국•소련이 중공견제의 형태로 발전해왔다는 것을 긍정한다면 70년대에는 미•소의 평화공존이 미•중공과의 협상의 시대로 접근될것이며 또한 이와 같은 동태적 국제상황은 중공과 소련간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대두될것으로 전망된다고 하겠다.

어쨌든 70년대에는 미국을 초점으로 하여 미-소, 미-중공, 미-일, 삼각관계에 있어서 미국이 최종적인 조정역할을 담당하는 시대가 될것이나 70년대 전반(76년)까지는 미국이 중공과 소련의 접근을 견제하는데 역점을 둘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북괴에 미치는 영향으로선 우선 중소관계가 냉전을 유지할시는 북괴로 하여금 의존적 지원획득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케 할것이며 이 경우 북괴는 중•소 관계에서 독자로선추구를 보다 강하게 내세우지 않을수 없는 입장에 놓이게 될것이며 다음은 미•일•미-소, 미-중공, 삼각관계 즉 「균형적 평화공존 시에는 북괴도 도발욕구를 둔화하지 않을수 없게 될것이다.

Ⅱ 급 비 밀

그러나 이 경우에도 북괴는 이른바 독자노선을 내세워 중소의 견제적 통제를 배제 할 수 있어 북괴의 대남적화에는 별반제어적 여건조성은 되지못 할것이다.

(2) 한미일관계가 북괴에 미치는 영향

70년대의 특징적 전망으로 제기예상될 수 있는것은 먼저 미국과 일본간의 접촉에서도 경제적 군사적 측면에서 상호 자국의 국가이익 우선의 접촉이 행해질것이 내다보이며,

내 다음으로 이 경우 미국은 일본에 대해 저개발국 원조를 촉구하여

2 일본의 군사적팽창을 둔화 내지 저지시키려 들것으로 보인다.

유 그러나 60년대의 미국을 중심한 미일,한미간,쌍무적 협력관계는 70년대에도 계속될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특징적 전망하에서 중소에 대항키 위해서는 미·일의 공동방위체 형성이 지속될것이며 미국의 대한지원감소와 반비례한 일본의 상대적 영향력 증대가 이룩될것이며,한국의 대일협력이 불가피하나 일본의 긴장완화노력은 오히려 한국의 고립을 촉진시킬 우려도 내포하고 있다 하겠다.

상기의 경우 한미일 집단안보 가능성과 일본의 군국주의화가 북괴-중공,북괴-소련의 안보를 내세운 접근의 계기를 마련해 줄수있을 것이며,또한 미국의 대한지원 감소와 일본의 긴장완화정책은 북괴의 대남도발을 오도할 가능성이 있다하겠다. 그리고 가장 심각하게 제기되는 문제는 동서평화공존노선이 한반도의 현상유지고착시 북괴를 합법적으로 유도하는 계기가 조성 될 수 있을것이라 하겠다.

Ⅲ 급 비 밀

나. 북괴의 대중소관계의전망

(1) 북괴의 대중소관계현상

1965년2월 코쉬긴의 북괴방문후 점차로 냉담해저간 북괴-중공관계는 67년중공문화혁명의 절정기에는 긴장감마져 감도는 최악의 상태에 들어갔으나, 69년중반기부터 북괴-중공간에는 관계개선의 징후를 보이다가 70년2월에는 양측이 대사를 교환함으로서 국교를 정상화시켰고 70년11월 노동당5차대회시에는 밀착된 느낌마져 줌으로서 「결정적요인」인 북괴를 상실한다는 것은 큰 손실인것이다.

그러나 북괴로서는 대소우호협력관계는 저해되게 하지않고 대중공관계를 개선하려고 한데서 대중공관계의 개선으로 대소관계가 악화되지않게 하기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수 있다.

즉 70년6월25일 20주년기념행사시의 북괴김일의 발언은 「중공의 참전에 감사한다」고 말하고 「소련의 지원에 감사한다」는 정도의 관계가 나타났었다. 이러한 북괴중공의 관계정상화내지 밀착현상은 쌍방의 안보문제가 큰 요인임을 알수있는바 즉 69. 11 닉슨•사또 공동성명 후의 한•미•일의 남방삼각관계형성이 중공과 북괴에 다같이 안보면에서 부정적측면을 돋보이게 했기때문인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북괴-중공관계의 상기한바 같은 관계개선은 소련측에서 보면 큰 충격이 아닐수 없으며. 중공과의 대결상태하에 북괴의 대소신중자세를 엿볼수 있게하고 있다.

(2) 북괴의 대중소관계전망

북괴의 대중소삼각관계의 변화전망은 다음 사항에 따라 달라질것으로 보이는바.

Ⅲ 급 비 밀

첫째, 김일성의 권력의 안정도

둘째, 북괴 안보 내지 공산화통일의 요구도,

세째, 북괴의 경제발전, 특히 ..업추진의 요구,

네째, 국제지위향상요구.

다섯째, 세계혁명과 국제공산주의의 운동에서의 북괴의 사명감에서 오는 요구등이다.

외 3 유

중·소로부터의 북괴의 향배가 타율적 관계에 의해서도 제약이 주어지지만 1960년대 후반기이후 북괴의 독자로선 즉 자율성 비중이 점차 높아진것은 사실이다. 이는 중·소의 대북괴 독점영향력 행사가 이룩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낸것이다.

이상과같은 북괴의 대중·소관계에서의 권력적, 정책적 및 이념적 요구와 동요구충족에 있어서의 자율 및 타율성을 동시에 고려한다면 70년대 북괴의 대중·소관계는 적어도 단기(76년), 장기(80년)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변화 내지 발전될것으로 보인다.

단기 발전전망

첫째, 이념면에서의 합치가 기조가되어 관계개선이 이룩된 중공과의 관계는 공동방위, 경제협력 및 문화교류등이 가일층 발전이 예상되며 대소관계는 단순한 실리추구의 접근인바 이를 위한 북괴의 보다 강한 자주로선표명이 있을뿐이다.

즉 북괴의 중·소 관계에서의 중립로선견지가 중·소의 동시 지원보장의 첩경으로 여기고 있기때문에 결정적시기에 대비하기 위해선 상기한 주체성 강도를 일관되게 해오고 있고, 또 그방향으로 단기·장기까지 끌고 갈것이다.

물론 북괴의 대중소관계를 동시 발전시키는 요구는 일국적인 것이며, 중공과 소련이 각기 북괴의 대중소관계변화가 자국의 이해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이것이 관계악화의 요인이 될수 있다.

둘째, 북괴는 대중공관계에서는 무력통일의 배경 및 협조세력(단기)으로 이용하는데 역점을 크게 두며, 대소관계에서는 남조선혁명의 선행조건으로하는 소위 평화통일 배경 및 협조세력으로 이용하는데 중점을 두고 비교적 장기에 근거한 협조에 중점을 두고 있다.

세째, 국제공산주의의 운동의 전략,전술에서는 중공지도하에 놓여질것인바,(단기) 여기에는 중공의, 대북괴 깊은 연계가 북괴-소련관계 발전의 제약도 될수있으며 북괴의 대소관계 소원까지 각오한 북괴의 적극참여도 고려 될수있다.

따라서 단기적인 측면에서의 북괴의 대중·소관계는 북괴의 소위 자주노선으로 중·소와의 관계를 균형되게 유지할것이 예상된다.

장기 발전전망

첫째, 북괴가 현단계 내지 70년전기간에 걸쳐 가장 중요한 과제는 대남적화인데 이에는 핵교착시 중공에 더욱 편향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중소간의 대립이 계속되는한 북괴의 중·소 가운데 어느 일방에의 편향은 다른한편의 관계소원을 불가피하게 한다 하겠다.

소련은 이 경우에 한해선 평화적통일만 지지하고 있는만큼 북괴

는 구역, 평화통일을 지지하는 중공과 더욱 관계가 강화될 것이다.

둘째, 북괴의 대중공관계발전에 반비례해서 대소관계가 소원해질 것이지만 다음 한계선이하로 악화되지 않을것으로 보인다.

① 핵전쟁에 방으로의 소련을 이용할 수 있게끔 대소관계유지.

② 북괴경제계획에 결정적인 타격이 될 수 있는 소련의 경제원조 및 협력이 중단됨이 없도록 하기위한 대소관계유지이다.

특히 미·중·중공과 기타국가와의 긴장완화시 즉 아시아에 긴장완화가 이루어지고 그 결과 한반도에 긴장이 완화될 경우 북괴의 정치적 존재우선은 경제발전인바 이때의 소련의 경제협력은 불가결한 것이다.

따라서 장기적전망에서 보면 70년대 후반부터의 긴장완화는 국경의 현상유지를 인정하고 있기때문에 북괴의 자주적인 폭이 넓혀져 다른 측면에선 북괴의 대남도발이 둔화될수도 있으며 이 경우 대소관계가 보다 적극 발전될수도 있다.

다. 북괴의 대일관계전망

북괴의 대일관계전망을 단기(76년) 장기(80년)까지를 함께 다룬다면 북괴는 현하의 긴장완화기수로서의 역할을 내세우는 일본의 동태적추이에 따라 1차적으로 북괴의 합법성을 보장받기에 노력할것이나, 그러나 여기까지는 이르지 않을것이 예상되며, 최소한 무역대표부까지는 설정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사실상의 인정이 될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소•일•중공의 접근여하에 따라서는 적어도 76년후반기에는 북괴까지 승인하게 될수있으며 이와같은 일본의 태도는 한국안보에 대한 「긴요」한 이해관계를 군사역할보다 정치적역할로 다룰려고 하고있기때문에 북괴-일본의 접근확대가 예상된다 하겠다.

이와같은 일본의 긴장완화노력은 결과적으로 한반도의 현상유지 바탕위에서 이것이 정립되는 것이며 이는 통일정책을 재검토케 하는 현상이 될수 있을것이다.

라. UN문제

(1) 북괴의 대UN태도

북괴는 6•25 동란이전까지는 UN에대한 비난을 않고있다가 6•25동란시 UN결의에 의해 UN군이 참전하게되자 이때부터 UN을 비난해왔으며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는 국제관계의 다원화로 UN의 목적과 헌장은 인정하나 UN의 모든 결의는 미국의 조정하에 조작된것이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면서도 6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부터는 UN에서의 중공문제추세와 한국문제의 처리에서 그들 지지세력이 점차 증대하자 표면적태도와는 달리 대중립국활동에서 UN내에서의 지지세력확보에 노력하고 있으며 1969년과 1970년도에는 공산•중립제국의 UN대표를 초청하는등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와같은 추세는 앞으로 계속할것이다.

(2) 단기 (76 년까지) 전망

현재 UN에서의 중공가입문제는 시간문제로 대두되고있고, 또 중공도 종국적으로는 UN에 참가할 전망이 커지는 현상하에서 북괴도 자기들에게 유리하다고 인정할때는 UN의 비방을 중단, UN에 참가할 노력을 전개할것이다.

그러나 중공이 대만문제와 안보이사회 상임문제도 70년대전반기까지는 가입수락의 전망이 보이지 않으며 또 분단국가의 동시 UN가입 문제가 적극화되지 않는 현상하에서는 북괴가 사전공작에 주력하겠으나 현상 태도를 유지할것이다.

(3) 장기 (80년까지) 전망

UN에 대한 국제정세의 추이가 분단국가의 동시가입추세로 움직이고 있고 중공의 UN가입과 동서독의 UN가입이 70년대후반에 이루어질 전망이 크므로 북괴에도 이때에는 자기들의 국제지위향상과 발언권의 증대, 한국통일문제에 대한 주도적 장악을 위해 UN가입을 추진할것이다.

극 비 밀

5. 북괴경제전망

(1) 7개년경제계획

가. 주요생산목표와 경과

제1차5개년경제계획에서 소기의 목표를 달성한 북괴는 1961년9월 노동당제4차대회에서 국민경제발전7개년계획에 관한 결정서를 채택하여, 61년부터 동7개년경제계획이 착수되었다. 공업총생산은 연평균 18%의 성장율로서 계획이 달성되는 67년에는 60년에 비해서 생산고를 3.2배로 할것을 목표로한 의욕적인 계획이었다. 이 7개년경정계획의 주요생산목표와 그 실적은 아래와 같다. (도표제1표)

그런데 동7개년계획은 익년인 1962년말에 일부수정을 하게되었다. 북 노동당은 1962년 12월에 개최된 중앙위원회총회에서 「조성된 정세와 국방력의 증강에 관해서」의 의제를 토론한결과 「국민경제의 일부를 희생하드라도 우선 국방력을 강화한다」고 결정하여 「국방건설우선」으로 변경되였다. 따라서 7개년중 전반기 3년의 목표인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힘을 집중한다」고 하는 목표는 완전히 희생되었다. 이 변경의 배경으로서는 북괴의 소련에 대한 군사원조요청이 거부되었다는데 있었다.

이와 같이 국방건설의 우선정책은 채택하지 않으면 않되었든 북괴는 소련으로 부터의 경제원조의 삭감으로 인하여 계획상의 차질을 초래하였고, 종국적으로 7개년경제계획의 3년연장을 해야만 했었다.

극 비 밀

7개년경제계획의주요품의달성목표

품 목	목표생산량	1960년에 대한배율	품 목	목표생산량	1960년에 대한배율
석 탄	2,500만톤	2.4	직 물	5억 m²	5
선철·입철	230 〃	2.7	화학섬유	9.4만톤	7
강 철	230 〃	3.6	하 차 류	6,500만매	3.9
전 력	170억KWH	2.4	곡 물	660만톤	1.7
트 락 타	17,100대	5	소 채	432만톤	2
화학비료	170만톤	3	육 류	35만톤	3.9
농 약	1.2만톤	1.9	우 유	11만톤	9.5
세 멘 트	430만톤	1.9	과 물	50만톤	3
판 유 리	1,000만평방m	2	수 산 물	120만톤	

66 년 10월 노동당대표자회의에서 김일제1부수상은 「제국주의의 침략책동이 노골화되고 있는 상황하에서 국방력을 가일층 강화하지 않을수 없다」고 하여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병진을 강조하면서 3년연장결정을 발표하였든것이다. 김일제1부수상 또한 「각공업부문에 낡은 설비도 적지 않다. 낡은 설비를 근대적인 설비로 대체시키지않으면 안되나 설비갱신은 단기간에 실시될수 있는것이 아니다」라고 언급함으로서 역시 국내적인 요인으로서 설비의 노후화를 지적하였다.

김일성은 또 69년3월 「사회주의경제의 몇가지 문제에 관해서」라고 하는 론문을 발표해서, 인민생활에 필요한 일용품, 육류 등 십분 공급되지 않고 있음을 시인함으로서 경공업부문의 부진이 심각하여 국민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암시했다.

나. 7개년 경제계획의 실패요인

7개년경제계획이 3년연장까지해서 실시되었으나 전력, 석탄부문에서만 그 당초의 목표를 달성하였을뿐 여타부문에서는 완전히 달성하지 못하고 실패하였는데 여기에는 몇가지 요인이 있다. 즉,

① 소련으로부터의 원조가 1963년이후 순조롭게 실시되지못하였다는점.

② 국방건설우선으로 인한 군수산업의 우선때문에 일반경제의 발전저해.

③ 설비의 노후화

④ 원료, 자원의 부족

⑤ 국민생활 피폐로 인한 근로의욕감퇴 등을 들수 있다.

〔Ⅱ〕 6개년경제계획

가. 6개년경제계획의 기본방향

김일성, 노동당제5차당대회에서 「6개년계획의 기본과업은 공업화의 성과를 공고히 발전시키며, 기술혁명을 새로운 높은 단계로 진전…」 운운함으로서 7개년경제계획에서 이룬 성과의 바탕위에서 기존공업기반의 체질개선을 시인코자 하는 즉 북괴공업기반의 내부구조적허약성을 지닌 기계공업을 핵심으로 하는 동력공업, 광공업, 야금공업, 화학공업 등 발전에 보다 비중을 둔 중공업정책인것이다.

여기에 불가피적으로 수반되는 것이 기술혁신이다. 따라서 금번 6개년경제계획은 김일제1부수상의 보고에서 지적되였다 싶이 「공업부문에서 신규건설을 적게하면서 살을 붙이는 사업에 전력…」운운한 점은 보다 실질적이고, 경제적실효성을 추구하자는데 그 중점방향이 돌려진것으로 해석된다. 주요과업을 요약하면

(1) 공 업

① 7개년계획에서 기본적으로 건설된 공업기반의 내부구조를 질적으로 개선

② 노후시설의 교체와 생산공정의 자동화

③ 공업제품의 품질제고로 수출산업의 체질개선

④ 유류수요급증에 따른 석유산업발전에 주력

대 외 비 밀

6 개년경제계획의주요품의달성목표

품목	1976 년목표량	비고	품목	1976 년목표량	비고
발전시설용량	500만KW	220만KW 증설	화학비료	280~300 만톤	
발전량	280~300억KWH		시멘트	750~800 만톤	
석탄	5,000~5,300 만톤		마그네샤크링카	160 만톤	
선철, 입철	350~380 만톤		직물	5 ~ 6억m	고급직물 5,000만m
강철	380~400 만톤		구두	1,000 만족	
압연강재	280~800 만톤		신발	7,000 만족	
공작기계	2.7 만대		수산물	160~180 만톤	어물 130만톤
냉장고	12.5 만대		알곡	700~750만톤	벼350만톤
세탁기	11 만대		육류	40 ~ 50만톤	
TV 수상기	10 만대		과실	80 ~ 100만톤	
트락타	2.1 만대	천리마호1만대 풍년호5,000대			

대 외 비 밀

(2) 농 업

① 7개년기간중 조성된 생산기반 (수리화, 기계화, 전기화)을 더욱 발전시켜 영농의 집약도강화 및 다각화에 주력.

나. 6개년경제계획의 전망 (71-76)

(1) 문제점

북괴는 줄곧 중공업정책을 계속 견지하여 왔기때문에 공업부문중에서도 석탄, 전력, 세멘트 철광등의 기간산업은 비교적순조롭게 신장되어 왔으나, 여기에 반해서 고도의 기술과 대량의 자금이 필요로되는 대형기계 및 정밀기계등을 생산해내는 기계공업 원유정제, 합성고무, 제약등의 화학공업은 생산량에 있어서도 적을뿐만 아니라 품질에 있어서도 조잡하다.

때문에 북괴가 6개년경제계획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기본적으로 해결해야할 문제점이 있다.

㉮ 중소원조의 적기

70년 9월에 체결된 소련과의 「71-75년경제기술협정」과 70년 10월에 체결된 중공과의 「71-76년경제원조협정」이 적기에 이행되어야 한다.

㉯ 기술의 혁신

금번 6개년경제계획에서 중점이 주어진것은 체질개선이다. 이것은 질을 개선함으로서 노동생산능율을 향상시키고 제품의 질을

향상시켜 전반적으로 생산품의 원가를 저하시킴으로서 국제경쟁을 감당하여 소위 민족사회의 특징에 맞게 필요한 민족경제를 독자적으로 건설할 수 있게하는 여건중의 하나이다.

특히 기계공업이나 중화학공업은 고도의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거나 또 중공이나, 소련으로부터 기술을 도입하지 못할경우, 막대한 외화를 드려 완제품을 중공이나 소련으로부터 수입을 하든가, 이들에게 완전히 의존하는수밖에 없다.

㉰ 자금의 확보

기술혁신과 노후설비의 대체는 결국 대량의 자금이 소요되는 것이기 때문에 외화를 획득해야 한다. 종래의 대소련, 대중공의 무역구조에서 탈피하여 다변무역이 요구되며 따라서 수출량의 증대가 절실히 요구된다.

(2) 6개년경제계획의 성패가능성

㉮ 공 업

북괴는 대소·중 관계의 급변이 없는한 성공적으로 이행될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전력, 석탄 등 에너지산업부분에서는 목표에 무난히 달성하게 될것이며, 또한 북괴경제성장의 선도적산업인 금속공업의 강철을 비롯하여 비료, 세멘트, 직물등은 목표량에 어느정도까지 달할것이다. 그러나 기계공업과 중화학공업은 기술과 자금이 확보되지않는한 목표량에 달성하지 못할것이며, 76년이후로 이관될 것이다.

그러나 설사 소련이나 중공의 기술・경제원조가 여의치 않다하드라도 상기 기계공업과 중화학공업분야를 제외한 여타분야에서는 대체적으로 목표에 달성할것으로 예상되므로 6개년경제계획이 끝나는 76년도에는 적어도 국민소득이 최소 연8%에서 최대 10%로, 공업성장은 최소10%에서 최대 14%로 성장될것이다.

그러나 여하튼 6개년계획은 7개년계획보다 질적인 개선을 보게될것이요, 나아가서는 전쟁잠재력이 더욱 커짐에는 틀림없다 하겠다.

㉯ 농 업

투 자 비 율

	61 - 69	71 - 76
공 업	57%(중공업 80%, 경공업20%)	49%(중 83%, 경17%)
농 업	20.%	18 %

공업과 농업의 균형에서 북괴의 방침은 「농업에 대한 공업의 지도를 보장할 수 있도록」 공업의 우위를 견지하는 것이다.

이 방침에 따라 상기 도표에서도 보다 싶이 투자의 비율은 농업에 각 20%(61-69) 18%(71-76) 투자에 비해서 공업에 57%, 49%라고 하는 3~4배의 투자가 여전히 공업에 집중하고 있다.

6개년계획에 있어서는 7개년계획보다 농업의 투자가 약간 높다

고는 하겠으나, 역시 공업에 비해 농업의 불균형, 다시말해서 76년도에 가서도 계속 증대되는 공업부문종사원에 대한 식량공급과 경공업원료의 부족을 초래하며 사회적으로 식량사정의 긴장은 계속될 것이고, 이로 인한 노동의욕의 감퇴는 불가피적인 현상으로 대두될것이므로, 6개년경제계획에서 제시한 목표량인 700 ~ 750 만톤은 크게 미달될것이다.

㈐ 경 공 업

	61 ~ 69		71 ~ 76	
공	57 % 중		45 % 중	
	중 공 업	경 공 업	중 공 업	경 공 업
업	80 %	20 %	83 %	17 %

북괴는 7개년계획에서 「주민생활수준향상」운운했지만 그 목표는 달성하지못하였다. 일용소비품을 생산하면서도 그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은 양적인 부족도 있긴하지만 질이 낮은데 그 원인이 있다.

금번 6개년경제계획에서도 상기 도표에서 주지되는바와 같이 투자율에 있어서 7개년계획때와 동율의 정도이다. 때문에 북괴는 표면상 「생활수준향상」 운운하고 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구호에 지나지 않고, 다만 7개년계획에 이룩하지 못한 생활향상문제를 6개년계획기간에 어느정도 달성해보려는 계획에 불과한것이다.

내
6
유

특히 6개년경제기간에 북괴는 냉장고, 세탁기, TV수상기 등을 생산한다고 하나, 최근 일본, 서구등으로 부터 수출산업용 경공업시설을 도입하고 있는점에서 이것은 생활편리와 여성의 노동에서 해방이 아니라 외화획득을 위한 수출원천확대책의 일환이라 하겠다.

그러나 북괴는 전반적인 주민생활의 향상의 선전자료로 활용키 위하여서라도 가정용 보급보다는 공장, 기숙사, 혹은 단체용으로 보급이 주력될 가능성은 있다. 하겠다. 때문에 일용품목표달성은 역시 미흡할것이나, 냉장고, TV수상기, 세탁기 생산의 목표달성에 진력하게 될것이다.

다. 76년이후의 경제전망

76년이후에도 계속 중공업정책우선을 견지하게 될것은 틀림없다하겠으나 대체로 다음과같은 문제점이 대두될것임.

(1) 북괴경제성장의 선도적역할을 해온 산업분야에 량적인 목표는 증대될것이나 결과적으로 고도경제성장의 한계성문제가 점차 대두될것이다.

(2) 특히 기계공업분야와 화학(석유)공업분야의 체제가 6개년경제기간에 어느정도 확립된다고 하드라도, 76년이후 신규건설에 있어서는 고도의 기술과 방대한 자금이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게 대두될것임.

(3) 중공업정책을 견지하는한 공업과 농업의 불균형은 불가피하게 될것이므로 농민의 도시에대한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이며,

식량사정은 여전히 긴장을 유지할것임.

(4) 그러나 냉장고, TV수상기, 세탁기, 그리고 질이 다소향상된 일용품을 어느정도 혜택을 보게되는것은 틀림없기 때문에 불만은 역시 해소될것이고, 전반적인 생활수준은 약간 향상될것이다.

4. 사 회 문 제

가. 사회주의사회의 징표와 그실현

사회주의사회를 규제하는 징표로서 다음의 네가지를 들수 있는데 그 징표가 어떻게 어느정도 실현되고 있는가가 사회주의사회의 심도를 측정할 수 있다.

그징표란 첫째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소유관계로의 전환 둘째 집단주의체제확립정도 세째 분배에서 사회주의적인 노동의 량과 질에 의한 분배, 네째 프로레타리아독재의 형성과 실시이다.

이러한 네가지여건의 실시정도를 보면

① 생산수단의 사회주의화

- 1946 년 8 월 중요산업에 대한 「국유화」
- 1946 년 3 월 무상몰수 무상분배에 의한 토지개혁
- 1953 년~ 1958 년 8 월까지의 농업의 집단화완성
- 동기간에 개인상공업과 수공업의 사회주의적개조의 실현

따라서 사회주의사회를 규제하는 가장 중요한 소유문제를 해결하고 「인민적소유」 와 「집단체소유」 만 있게되고 현재에는 「집단적소유」를 인민적소유로 전환시키는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1976 년이후부터는 인민적소유에로의 전환문제를 구체화하게 된것이다.

② 집단주의체제 형성

- 1947 년도에 가족주의와 민족제도를 없애기 위하여 호적제철폐 시켰다.

-당, 및 사회단체를 조직하여 10세이상은 누구나 1~2개 이상의 조직생활에 망라시켰다. 사회생활의 단위가 개인이아니라 집단으로 되게하였으며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라는 관념으로 주입시켰다.

집단주의 체제에 순종시키기 위해서 탁아소·유치원에서 학령전어린이를 양육케 하고 있다. 현재에는 $\frac{2}{3}$가 수용되고 있으며 1976년에 가서는 주탁아소·주유치원이 도시에서는 널리 설치될것이 예견되며 모든 학령전어린이는 100% 탁아소·유치원에서 성장할것이다.

따라서 가정교육이란 받을수 없는 형편에 놓이게 될것이다. 1980년대에는 월탁아소 유치원이 생기며 또는 전적으로 집에 돌아가지않는 정도로 될것이 예견된다.

③ 사회주의적분배

1958년 8월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 개조의 완성과 더불어 도시·농촌할것없이 모-든사람은 노동의 양과 질에 의한 분배가 실시되어 개인소득에 큰 차가 없어지고 생활상차라는 것은 별로 없는 형편이라 즉 부자와 빈자라는 말이 없어졌다. 이러한 생활상차는 1976년에가서는 더욱 줄어들고 1980년도가서는 도시와 농촌의 차도 상당히 접근될것이다.

④ 프로레타리아 독재

1947년 이후에 조직된 북조선인민위원회가 조직되면서 사실상 프로레타리아 독재기능을 수행하게 되었는데 현재 독재의 핵심체

인 당은 170 반으로 되어있다. 북한인구에비례하여 8.2 ; 1인데 이는 공산국가 어느나라보다도 가장 높은 비율이다.

독재의 기능은 대내적으로는 전복된 계급에 대한 반항억제로부터 계급교양으로 또한 이미 이룩된 전취물에 대한 대외적침해로 부터의 수호에 돌리고 있다.

이러한 독재는 분열되고 있는 여건하에서 더욱 강화될것이 예견된다.

나. 세대관계

이상의 이질적인사회에서 해방후 성장된 북한주민을 세대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세 대 관 계

1945 년	1970 년	1976 년	1980 년
1 세	25 세	31 세	35 세
10 세	35 세	41 세	45 세
20 세	45 세	51 세	55 세
30 세	55 세	61 세	65 세

※ 해방당시 10세가 1970년현재로서는 사회적인 중견층을 형성하고 있으며 76년에 가서는 북한사회의 지배층을 점하게 된다. 또한 전인구의 70%이상을 점하게 된다.

반면에 해방당시 30대(사회중견층)는 76년에가서는 60대가 되어 사회에서는 물러서게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는 분명히 북한으로서는 소위 핵심분자로서 세대가 교체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완전히 사회주의사회에 적응된 체질화된 새형의 인간형이 형성되어 모―든 가치관도 우리와는 상반된다는 결론이 나온다.

다. 저항세력

(1) 정책개황

북한에서 독재대상이 되는것은 모두 저항세력으로 보아야 한다.

1957년 5.30일 북괴당 상무위원회결정에 의하여 소위 「중앙당집중지도」라는것을 실시하였는바 그결과 북한주민중 저항세력「반혁명적요소」을 약 3.3%로 보았다.

이에 당황한 북괴는 앞으로의 통일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포섭정책을 실시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1961년 3.27, 당상무위원회에서 「과오를 범한 사람과 성분이 복잡한 사람들을 볏겨주는데 관한 문제」를 토의하고 저항세력을 끌어들이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그러다가 1964년 2월 북괴당4기8차중앙전원회의에서 「각계각층군중과의 사업을 강화할데 대한 문제」를 토의하고 북한주민을 다시 핵심군중과 복잡한 군중(저항세력)으로 다음과 같이 완전히 분리시켰다.

(2) 주민구성분류

1. 핵심군중

① 반일민족해방투쟁에 참가한 사람과 그가족

② 항일무장투쟁에 가담한자와 그 가족

③ 남한에서 지하투쟁 및 유격투쟁에 가담한자와 그 가족

④ 재일교포로서 조총련간부로서 활동한자와 그가족

⑤ 해외에서 북괴를 위해 투쟁하는 교포 및 그 가족

⑥ 6.25 동란당시 전사한 전사자가족

⑦ " " 피살된 가족

⑧ 군인가족

⑨ 제대군인

⑩ 당 및 행정간부와 그 가족

2. 기본군중

핵심군중에 속하지 않고 복잡한 군중이 아닌 노동자・농민을 말한다.

3. 복잡한 군중

① 토지개혁당시 몰수당한 지주 및 추방된 지주

② 부농

③ 중농, 해방전중농

④ 자본가

⑤ 중소상공인

⑥ 해방전인테리

⑦ 월남자가족

⑧ 반공단체가담자

⑨ 귀환포로

⑩ 일제관공리

면서기이상 관직자, 경찰관, 일군지원병, 경방단간부 산림간수, 세관원 등

⑪ 출소자

⑫ 복역중가족

⑬ 종교계에서 간부

이러한 구분은 1960년도 당시보다 구체성을 띠고 있으며 1965년부터 실시된 「주민등록사업」 이라는 심사사업과 결부시켜 구별케 하였다.

여기에서 규정한 저항세력은 그 수에 있어서는 약간의 증가를 가져왔으나 전체적인 인구비율에서는 종전보다 떨어진다.

더욱이 시간이 갈수록 독재기능이 내적으로 계급교양에 중점을 두며 또한 포섭정책과 저항세력의 자연도태등으로 그 수는 감축될것이다. 세대교체로 더욱 그러할것이다.

때문에 지금까지의 저항세력은 없어지며 새로운 세대적인 감각으로부터 나오는 저항세력이 산생할 수 있는 것이다.

저항세력의 수적인 추세를 본다면

1970년도	약	30 %
1976 〃		20 %
1980 〃		10 % 정도로

감축이 예측된다.

라. 자유화 수정주의문제

(1) 역사적 상황분석(부정적측면)

휴전후 북한에서의 수정주의이론이 일부대두된것은 사회주의 개조(개조)기에 있어서 농업집단화와 개인상공업의 협동화과정에 있었다. 1958년 8월 소위 사회주의개조가 끝난후에도 학계에서 소련을 비롯한 동구공산권으로 부터의 수정주의이론을 받아들일수 있는 여건이 없었다.

특히 중·소 이념분쟁이 격화됨에 따라 북괴는 소련을 현대수정주의로서 맹렬히 비난하고 중공을 대국주의로서 또는 교조주의로서 비난하여 즉 수정주의와 교조주의의 양대전선을 동시에 배격하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특히 1962년말 북괴당 4기 5차중앙위원회의후 전쟁준비에 들어서면서부터는 북괴내에서 수정주의, 자유화 요소라는 것은 싹틀수 없었다.

그러다가 1961년부터 실시되는 7개년계획의 부진한 실적으로 부터 일부경제학자들속에서 북한의 경제구조와 경제체제하에서는 고도성장의 지속이 불가능하다는 의견들이 나오게 되었다. 즉 사회주의기초건설기에서는 높은 성장율을 유지할 수 있으나 일정한 단계에 도달하게 되면 전과 같은 경제 성장을 지속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또한 「농민시장」과 상품의 가치법칙의 작용범위문제 등에 대해서 의혹들이 있었다. 이러한 학계에서의 경향성은 확실히 경제면에서 어떠한 시정책을 요구하고 나온것은 틀림없으나 (소련과

같은?) 1969년 3월 김일성의 해답으로서 사그러지고 말았다.
특히 김일성독재체제의 강화는 북괴내에서의 수정주의 또는 자유화 경향이 스스로 산생하리라고는 기대하기 어렵다. 군부에 자유화 및 수정주의가 나오게하자면 외부로부터의 친입의 길이 있을것이다.
북괴당은 이것을 잘알고 있기 때문에 금번 5차당대회에서도 외부로부터의 친입될 수 있는 「온갖 불순사상」 을 격렬히 배격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2) 전망분석 (긍정적측면)

자유화 또는 수정주의의 요소를 산생시키는 계기로서는

① 북송교포들 통해서 큰 영향을 줄수 있는데 자본주의하 (일본)에서 생산되는 상품의질이 북괴것보다 훨씬 좋다는 것을 알게되었다.
② 소련 및 공산국가들의 자유화의 영향을 받을수 있는데 이는 그들의 정책과 자유화풍조를 약간이나마 감각할 수 있는것이다. 또한 그나라들의 영화, 출판물, 사진 등에서도 그러하다.
③ 외국인유학생과 공산국가로 파견된 유학생들로 부터
④ 외국방송과 대북방송
⑤ 수입품
⑥ 체육 및 예술인들의 외국공연을 통해서
⑦ 외국인의 북괴방문 (관광객)

③ 북한내에서 어느정도의 생활이향상되면 합리성을 추구하게 된다.

이러한 요소들은 앞으로 북한내에서 자유화 및 수정주의가 산생될수 있는 것들이다. 그러나 김일성의 권력구조가 존속되는한 요소로서 존재할뿐 자유화의 현상으로 등장할 수는 없을것이다.

따라서 1976년 내지 1980년도까지도 별다른 정치적 변동이 없는한 자유화 경향을 기대하기는 어려운것으로 보아야 할것이다.

1960년도 북송교포를 통해서 「머리형」이 약간식 일본식으로 달라지는 징후가 보이자 북괴는 교포의 「머리」로 부터 자본주의가 침습한다고 일대 경고를 내린바 있다. 그러나 자유화의 경향은 이러한 여건만 허용된다면 서서히 일어나는 것이아니라 급속도로 파급되리라는것은 틀림없다.

5. 군사문제

가. 현황분석

1953년 휴전후 북괴는 재무장을 목적으로 군사력강화에 역점을 두어 군수공업에 상당한 투자를 하였다.

그러다가 1958년 중공군의 철수로 인한 공백을 메꾸기 위하여 노농적위대를 1959년초부터 조직하였다.

1962년 12월에 있었던 북괴당 4기5차중앙전원회의는 군사력강화에서 전환점으로 되었다.

1966년 10월 북괴당 대표자회의에서는 전쟁준비에 보다 박차를 가하였다.

북괴당이 제시된 군사력강화에서 소위 4대로선인 「전국의 요새화」, 「전 인민의 무장화」, 「군대의 간부화」, 「군대의 현대화」는 1970년 5차당대회를 계기로 그들이 목표를 완성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소요된 「국방비」 지출은 1960년도에는 총예산의 19%였다면 1967~1969년은 31.3%가 소요되었고 9년간에 「80억원」이 지출된 것으로 발표하고 있다.

현재의 북괴군사력의 수적인 측면은

지상군	408,671 명
해 군	13,585 명
공 군	45,000 명
계	467,262 명

예비병력으로서는

경비대가	26,500 명
노농적위대	1,380,000 명
계	1,406,500명

이러한 군사력은 「자위」라는 목표하에 자주국방체제로서 재래식 전쟁의 수단으로서의 무기생산에서는 자체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의 전쟁준비와 군사력강화는 본래의 공산당의 폭력혁명이라는 속성으로 부터 필연적인 것이라고 하지만 일면 최근에 북괴가 서두른 전쟁준비는 동기와 계기는 상대적인 위기의식(방어적)에서 출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1964년부터 「남조선혁명론」을 제창하게 되고 「남한혁명은 남한사람으로」라는 스로간을 내놓는 것을 보아 6.25와 같은 전면전을 감행할 의도는 아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동서간의 긴장완화과 중·소관계의 악화, 남북한의 균형된 군사력보유 등은 전쟁도발가능성이란 희박하다.

북괴의 군사력은 어디까지나 방어적 성격이라는 것은 5차당대회에서도 되풀이하고 있다.

나. 전 망

군사면에서 앞으로 전방은

(1) 4대로선과 「자위」원칙을 견지

(2) 전술 및 무기체계의 토착화

○ 산악전

○ 야간전

○ 대부대작전과 소부대작전

○ 정규전과 유격전 배합

○ 이에 맞는 무기 및 현대화, 군사과학, 기술 발전시킬 것.

따라서 새로운 현대무기생산을 크게 개발하지 않을 것이다.

즉, 현대전에 필요한 고성능무기개발과, 원자무기와 같은 군수공업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재래식 전쟁수단에 의한 군사력강화에 경주할 것이며, 전면전쟁을 도발키 위한 공격적인 것이 아니라 방어적인 성격을 띄게 될 것이다. 그렇다 하여 전쟁도발의 가능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1976년도까지는 물량적면은 현상유지이며 사상훈련면에서는 보다 강화할 것이 전망된다.

이는 북괴의 방대한 6개년경제계획의 수행을 위해서는 자금과 인력확보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하다.

이와 반면에 소련, 중공과의 군사협정을 계속 유지시킬 것이며 그들의 군사과학, 기술, 무기도입은 종전과 같은 정도로서 진행될 것이 예상된다.

다. 대남공작(남조선혁명)

(1) 현황분석

북괴군은 당의 군대이다. 당의 의지의 군대인 만큼 당의 남한정책인 「남조선혁명」을 수행하는데 필요에 따라 간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남조선혁명은 북괴군의 개재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는 교란을 목적으로 하는 소규모의 군사도발가능성은 예칙된다.

북괴당이 「남조선혁명론」을 제창하기 시작한 것은 1964년 2월 4기8차중앙전원회의 이후부터이며 공개된 것은 1965년 4월 김일성이 인도네시아를 방문하고 아리아람사회과학원에서의 연설이었다. 그 후부터 줄곧 「남조선혁명」을 부르짖고 있다.

즉 남조선에서 혁명을 수행하고 「인민정권」이 수립되면 그 정권과 협의하여 통일하겠다는 것이다. 종래의 「조국통일」문제와 완전히 분리시켜 새로운 개념을 내놓은 것이다.

따라서 북괴의 대남공작은 바로 「남조선혁명」을 수행하기 위한 지원으로서 전술적인 문제로서 감행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남공작의 기본방침에 대해서는 1966년 10월 북괴당대표자회의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

그간 북괴의 대남공작은 지하당공작을 위주로 특공대를침투시켜 사회적 교란을 시도했고 또한 정치적 중심부를 타격키 위한 공작이 진행되었다. 즉, 1966년도 제시한 대남공작방향에 입각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것은 「통일혁명당」의 조직과 그의 강령·선언을 발표한 점이다.

즉, 통일혁명당의 조직을 기정사실화시킨 점이다. 이 당대표가

5차당대회의 주석단에 등단시키고 또한 앞으로 「남조선혁명」 수행에서 지도부로서 참모부로서 부각시킬 점은 매우 주목할 문제이다.

(2) 전 망

대남공작에서 앞으로의 전망은 「남조선혁명」을 촉진시킨다는 원칙론에는 불변하며 그의 방도로서는 3가지 측면에서 진행될 것이다.

① 주력군편성공작 : 주력군이라 함은 공산당을 조직하고 그 당주위에 혁명의 핵심군중인 노동자, 농민층을 결집시킨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선은 통일혁명당의 지방조직에 역점을 둘 것이다.

② 통일전선형성공작 : 통일전선형성에서는 주로 미군의 철거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는 북괴이기 때문에 반미구국통일전선이 시급한 공작목표이며 또한 반일통일전선도 형성대상으로 될 것이 예측된다.

③ 대상투쟁전개 : 「남조선혁명」에서 당면목표가 미군을 철거시키고 현정부를 전복하는 것인만큼 현 정치, 사회질서를 파괴하고 폭력으로서 정권쟁취를 하여야 한다는데서 모든 방법으로 이러한 공작에 집중할 것이 예측된다.

이러한 3가지 측면에서 앞으로 공작이 진행되는데 어느것에 역점을 두는가는 시기시기에 따라 택할 것이며 정세변천에 따라 크게 좌우될 것이다.

북괴는 「남조선혁명」을 수행하는데 내적인 요소에 대남공작이라는 외적인 침투공작으로서 자극시켜 사태를 조성시켜 보려는 심산이므로 상당한 희생을 치르는 한이 있더라도 보다 적극화되리라는 것은 틀림없다.

통일을 위한 역량 배양 방안

— 정치및 외교적 측면에서 —

목 차

1. 한국통일과 역량배양	95
2. 정치적 안정과 체제적 정당성	98
3. 경제적 근대화와 분배정의	100
4. 자유확장과 민주체제확립	103
5. 부정부패의 해소	106
6. 국민일체감의 증대	109
7. 지식층, 학생층의 체제소외감의 해소	112
8. 범국민적 통일 협의체의 구성	115
9. 이념교육의 재조정	119
10. 국제적 동조와 순리적 자세	122
11. 국제적 신뢰와 성실한 외교	125
12. 결 론	127

1. 한국통일과 역량배양

36년이란 오랜 일제의 굴레에서 벗어나 광복을 얻은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한국은 국토분단이라는 비운에 휘말려 들었다. 분단은 어언 4반세기가 되었고 그 동안 한국민족은 동족상잔의 6.25동란을 겪었으며 휴전 속의 지난 18년간도 제2의 6.25의 가능성 때문에 공포에서 오는 정신적인 위축과 정치적인 제약은 물론, 궁핍한 경제적인 여건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인적 물적 자원을 비생산적인 군비에 쓰지 않으면 안 되었다.

남과 북으로 갈라진 가족과 친척들의 애끓는 그리움과 그리고 마지 못해 정든 고향을 떠나야 했던 수백만월남동포의 가슴 찌르는 향수에 비추어 보아서도 국토통일은 기필코 이루어 져야겠다. 그리고 가능한 한 조속한 시일내에 이루어져야겠다. 그러나 평화적인 국토통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갖추어야 할 국제적, 국내적인 조건이 있다. 한반도 주변에서의 국제적 긴장이 완화되는 것도 중요하며 한국의 장래에 이해가 얽혀 있는 강대 제국의 협조도 중요하다. 또한 당사자인 남한과 북한의 집권자들의 전진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도 중요하며 남북 국민의 통일에 알맞는 태도의 갖춤도 중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지난해 8월 15일의 박대통령의 선언은 아주 환영할 만한 것이었다. 물론 북한의 권력층이 이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서 섭섭했지만 이것은 예기했던 대로였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국내적으로 한국의 이미지는 크게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성과가 없었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 또 북한의 공

산정권에 대해서도 우리의 성실한 자세를 적절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보이는 것이 뜻이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한국의 전진적이고 순리적인 태도를 계속 천명함이 좋을 것이다.

본논문에서는 통일에 대비한 역량배양문제를 정치적 및 외교적 측면에서 다루려고 한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여기서는 국제정치에 있어서의 역량의 개념을 살펴 다음 이를 한국통일과 결부시켜서 개괄적으로 논해 보고자 한다.

국제정치에서 역량 (Capability)이라함은 국제관계에서 자국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모든 인적 물적 자재 (resources)를 말한다. 군사력, 경제력, 인구, 지리적위치, 지형, 자연자원, 정치적 안정, 국제적평판, 문화수준, 외교력, 등 여러가지를 들 수 있다. 역량과 실재적 국제적 영향력과는 깊은 관계가 있지만 이를 단순히 정비례적인 관계로 보는 것은 잘못이다. 국제관계는 상대적인 것이며 역량의 효과는 상대방에 따라서는 달라지며 또한 국제적으로 추구하는 목적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역량에 있어서의 강대국이 실재상의 국제관계에 있어서 약소국에서 양보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을 자주 보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미국과 이란이 어떤 문화협상을 하는데 미국의 핵무기보유량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통일과 관련시켜서 역량문제를 다룰 때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통일방법에 따라서 도움이 되는 역량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이다. 무력통일에 소요되는 역량과 평화통일에 소요되는

역량은 크게 다를 것은 재론을 요하지 않는다. 또 평화통일의 큰 테두리 안에서도 구체적 방법에 있어서 여러가지 안이 나올 수 있는데 어떤 안의 평화통일이냐에 따라서 소요되는 역량에 다소 차이가 생길 수 있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어떤 한 안만의 평화통일을 정해 놓고 그 목적에 따라서 역량배양을 추진한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북으로 부터의 무력침략이나 게릴라와 간첩 침투를 통한 내부적 교란에 의한 정부의 전복에 대해서도 대비하면서 어떤 방법의 평화통일에 든지 다 차질이 없는 역량배양을 꾀해야 할 것이다.

즉 다목적적이며 융통성 있는 역량배양계획을 기도하는 것이 본 논문에 주어진 과제라고 해석한다.

한반도 주변의 국제정세는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 한국은 이러한 국제정세를 기민하게 파악하고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현 자유중국이 겪고 있는 고립상태로 몰려 들 가능성이 짙다. 적응속에서 주체성을 추구하는 창조적 외교가 요청되는 시기라고 하겠다.

2. 정치적 안정과 체제적 정당성

외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량중의 하나가 정치적 안정이라고 할 수 있다. 정치적 안정을 피상적 안정과 실질적 안정의 두가지로 다루어서 고찰할 수 있다. 피상적인 안정이란 억압적인 사회분위기와 제약적인 정치구조속에서 표면적으로는 큰 반발없이 정권이 유지되는 경우를 말한다. 반발이 억제되고 지지가 강요내지는 동원된 상태에서의 안정이다. 반면에 실질적인 안정이란 국민대다수의 자발적인 지지와 신임속에서 사회내의 중요집단의 욕구가 비교적 잘 충족됨으로써 물리적인 통제없이 정권이 유지되는 경우를 말한다. 통일과 같은 장기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정치적 안정이 요구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또 통일이 장기적인 목적인 이상 어떤 특수정권의 안정보다도 체제적 안정에 기반을 두어야 된다는 것도 쉽게 수긍이 갈 것이다. 한국의 통일정책은 지속성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이는 한 정권의 의사로써만이 아니고 전국민적인 지지속에서 추진되어야 된다고 본다. 이런 의미에서 통일외교만은 정당간의 쟁점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국민적 입장에서 초당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그러면 실질적인 체제적인 안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체제의 정당성에 기초를 둔 국민의 지지와 신임이 필요하다. 현체제가 정당하고 타당하며 계속 유지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국민속에 널리 퍼져 있을 때 그 체제의 정당성이 확립되는 것이다. 어떤 특수층이나 집단을 위한 체제가 아니고 국민 다대수를 위한 체제라는 인식이 국민속에 널리 퍼져 있는데 그 체제의 정당성은 높아지는

것이다.

국민이 원하는 체제여야 하며 또 국민을 위하는 체제여야 한다. 국민의사와는 상관없이 강제로 부과된 체제는 정당성을 기대할 수 없다. 물론 국민이 원하지 않는 체제일지라도 언론을 통제하고 선전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어느정도 국민이 원하게 만들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정도문제로서 어느 한도 내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체제 자체가 워낙 국민의 의사와 상충될 때는 아무리 언론을 통제하고 선전을 강화해 보았자 그 체제가 국민에게 수락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보다 바람직하고 합리적인 방법은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체제를 개선해 나가는 방법이다. 즉 국민이 현재체제에 대해서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파악하여 좋아하는 면은 강화하고 싫어하는 면은 고치면 그 체제의 정당성이 증대된다는 말이다.

체제적 정당성의 증대를 위해서는 좋고 훌륭한 정치를 하면 된다고 쉽게 말할 수 있으나 그런 말은 별 의미가 없다. 그렇다고 일일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정당성이 증대된다는 것은 여기서 열거할 필요도 없다. 다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몇가지만을 여기서 언급하고자 한다.

3. 경제적 근대화와 분배정의

후진국에서는 경제근대화가 체제적 정당성의 중요 요소가 된다. 우선 못사는 백성을 경제적으로 잘 살게 만들지 못하면 그 체제의 정당성은 바라 볼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경제근대화란 생산의 증가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가난을 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생산의 증가가 필요한 것은 두말 할 것도없다. 그러나 생산의 증가에 못지 않게 중요성을 띄는 것이 분배적 정의이다. 아무리 경제가 고도의 성장을 유지해 보았자 국민의 일부만이 그 혜택을 입게 되면 그런 경제성장이 오히려 다수 국민에게는 불만의 씨가 되기 마련이다.

특히 여기에 강조하고 싶은 것은 소위 기대의 폭발이다. 경제적 근대화의 「슬로간」속에서 국민의 경제적 기대는 적당한 도를 넘어서 상승하기 마련이다. 그리고 일부 국민의 상승하는 생활수준은 다수 국민에게 불건전한 시각적인 자극을 주게 된다. 그 때문에 생산의 증가에만 치중하게 되면 중대한 사회적 정치적인 불안을 초래하게 되는 가능성이 짙다.

한국은 지난 60년대에 고도의 경제적 성장을 이룩했으나 분배적 정의를 어느정도 소홀히 했다고 볼 수 있다. 분배의 정의란 노사간의 문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과세와 정부사업을 통한 국민소득의 간접분배도 포함된다. 분배정의는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다 정치적 관점에서 더욱 중요시된다. 정부는 앞으로 분배정의의 구현에 본격적인 노력을 해서 「부익부 빈익빈」의 고질을 타파하고 국민이 다 함께 골고루 잘 사는 경제를 이룩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골고루 혜택을 받는 경제성장이라야 비로소 자유경제체제의 정당성을 높이게 될 것이며 통일을 위한 중요한 역량이 될 것이다.

빈부의 격차의 해소와 더불어 정부가 노력해야 할 것은 도시와 농촌간의 격차의 해소이다. 여러가지 악조건 속에서 경제성장을 이룩해야 했기 때문에 공업에 치중하고 농업개발을 소홀히 한 것은 어느 정도 합리성을 띈 경제정책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책은 현시점에서 적어도 두가지 관점에서 재검토 되어야 한다. 첫째로 정도의 문제로서 아무리 공업부문의 개발이 중요하다 해도 농업부문의 지나친 낙후는 정당화할 수 없다. 특히 민주체제를 부르짖는 국가에서 인구의 과반을 점하고 있는 농촌의 개발을 너무 소홀히 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둘째로 지금은 10년이나 5년전과는 달리 공업부문이 어느정도의 발전을 했기 때문에 낙후한 농업부문의 미개발이 오히려 공업부문에 대한 발전을 막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 국가적 자원면에서는 전과는 달리 농업부문에 보다 더한 투자를 허용한다고 볼 수 있다. 공화당에서는 이번 선거에서 농업부문의 개발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또 이것이 3차5개년계획에 이미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여당에서는 이 문제를 시인할 뿐 아니라 재고를 하고 있다는 증거가 보인다.

근대사회의 특징은 충실한 사회복지제도의 실시라고 할 수 있다. 중진국의 위치를 향해서 달리는 한국도 이제는 사회복지문제에 보다 큰 관심을 보여야 한다. 특히 대공경쟁에서 복지의 소홀이 큰 약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 아무리 자유가

Ⅲ 급 비 밀

좋고 자유기업이 좋다 해도 같은 먹을 것이 없어 굶고 있는 국민이 있고 의약의 혜택을 못 받고 병에 죽어가는 국민이 있어서는 인간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일이며 선전적으로 큰 약점이 잡힐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제 사회적인 문제를 여기서 논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이 논문의 명제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 같으나 이런 문제를 정치적 측면에서 평가했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싶다. 물질적으로 모든 사람이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이룩함으로써 체제의 정당성을 강화하고 정치적 안정을 증대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Ⅲ 급 비 밀

4. 자유확장과 민주체제확립

후진국에서 경제근대화와 더불어 큰 중요성을 띄는 것이 민주체제의 확립이라고 하겠다. 민주화에 대한 기대와 희원은 전세계적인 것으로 특히 공산체제와의 경쟁에서 자유민주체제의 확립은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 필자는 1965년에 전국 18세 이상 70세 미만의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을 무작자 추출하여 정치의식에 대한 면접조사를 시행한 일이 있다. 1,332명의 면접에서 얻은 결과가 여기에 참고가 될 것 같다. 총면접자중 454명이 민주주의의 장점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의사를 표시했는데 이들 중 꼭 4분의 3(336명)이 「자유」를 들었다. 즉 민주주의의 장점은 「자유」 「개성의 존중」 「인간기본권의 보장」등 억압과의 상반개념을 언급했다. 그리고 454명의 약 20%(88명)가 「다수의사존중」 「민의에 의한 정치」 「국민대표에 의한 정책결정」등 민주주의의 절차적인 국면을 들었다. 평등이나 무계급성을 든 사람이 7%(31명)였고 법치제를 든 사람이 1%(4명), 자본경제를 든 사람이 1사람이었다. (신동아 1970년 3월호 「한국국민의 정치관」 참조)

이 조사결과는 민주체제로 부터 국민이 어떤 기대를 걸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여기에 나타난 「민주주의를 자유」라는 관념은 독재체제에 비해서 민주체제에 기대하는 것은 자유의 충족이라는 해석을 가능케 한다. 민주체제의 존재의의가 곧 자유에 있는 것이다.

한국은 여러가지 국내외적인 여건때문에 자유에 대한 제약을 가

하지 않으면 안 되었었다. 물론 이런 제약중에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 많다고는 하더라도 자유의 제약은 곧 공산체제에 대한 민주체제의 매력을 그만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한 신중한 재검토가 있어야 할줄 안다. 자유에 대한 제약의 해제는 그만큼 행정적으로 군사적으로 어려움을 증대시키는 것이 되겠지만 반면에 민주체제의 정당성을 그만큼 증대시키는 결과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단기적으로는 경찰력과 군사력의 증대를 요하기 때문에 값비싼 정책이 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자유영역의 확대는 곧 체제정당성의 강화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체제에 대한 자발적 지지가 커질 것이며 인적 물적 의미에서도 장기적으로는 경제적인 조치가 될것이다. 또한 통일이란 궁극목적의 달성을 위해서는 자유속에서 생활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통일이 이루어지는 경우 현재와 같은 국민생활의 통제를 유지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우며 국민의 자발적인 민주체제의 선택과 지지에 의존하는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민주적 정치안정은 건전한 여야관계가 성립되어 평화적 정권교체가 가능한 상태에서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대다수가 집권당에 대해서 실증을 느낄때 선거를 통해서 그늘을 밀어 내고 새 사람들로 하여금 집권하게 하는데 그 특색이 있다. 평화적 정권교체의 가능성은 평화적 정치의사표시의 가능성이다.

이런 관점에서 이번 선거에서의 박대통령의 발언은 큰 관심을 끌었다.

즉 공화당내에서도 지도권을 인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며 야당도 집권할 자세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시점에서의 정권교체는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는 말이었다.

그는 또한 3선후 이 문제에 마음을 써서 공화당내에서 후계자를 양성할 뿐 아니라 야당도정권인수 태세를 갖추도록 협조하겠다고 했다. 이와 같은 공약이 잘 이행되어 평화적 정권교체가 가능하게 될 때 체제의 안정은 그만큼 강화될 것이다.

5. 부정부패의 해소

후진국에서의 민주주의시도에서 흔히 나타나는 부작용이 부정부패문제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부정부패가 한국특유의 현상이 아니다. 그러나 부정부패가 개발도상국가의 민주체제의 정당성을 파괴하는 중요 요소라는 것은 누구나 다 시인할 것이다. 이번 양대선거에서도 부정부패가 가장 중요한 선거쟁점이 된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한국에서 심한 부정부패가 있다는 것은 야당이나 비판적인 언론인이나 학자들만의 주장이 아니고 여당과 정부에서도 인정하는 일이다. 그래서 박대통령도 3선호소에 있어서 부정부패의 일소를 강력히 약속했던 것이다.

부정부패가 모든 개발도상국가에 공통된 문제라는 것은 그만큼 해결하기 힘든 문제라는 의미도 된다. 사회의 전근대성의 노증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부정부패의 일소는 근대화작업의 중요항목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울 수 있다.

어떤 문제든 그 해결을 위해서는 그 문제의 원인 파악을 올바로 해야 한다. 부정부패가 단지 공무원의 정신적 해이에만 기인한다거나 그들의 생활이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너무 단순한 생각이다. 물론 공무원의 대우를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고 새로운 정신적 자세를 갖추라고 강조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그런 단순한 노력과 병행해서 좀더 근원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또 부정부패가 여당이나 정부에만 국한되어 있는 문제로 보는 것도 큰 착각이다. 이번 신민당내에서도 자체내의 부정(전국구

공천과 관련해서) 문제를 조사하는 조사위까지 구성한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일이다. 또 국민이 「부정의 고객」이 되어 주지 않는 상황하에서는 부정이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한국에 부정과 부패가 널리 퍼져 있다는 것은 그만큼 국민도 부정에 참여 내지는 장려해주었다는 반증이 된다. 즉 부정부패는 어느 한 정권의 문제만이 아니고 한국사회 전체의 문제라는 점을 바로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부정부패의 해결책을 모색하는데 있어서 정부의 구조나 형태만을 들여다 볼 것이 아니라 사회의 구조, 문화적 특성, 국민의 형태등 다방면으로 연구해야 한다. 여기서는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하지 않고 다만 해결책을 모색하는 방법을 논하려고 한다.

무엇보다 먼저 행해져야 할 작업이 부정부패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이다. 부정부패가 있다는 것은 그리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부정부패의 해소를 위한 좀더 합리적인 노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더욱 부끄러운 일이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 문제를 양성화해서 부정부패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를 장려하고 후원해야 한다. 좋은 처방은 정확한 진단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 진단을 제대로 못하고 처방을 내리는 일은 돌파리 의사나 하는 짓이다. 부정과 부패에 대해서도 먼저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서 정확한 진단을 내린 다음에 부정부패 해소를 위한 정책적 처방을 내려야 할 것이다. 정부는 부정부패연구를 위한 본격적인 노력을 취해야 한다. 이런 연구는 정치적인 무풍지대에서 자율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종합과학적인 성격을 띄워야 한다. 적어도 정치학, 행정학,

재정학, 경제학, 심리학, 사회학을 하는 전문가들이 참여해야 할 것이며 발표보다도 정책잠언이 연구목적이 되어야 한다. 단체적인 연구와 개별적인 연구가 병행하는 것이 좋을 것이며 연구하는 학자들의 독창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6. 국민일체감의 증대

금년 양대선거에서 큰 문제로 부각된 것이 지역감정이다. 영남 사람들이 공화당에 대해서 강력한 지지를 보인 반면 호남 사람들은 강력한 반발을 보였다. 그래서 공화당대 신민당의 경쟁이 영남 대 호남의 싸움처럼 되어 버렸다. 이것은 극히 불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더욱 불행스러운 것은 이것이 이번 선거에만 국한된 우발적인 현상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저변에 깊이 뿌리 박고 있는 문제라는 점이다. 다만 현직 대통령이자 공화당후보였던 박정희씨가 영남출신이요 신민당후보인 김대중씨가 호남출신이었기 때문에 깊이 뿌리 박고 있는 지역감정이 이번 선거를 통해서 정치적으로 표면화 되었을 뿐이다.

지역감정은 한국인의 협량하고 배타적인 대인관에 기인하는 것 같다.

즉 지연과 혈연과 출신교를 따져서 「우리」와 「남」을 구분하고 「우리」끼리는 모든 것을 나누고 서로 도우나 「남」에게는 인간적 친절이나 선의 마저도 거부하는 것이 한국인의 대인태도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보편적 인 대인태도가 아니고 편협 한 대인태도이다. 이와 같은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은 현대국가의 건설에 많은 지장을 줄뿐 아니라 국토통일과 같이 전국민의 지지를 동원해야 하는 정책목적의 달성을 위해서는 큰 장애물이 된다.

여기서도 부정부패문제에서와 마찬가지로 단순한 처방이 허용되지 않는다. 과학적인 연구를 기초로 하는 정확한 문제의 진단이 선행

되어야 한다.

연구의 대상은 단순한 지역감정에만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국민결합을 저해하는 모든 문화적,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요인을 제거하는 광범위한 목적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어떻게 하면 지연, 혈연, 출신교등 배타적인 기준으로 대인관계의 방향을 정하고 국민습성을 지양하고 좀 더 포함적이고 개방적인 대인관을 확립할 수 있는지를 종합과학적으로 연구 조사해야 할 것이다. 국가적인 연구비 지원으로 학자들의 개별적인 국민결합연구를 장려할 필요가 있으며 학문적인 자율성이 보장되는 조건하에서 국민결합연구원 같은 국립연구기관을 설립해도 좋을 것이다. 여기서도 정치학, 사회학, 경제학, 행정학, 법학, 심리학등 제사회과학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야 할 것이다.

이런 연구가 결실하게 되면 그것을 기초로 다방면의 정부의 구조적 내지 형태도 공작이 뒤따라야 하며 국민의 사고방식의 개조를 위한 전면적인 국민재교육이 있어야 할 것이다.

물론 현시점에서도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전연 없는 것은 아니다. 인사행정에서 적절한 조치가 소망스러운 일이며 예산조치에 있어서도 지역적인 안배가 요망된다. 또 이와 관련해서 한가지 강조되고 싶은 것은 능력보다 개인적 충성을 더 중요시하는 동양적 충원 및 승진 방법의 의식적인 재고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개인적 충성심이 중요시되는데는 불신풍조가 그 중요 원인이 되겠지만 정부나 사단체에서 개인적 충성심을 사람 쓰는 가장 중요한 척도로 삼고 있는 한 불신풍조가 살아지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개인적인 충성은 배타적인 성격을 띄고 있어서 한 사람에게 국한 충성해야 하기 때문에 한사람에게 충성은 남으로 부터 불신을 받을 원인이 되는 것이다. 국민적 결합의 중요방법으로써 능력위주의 인사행정을 정부나 사회전반에서 의식적으로 수행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7. 지식층ㆍ학생층의 체제소외감의 해소

투표형태나 여론의 분석에서 한국사회의 어떤 계층에서는 특히 지식층이나 학생층에서 상당한 체제적 소외감을 보이고 있음이 들어난다.

물론 공화당이 제3공화국의 출범이래 계속하여 집권해 왔기 때문에 소외감이란 주로 공화정권에 대한 소외감이라고 볼 수 있지만 꼭 공화당이나 정부에 국한된 소외감은 아니다. 기존질서 전반에 대한 소외감이요 야당으로 부터도 상당한 소외감을 느끼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 글이 정부를 위한 글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주로 정부와 여당에 관한 소외감을 논하고 그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한다.

지식층은 현재의 「오피니온 리더」이며 학생층은 미래의 지도자요 「오피니온 리더」이다. 이들로 부터 지지와 신임을 못 받는다는 것은 그 체제의 정당성에 심각한 균열이 생겼다는 의미이다. 이들로 부터 정부가 많은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투표형태에서 나타나며 사적인 대화에서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이들로 부터의 지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물론 전반적으로 정치를 잘 해야겠지만 특히 이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몇가지 문제에 정부의 각별한 노력이 요망된다.

첫째로 지식층과 학생층이 가장 갈망하는 것은 학문과 언론의 자유의 보장이다.

학생과 학자들의 연구와 토론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의 조성이 급선무이다. 그리고 언론매체에 가해지는 제약은

될 수록 해소함으로써 민주체제의 참된 체모를 갖추어야 한다. 공산체제와 비교해서 민주주의의 상 적 매력이 자유인데 이 자유에 타협이나 제약이 있어서는 민주체제의 존재가치가 그만큼 감소되는 것이다.

또한가지 정부로서 당연히 해야 하고 또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사학의 합리적인 규제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몇몇 소수인의 학원경영자의 사익을 위해서 수만 교사와 교수가 빈혈상태에 빠졌으며 수백만 학생이 영구히 정신불구아가 되어가며 수백만의 학부형들의 가치투입이 사기당하고 있는 형편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하나의 본격적인 교육혁명이다. 이런 교육혁명은 적어도 세 가지 차원에서 시도되어야 한다.

첫째로 교사와 교수의 처우를 적당한 선까지 향상시켜야 한다. 예산자원이 문제가 되겠지만 사립교인 경우 공납금으로 들어온 자원의 사용을 직접 교육목적에 국한시킨다면 교사와 교수의 처우를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자원이 확보될 것이다. 이들의 처우개선의 중요성은 그들의 교육적 위치의 중요성에 기인된다. 이들의 생활보장이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참다운 생산적인 교육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둘째로는 교과서와 교과목의 합리적 개선과 교육방법의 근대화이다.

문교부와는 독립된 정부로 부터 자율성이 보장된 기관(교육규제위원회)에서 교과서의 검정과 교육감독의 기능을 맡도록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변화해가는 교육방법의 기민한 수입과 검토, 또 이의 실시해 위한 교육방법의 개발을 정부에서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한국 근대화 작업이 교육근대화이고 이 교육근대화를 통해서 한국의 제반 역량을 배양하는 기본단계가 될 것이다.

세째로 전항에서 언급한 독립된 감독기관에서 제, 사립학교의 예산 결산을 감독하는 기능을 갖게 하여서 직접적 교육목적외에는 학생들로 부터 받은 학교예산의 지출을 금지하도록 해야 한다.

즉 학생들로 부터 받은 돈은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서만 쓰이도록 행정적 감독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그리고 이런 기관에서는 각급 학교를 위한 예산 모델을 만들어서 각학교에서 이를 따르도록 함으로써 교육비의 합리적 운용을 시도하는 것도 중요한 일일 것이다.

이와 같은 교육혁명은 필요한 것이고 소수의 부당한 이익은 방해되나 현재의 수백만 국민과 후세 국민의 이익을 증진하는 일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할만한 일이라 하겠다. 이런 혁명을 통해서 정부는 학생층과 지식층의 지지를 늘일 수 있다.

8. 범국민적통일, 협의체의 구성

통일문제는 장기적인 정책을 요한다. 따라서 어느 한 정권의 의사에만 의해서 정책이 결정되는 것 보다 초당적인 기구나 절차를 통해서 정책이 결정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장기적인 목적의 추구를 위해서는 정책의 지속성이 요망된다. 그러나 정권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한 정권에만 의존하는 통일정책에는 지속성을 기대할 수 없다.

또한 대외적으로도 통일과 같은 문제에는 국민의 총의가 표현되어야 그 정책의 신빙성이 커지고 그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정권은 교체될 수 있다. 또 정권의 교체에 따라 그 정권의 의사로 결정된 통일정책이 새 정권에 의해서 폐기될 수도 있다. 즉 한 정권의 의사에 의해서 결정된 통일정책은 그만큼 장래의 지속성이 의문시 된다는 말이다. 정책의 장래적 확실성이 결여되면 그 정책의 국제적 설득력은 감소되는 것이다.

국내적으로도 통일정책을 초당적이고 총국민적으로 추구할 이유가 있다. 통일정책은 어떻게 보면 헌법보다도 더 중요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헌법의 개정에 있어서 단순 과반수의 동의로 결정하지 않고 특수 가반수를 요하는 절차를 쓴다. 통일정책도 그 중요성에 비추어서 일반정책의 결정과정과는 달리 집권당의 의사만이 아니라 그 외 야당과 중요 사회 집단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절차적 조치가 요망된다고 하겠다. 즉 통일문제와 대북한정책만은 정당정치의 영역을 벗어나서 국민적 입장에서 다루어져야 한다는 말이다.

이번 선거에서 공화·신민·양대당은 통일과 안보문제를 선거의 쟁점으로 삼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나 선거운동의 진행중 승리에 열중한 나머지 양당이 공히 통일과 안보문제를 선거쟁점화하고 말았다. 어느 당이 책임이 있는지는 여기서 따지지 않겠으며 또 따질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다만 통일과 안보를 선거 이슈로 삼음으로써 국가이익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만 지적하고 싶다. 한 당이 「A」라는 통일이나 안보 정책을 내 놓으면 다른 당은 「A」 정책에 속으로 동조하더라도 트집을 잡거나 반대하는 경향이 있다. 또 국내 정치에서의 이점이 앞서기 때문에 순전히 국제정치적인 견지에서 국가이익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추구가 힘들어진다.

범국민적인 통일 안보 협의체가 제 기능을 발휘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여야간에 통일과 안보를 국내정치적 이슈로 삼지 않겠다는 선의적인 합의가 있어야 한다. 상호불신하는 현상황하에서 이것이 어렵다는 것은 가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그러나 어떤 점에서는 문제가 중요한 만큼 다른 면에서는 불신 때문에 불가능한 협의도 이 문제에서만은 가능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 문제에서 어떤 협력관계가 성립되면 그런 선의의 관계가 다른 문제에 까지 확대되어서 한국정치풍토개선의 중요 계기가 될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집권당이 다수를 대표하기 때문에 그런 협의을 끼쳐서도 궁극적으로는 정책결정에 있어서 집권당이 주도하게 되기 마련이지만 집권당은 수적 우세만 고집하지 말고 야당의 의견도 들을 것은 듣는 아량을 보여야 할 것이다. 야당은 자기네 의견이

정책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생각될 때도 너무 성급히 이를 집권당의 배신이라고 규탄하는 것을 삼가고 선의속에서 집권당을 설득하려는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이다. 또 가능하면 통일과 안보를 논의할 때 당성을 초월하는 자세를 취함으로써 어느 당이 어떤 안을 밀고 있다는 식의 사고를 지양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즉 통일정책은 수를 떠나 질위주로 결정되어야 하고 당을 떠나 국민위주로 결정되어야 한다.

여야 정치인외에 이런 협의체에는 통일문제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이 참가해야 할 것이다. 통일문제와 같이 복잡한 문제는 단순히 여론에 의해서만 결정되어서는 안된다. 다수결을 원칙으로 하는 민주주의에 약간 어긋나는 일이 있더라도 이런 문제는 질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국내외의 소위 「두뇌」가 총동원되어야 할 것이다. 「보따리장수」 연구용역을 벗어나서 정말 연구하고자 하는 의욕이 생길 수 있는 예산조치와 연구환경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비용은 다소 들더라도 시뮬레이숀리서취 (Simulation research)같은 것이 본격적으로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연구는 제통일대안에 대한 타국의 반응을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이외에도 전문가들의 개별적 내지 단체적 연구가 장려되어야 한다.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통일에 관한 국민의 의사와 태도 측정이 계속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꼭 연구결과를 발표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적어도 정책결정의 참고자료를 위해서도 그런 연구는 불가결한 것이다.

이 외에도 중요 사회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의 의사가

충분히 표시될 수 있는 절차가 취해져야 한다. 과거의 소위 「원로」를 모시고 비생산적인 방법을 지양하고 젊고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 원로가 역사의식이 있다고 하나 그들의 역사의식은 복고적인 면이 있는 반면에 젊은이의 역사의식은 미래지향적이고 창조적인 면이 있는 것이다.

9. 이념교육의 재조정

한국에서 여태껏 취해온 이념정책은 다분히 부정적인데로 치우쳤다고 할 수 있다. 이승만대통령 치하에서는 반공 반일이 국시로 여겨졌으며 현재도 반공에 큰 역점을 두는 것이 뚜렸하다.

반공이 나쁜 것이 아니다. 반공에 그치는 것이 나쁘다. 즉 부정적인 이념정책은 환경의 변화에 따라 무력해질 수 있다. 지금은 일방적인 반공선전만이 허용되기 때문에 부정적인 반공정책이 효과가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통일이 된후나 또는 그 이전에 공산선전도 허용이 되는 날 단순한 반공선전은 큰 효과가 없었음이 들어날 것이다.

보다 합리적인 이념정책인 부정보다 비판을 중요시해야 한다. 공산주의가 무조건 나쁘다는 것을 강조하고 공산주의에 대한 증오감을 불러일으키는 정책은 공산선전이 허용될 때 무력해진다. 그대신 비판적인 태도를 길러주면 달콤한 공산선전을 비판적으로 접할 수 있기 때문에 공산측선전의 허위성을 곧 인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무조건 나쁘다는 것 보다도 공산주의의 무엇이 나쁘다는 것을 비판적으로 지적하고 또 어떤 면이 좋다는 것도 긍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비현실적인 반공선전은 우선은 괜찮을지 모르나 공산주의자들도 경쟁적으로 선전에 참여할 수 있을 때 큰 역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그리고 민주주의도 무조건 좋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떤 점이 좋고 어떤 점이 나쁘다는 것을 비판적으로 교육시켜야 한다. 그리고 공산체제와 민주체제의

장단점을 객관적인 관점에서 비교함으로써 현실적인 고려에서도 「아무래도 민주주의가 낫다」는 결론이 나오도록 교육시켜야 할 것이다.

이것은 현재 실시되고 있는 반공선전이나 교육의 현실화를 의미한다. 선전에 있어서도 장기적으로는 결국 사실선전이 과장선전이나 허위선전보다 훨씬 효과적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과장이나 허위는 한번이나 두번쯤은 효과가 있으나 오래 계속하면 그 과장성이나 허위성이 들어나서 선전자의 공신력이 상실됨으로 나중에 사실을 말할 때도 그것을 불신받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비근한 예로 남산 어린이회관에 6.25동란에 대한 그림이 있는데 북괴군의 얼굴은 모두 동물적이고 잔인한 인상을 준다. 단기적인 효과는 이런 그림을 보고 북괴에 대한 증오감을 가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좋을지 모른다. 그러나 어린이들이 크면 북괴군도 같은 동포임으로 외모로 부터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은 도저히 믿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통일이 된 후나 그 이전에 이들이 북괴군이나 공산당을 직접 보았을 때 결국 그들도 겉보기에는 우리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며 그와같이 비사실적인 선전정책을 취해온 한국정부의 공신력이 손상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단순한 반공대신에 비판적인 이념교육을 시도해야 할것이다 비사실적이고 과장된 선전을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적인 조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여러가지 통일을 위해서 시도해 볼 만한 방안들이 현재의

이념정책과 법체제하에서는 아주 어렵기 때문에 통일을 적극적으로 추구하자면 이념과 대공선전 정책의 전면 재검토가 아주 시급하다.

10. 국제적 동조와 순리적 자세

국제정치는 꼭 힘으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외교력도 꼭 힘에 의해서만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의 중요요소로 들 수 있는 것이 국제적 동조(International responsiveness)이다. 외교관들이나 정치가들이 국제적 협상에서 지나친 감정에 휩쓸리라고 기대할 수는 없다. 그러나 감정이나 무의식은 전연 배제할 수 도 없다.

국제적 동조란 어떤 국가에 대한 타국 국민이나 외교관의 심리적 태도를 말한다. 「같은 값이면」 동정, 협조하려는 자세를 말한다. 그러면 이런 국제적 동조는 어떻게 개발할 수 있는가? 주로 그 국가의 국제적인 이미지를 개선함으로써 국제적인 동조의 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

첫째로 국제사회에서 순리적인 구성원임을 보여 주어야 한다. 국제사회는 여러 구성원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국의 의사만 고집하는 것은 무리이다. 또 그 의사 자체가 타국의 의사와 전연 맞지 않을 것일 때는 더욱 무리가 된다. 그래서 순리적인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국제정세의 흐름에 민감해서 언제 어떤 주장을 하고 또 언제 어떤 양보를 해야 할지를 기민하게 결정할 줄 알아야 한다.

정당성은 고사하고 국제조류에 역행하는 주장을 오래 고집하는 것은 국제적인 동조를 잃는 좋은 방법이 되고 만다. 특히 약한국의 경우는 국제적 자세가 주로 적응적인 것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타국의 반대나 불응에 불구하고 우리 의사를 고집할 수

있는 힘의 배경이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제언하고 싶은 것은 국제사회의 특히 강대국의 국제적 자세가 비이념화되고 있음에 비추어 한국도 자세조정이 요망된다는 점이다. 물론 강대국이 이념적인 태도를 완전히 버렸다는 말은 아니다. 그러나 근래의 미•소관계나 미•중공관계에서 나타났드시 대개 이념적인 공존관계를 수락하고 실리추구적인 입장에서 서로 경쟁할 때는 경쟁하고 협조할 때는 협조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독일의 대동독자세도 이런 측면을 강하게 보여 주며 일본도 쏘련이나 중공과의 관계에서 정치는 눌르고 경제문제를 우위에 놓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영국이나 불란서가 실리적인 국제자세를 취한지도 오래된 일이다.

한국은 국제관계에서 다분히 이념적 내지 교조적인 자세를 지켜왔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자세는 미•쏘 중심의 양극화된 국제사회에서는 어느 정도 용납이 되었으나 미•쏘가 극한적 대립관계를 벗어나서 대립•협조의 혼합관계를 모색해 나가고 있는 현시점에서는 부적합한 것이다.

최근에 정부는 어느 정도의 이념적 융통성을 보이기 시작했다. 즉 작년의 펜대회시 공산국가의 대표에게 입국허가 한 일과 금년 초에 최규하 외무장관이 비적성공산국가와는 교역의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한 것이 정부의 태도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시사해주었다. 이런 융통성은 환영할 만한 일이며 앞으로 좀더 구체적인 실천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것은 공산주의를 용납하라는 것도 아니요 수락하라는 것도 아니다. 이념적 다원화 현실을

수락하라는 말이다. 국내정치에 있어서나 국제정치에 있어서나 적은 가능한한협의로 제한 정의하는 것이 유리한 법이다. 확대해석으로 필요이상의 적을 만들 필요는 없다. 분명한 적이 아닌 때는 속으로는 경계하면서도 겉으로는 친선을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인 외교태도이다.

자유중국의 지금의 처지가 한국에게 좋은 교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자국의 입장을 너무 고집하고 이념적으로 너무 고착적인 자세를 취해 왔기 때문에 현재 자유중국은 국제사회에서 거의 완전 고립상태에 빠져 버렸다. 자유중국의 입장이 정당한 것인지 아닌지는 여기서 논할 필요가 없다.

다만 그 입장이 국제사회에서 먹혀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만 지적하면 된다. 그렇게 국제사회에서 동조를 받지 못했을 때는 마땅히 자기자세의 수정을 검토해야 한다. 그러나 자유중국은 불리한 국제정세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자국의 본래 입장을 고수하려고 했고 그 결과는 국제적 고아상태를 자초했다.

- 통일은 정책목적 자체가 이념적 타협을 요구하며 이념적으로 다양한 국가의 협조를 필요로 한다. 무력통일 아닌 평화통일은 공산주의와의 어떤 이념적인 타협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념 내지 교조적 외교는 그 목적에 비추어 알맞는 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 또 목적이 이념적 상대성을 요구하는데 방법이 이념적 절대성을 기초로 하고 있으면 과연 진의가 통일에 있는지 의심받게 될 것이다.

11. 국제적 신뢰와 성실한 외교

국제적인 동조를 받기 위해서는 자국의 입장에 대한 이해가 앞서야 한다. 이해를 통한 동조를 얻기 위해서는 그 나라 발언의 신빙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국제정치에서 자국의 입장을 사전에 다 밝히라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선전적인 고려를 완전히 배제하라는 말도 아니다. 이것도 정도의 문제로서 속임수나 과장된 선전도 어떤 범위내에서 써야 되며 대체적으로는 성실성을 외교행동의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는 말이다. 특히 우방과의 관계에서는 허위보다는 오히려 사실이 유리한 것이 대부분일 것이다. 영국과 미국
8 의 관계가 상호 성실성을 보임으로써 서로의 신빙성이 인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할 때 최대의 협조가 가능한 것이다. 또 스위스가 국제적으로 신임을 받고 있어서 객관적인 역량이상으로 국제적으로 유력한 역할을 하는 것을 본다.

진지한 협상에서는 물론 선전에 있어서도 과정선전 (hardsell) 보다는 진실설득 (Soft sell) 이 더 효과적인 것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대립관계에 있는 나라와의 홍정에서는 어느정도 별문제이지만 그렇지 않는 나라와의 교섭에서는 과장이나 허위보다 사실을 성실하게 설득시키는 외교적 테크닉이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다. 외교적 효과를 단기적인 견지와 장기적인 견지에서 측정할 수 있는데 특히 장기적인 견지에서 볼 때 성실한 외교적 태도가 중요하다. 토끼털을 밍크라고 속여 파는 것이 한두번은 가능할지 모르나 그것이 계속하면 나중에는 진짜 밍크털을 밍크털이라고 해도 교지

듣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놀에서 장난으로 「늑대야」하고 소리 쳐서 사람들을 속인 소년이 나중에 정말 늑대가 나타나서 「늑대야」하고 소리 쳤을 때 아무도 도우려 오지 않았다는 우화에서 우리는 배울 것이 있는 줄 안다.

그리고 현대는 정보의 시대로서 대부분의 경우 상대방도 상당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즉 과장이나 허위를 내세웠을 때 상대방이 그것이 과장이며 허위라는 것을 곧 알 수 있다는 말이다.

북괴의 대남선전(방송이나 전단)이 「하드 셀」의 방법을 쓰고 있음을 본다. 주로 과장과 허위를 선전내용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남한에서 별 효과를 못거두는 결과를 가져 온다.

또 북괴의 국제적 형태도 성실성이나 진실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국제적 동조를 받지 못하고 있음을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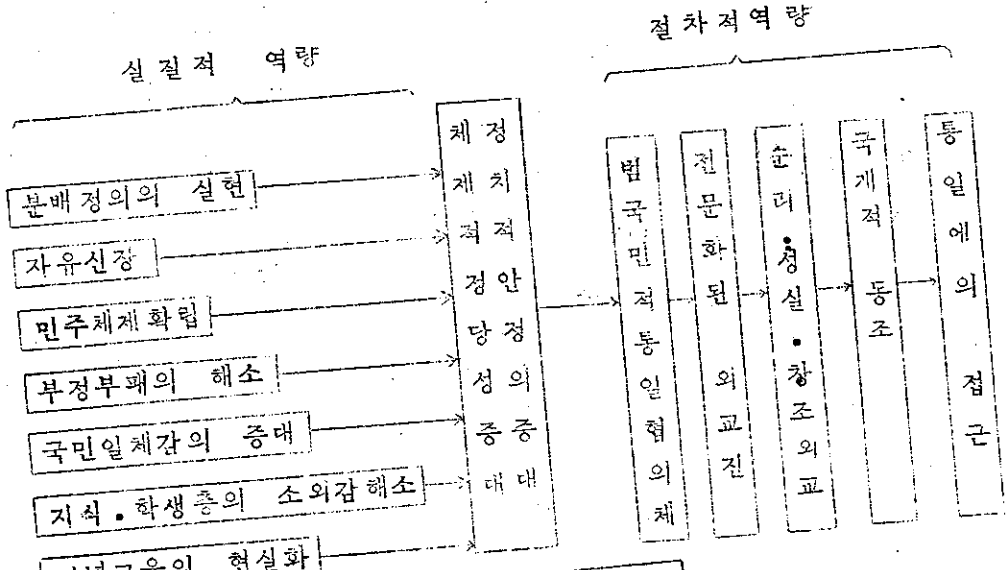
이럴수록 남한은 진실성과 성실성을 외교행동의 기준으로 함으로써 북괴와의 대조를 보이고 국제적 동조를 얻는 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외교진의 충원문제도 신중한 재검토를 요한다. 외교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요구하는 직업이다. 따라서 아무리 다른 방면에서 능력을 발휘했다고 해도 외교에서도 꼭 유능하리라고 기대할 수 없다. 그래서 특수한 경우외에는 직업적인 외교진외에서 외교관이나 실무자를 충원하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

Ⅲ 급 비 밀

12. 결 론

지금까지 논한 것을 두가지 역량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하나는 실질적 역량이요 다른 하나는 절차적 역량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적 근대화, 분배의 정의, 자유신장, 민주체제확립, 부정부패의 해소, 국민일체감의 증대, 체제적 소외감의 해소, 이념정책의 조정등은 실질적인 체제적 역량의 배양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런것을 통하여 체제의 정당성과 안정이 증대되는 것이다. 반면 범국민적 통일협의체의 구성, 외교진 충원의 합리화, 그리고 순리적이고 성실하며 창조적인 외교자세의 확립은 절차적인 역량으로서 체제적인 역량이 통일목적에 충분히 효과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해주는 구비조건인 것이다. 도표로서 이를 아래와 같이 표시할 수 있을 것이다.



Ⅲ 급 비 밀

북한과의 경쟁에서 우리의 입장을 유리하게 만드려면 우리의 약점을 제거하고 우리의 강점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공산체제와의 비교에서 우리의 약점으로 들 수 있는 것이 분배정의의 불충분한 실현과 심한 부정부패의 미해소라고 할 수 있다. 또 국민이 지역감정등으로 어느 정도 일체감을 상실한 것과 지식층과 학생층에서 찾아 볼 수 있는 현질서에 대한 어느 정도의 소외감 내지 불만도 우리의 약점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약점을 하루 빨리 해소함으로써 우리의 통일역량을 배양해야 할 것이다.

북한에 비해서 우리의 장점이라고 들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 자유요 민주제도이다. 그러나 자유가 제한되어 있다는 것은 그 만큼 우리의 강점을 무효화시켜 버리는 결과가 되어 보다 튼튼한 민주주의를 실현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도 우리의 강점을 그만큼 중화해버리는 결과가 된다. 이와 같은 우리의 장점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우리의 입장을 더욱 유리케 해야 할 것이다.

북한은 국제적으로 고립되어 있으며 경원시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도 만족할만한 국제적 위치를 획득치 못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북한과는 달리 더욱 순리적이고 성실성있는 외교적 자세를 취함으로써 국제적 동조를 증대하면 그만큼 우리의 입장이 강화될 것이다.

인위적장벽 및 긴장완화규정

목 차

1. 인위적 장벽 및 긴장완화규정 135

가. 북괴가 본 한국의 인위적 장벽 135

나. 한국이 본 북괴의 인위적 장벽 136

2. 긴장완화 138

가. 긴장의 요소 (남북) 138

(1) 군사적 요소 138

(2) 정치적 요소 139

(3) 경제적 요소 139

(4) 사회적 요소 140

나. 긴장완화 및 인위적 장벽 제거 방안 140

(1) 제거방안에 있어서의 원칙 141

(2) 구체적 방안 141

(가) Radio 방송교환 141

(나) 면 회 143

1) 직계가족간의 면회 143

2) 친척, 지인간의 면회 144

(다) 서신교류 146

1) 직계가족간 교류 146

2) 친척, 지인간 교류 147

3) 개인과 단체, 단체와 단체간 교류 147

외

1

C

(나) 인사교류 ---------- 150

1) 기자교류 ---------- 150

2) 관광인교류 ---------- 150

3) 풍습, 가정행사를 통한 가족교류 ---------- 150

(마) 체육교류 ---------- 153

1) 국제경기에 공동출전 ---------- 153

2) 남북단일팀 구성 ---------- 153

3) 남북체육교류 ---------- 153

(바) 예술교류 ---------- 155

1) 개별예술인 교류 ---------- 156

2) 예술단체 교류 ---------- 156

(사) 문화영화교류 ---------- 158

1) 생활문화영화 교류 ---------- 158

2) 관광, 문화재, 고적영화교류 ---------- 159

3) 직업별, 부문별 문화영화교류 ---------- 159

4) T·V방영교류 ---------- 159

(아) 각종출판물 교류 ---------- 161

(자) 경제교류 ---------- 163

1) 공동어로 ---------- 163

2) 남북어로와 자유화 ---------- 163

3) 상품교류 ---------- 163

㉮ 남북공동상품전시장 개설 ---------- 163

㈏ 전시장에서 상품교류 163

㈐ 남북교역 164

(차) 군 축 167

1) 부분군축(육·해·공군의 감군) 167

(카) 평화협정체결 169

1) 간접침투 중지 169

2) 심리전 중지 170

3) 정치범 교환 170

4) 평화협정체결 170

(타) 기상정보 교류 171

1. 인위적 장벽 및 긴장완화규정

인위적 장벽에는 근본적인 것과 부차적인 것으로 나누워 설명될 수가 있겠다. 근본적인 장벽이란 제2차대전의 종결과 더불어 나타난 동서양 대진영의 이데오르기적 대립과 국제 양 대세력간에 대립현상이며, 부차적인 장벽이란 근본적 장벽으로 인하여 수반된 냉전하의 남북의 인위적 산물들로서 그것이 한반도에 있어서 통일접근에 남북 공히 장애가 되고 있는 남북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일체의 조작된 제 현상이다. 또 냉전하의 이러한 제 현상은 결과적으로 긴장을 불가피하게 수반하여 왔기 때문에 이러한 긴장무드를 해소시키기 위한 일체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제 행위는 긴장완화라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 있어서 인위적 장벽의 연구대상은 주로 부차적인 장벽의 제거에 중점을 두었으며, 동시에 이것은 긴장완화책이기도 하다.

가. 북괴가 본 한국의 인위적 장벽

(1) 주한미군 주둔

(2) UNCURK

(3) 한일국교정상화 (협정)

(4) 한미협정

(5) 반공법

(6) 국가보안법

(7) 정치범 감금

(8) 공산당 및 혁신 정당불법화

(9) 군비강화

(10) 반공을 국시

(11) UN감시하의 남북총선 고수

나. 한국이 본 북괴의 인위적 장벽

(1) 조중군사동맹

(2) 조·소 군사동맹

(3) 민주기지로선

(4) 유관국 회의

(5) UN결의 불인정

(6) 군사 강화

(7) 공산 독재

이상의 제 인위적 장벽은 그 간 25년간의 냉전의 산물로서 남북 공히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왔으며, 또 이미 튼튼히 구책되고 있는 것으로써 통일접근에의 절대적인 장애요소로 대두되고 있다 하겠다.

특히 냉전이 한반도에서 계속 팽팽히 지속됨에 따라 이러한 제 인위적 장벽은 남북 공히 자기체제를 유지, 강화하기 위한 도구로서 이용되여 왔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남은 북으로, 북은 남으로 각기 자기 체제를 확장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용되여 왔기 때문에, 이에 불가피하게 세계 그 어느 지역에서 보다도 한반도에 있어서 긴장이 극도로 조성되여 왔다. 이 가운데에서도 북

괴의 대남적화전략의 일환으로서의 무력 간접침략은 더욱 한반도에서의 긴장상태를 조성하였고, 1962년 2월 북괴당 제4기5차중앙전원회의에서의 무력강화정책에로의 전환과 1.24군부대 등의 무력특공대의 남파, 침투 등은 평화적인 통일로선을 추구한다 하기 보다는 오히려 남북의 무력충돌만을 야기시켜 더욱 긴장의 극한 상태에로 이끌어 왔다.

이러한 현 남북간의 긴장상황속에서 작년 8.15 평화통일구상에서 주지되는 바와 같이 박대통령의 북괴에 대한 무력통일포기에 대한 제의는 결과적으로 북괴에 의해서 거부되였다. 더우기 북괴는 여전히 지난 5차당대회에서도 폭력혁명론을 고집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나 한반도를 위요한 최근의 국제정세의 사조와 우리의 평화통일염원은 우리로 하여금 그 간 25년간에 쌍방이 구책하여온 남북의 장벽을 제거해야만 할 정세에 직면하여, 그 어떠한 북괴의 거부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선 극한의 긴장상태를 완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선행적으로 요구된다 하겠다.

때문에 남북간에 가로 놓인 인위적 장벽을 제거하고, 보다 평화통일에로의 접근을 시도하기 위해서는 현 남북간에 고조된 긴장상태를 여하히 완화시키느냐가 중대한 문제로 제기된다.

2. 긴장완화

가. 긴장의 요소

(1) 군사적인 요소

(가) 북괴가 본 한국에서의 긴장요소

1) 군비증강

2) 전쟁위기의식 고취

3) 미군 주둔

4) 월남 파병

5) 한·미 군사조약

6) 한·일 협력과 일본의 군국주의화

7) 군사예산증액

8) 휴전선 침범

(나) 한국이 본 북괴에서의 긴장요소

1) 군비증강

2) 4대 군사노선

3) 전쟁준비강화 및 완료

4) 북침의식 고취

5) 조·중 조·소 군사동맹

6) 대남무력 도발

7) 휴전선상에서의 도발

8) 해외에 게리라 수출

9) 군사비 대량 지출

(2) 정치적인 요소

(가) 북괴가 본 한국에서의 긴장요소

1) 박 군사정권

2) 한·일 국교정상화

3) 대공사찰 강화

4) 반공은 국시

5) 한반도에서의 한국 유일합법정부론

6) 승공통일론

(나) 한국이 본 북괴에서의 긴장요소

1) 김일성집단의 호전성

2) 대중공접근

3) 민족해방전쟁지원론

4) 민주화기지로선 강화

5) 공산화 통일론

6) 대남 적화정치공작 강화

7) 국내외혁명의식 고취

(3) 경제적인 요소

(가) 북괴가 본 한국에서의 긴장요소

1) 미·일·한 경제협력

2) 경제건설에서의 군사적 성격

3) 군수산업건설

(나) 한국이 본 북괴에 있어서 긴장요소

1) 경제 군사병진로선

2) 중공업 치중 정책

3) 전시 경제체제 확립

4) 전쟁물자비축

5) 문화생활 억제

(4) 사회적인 요소

(가) 북괴가 본 한국에서의 긴장요소

1) 학생의 군사훈련 실시

2) 전쟁위기의식 고취

3) 향토방위 조직

4) 반공교육, 선전강화

5) 대북심리전 공작강화

(나) 한국이 본 북괴에서의 긴장요소

1) 아동에서 학생까지 군사훈련 강화

2) 전쟁위기의식 고취

3) 혁명의식 고취

4) 남조선 해방사상 고취

5) 국방체육 강화

6) 대남심리전 공작강화

7) 자유생활 구속

8) 사회 폐쇄

나. 긴장완화 및 인위적 장벽 제거방안

(1) 제거방안에 있어서의 원칙

긴장완화 및 인위적 장벽제거 구체적인 방안은 결과적으로 현 반공법과 국가보안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절하고도 기술적인 법의 개정이 전문가에 의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하기방안은 이에 구애받지 않고 명시한다.

(가) 제거의 구체적인 방안은 우선 실현가능성여부와 아방의 유리여부 등으로 보아 비정치적인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점차 정치적인 것으로 접근한다.

(나) 8.15구상의 발전책으로서 장차 실현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또 반드시 아방에 유리하고, 대북괴통일외교의 이니셔티브를 쟁취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접근한다.

(2) 구체방안

(가) Radio 방송교환

동 Radio 방송을 통해서 상호 찾고저 하는 사람의 생존여부를 1차적으로 확인하는데 있다.

제1단계 : 동 Radio 방송교환은 월남자와 재북가족간에, 월북자와 재남가족간에, 그리고 납북자와 재남가족간에 이루워지는 것으로서 국제적십자를 통하여 남북 쌍방이 방송희망자의 명단을 사전에 국제적십자에 통고, 상호 교환한 다음, 일정한 스케줄에 따라 어느 일방이 (한국 KBS 방송) 먼저 30분씩 문안방송을 하면, 30분 후에 상대방에서 문안회답방송을 함으로서 생존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제2단계 : 상기 1단계가 원만하게 진행되었을 경우 친척, 지인으

로 확대하여 이를 실시한다.

[illegible]점

한국측: 장점

1) 동 Radio 방송교환은 북괴가 제의한 적이 없기 때문에 북괴의 이니셔티브에 말려 들어간다는 인상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역으로 아방이 이니셔티브를 발휘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

2) 북괴에서 고정된 Radio 다이알을 해제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자유방송을 듣게 할 계기가 역시 될 수 있다.

3) 북괴 주민들로 하여금 자유대한의 방송을 처음 공개적으로 듣게 하는데 의의가 있다.

한국측: 단점

1) 역으로 한국국민이 북괴방송을 합법적이고 공개적으로 듣게 되는 시발이 됨으로써 계속될 우려가 있고. 이후의 사회적, 법적문제로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북괴측: 장점

1) 이것을 계기로 남한주민들로 하여금 합법적으로 북괴방송을 듣게 한다.

2) 이로 인한 사회적, 법적 혼란을 야기시킬 가능성을 내다볼 수 있다.

3) 대남정치공작목적에 이용할 수 있다.

북괴측 : 단점

1) Radio 다이얄의 고정을 해제시킴으로써 북괴측의 통제가 어렵게 된다.

2) 방송을 통하여 자유화의 계기

3) Radio 생산의 양적 증대문제가 대두

치러야 할 대가

한국측 : 1) 반공법, 국가보안법 적용문제 개정

2) 이것을 계기로 계속 청취함으로써 야기될 수 있는 이데오르기 문제 즉, 반공의식의 약화

북괴측 : 1) Radio 통제완화

2) 이데오르기상의 혼란 야기

실현 가능성

종래 북괴측이 제의한적이 없는 방안이며, 또 Radio 통제문제가 곤란하게 되므로 반대할 가능성이 짙다.

(나) 면 회

상기 Radio 방송교환을 통하여 상호 가족, 친척, 지인들의 생존여부가 확인된 다음 직접 상면해 보는 면회로 발전한다.

1) 직계가족간의 면회

동 면회는 월남자와 재북가족간, 월북자와 재남가족간, 그리고 납치자와 재남가족간 북송교포와 재일가족간에 직계에 한해서 이루워지는 것으로서 쌍방이 국제적십자나, 제 3 국, 기타 국제기관을 통해서 그리고 이들 기관의 주선하에 일정한 장소 즉, 판문점, 해상

휴전선상, 또는 제3국능지를 선정하여 이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경우 면회대화의 내용은 쌍방이 직계가족의 안부정도에 국한하고 정치적인 내용의 이야기는 일체 배제한다. 단, 가족 선부가 할 수 없고 직계가족 한 대표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상호 가족사진을 지참하여 교환할 수 있다.

2) 친척·지인간의 면회

상기 직계가족간의 면회가 쌍방 만족스럽게 이행되었을 경우 친척간에, 그리고 지인간에 면회로 확대한다.

장단점 :

한국측 : 장점

1) 이것 역시 종래 북괴측이 제안한 바 없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 북괴가 이것까지 또 다시 반대한다면 실패의 전 책임을 북괴에 전가할 수가 있다.

그리고 통일문제에 한국이 이니셔티브를 쥐게 된다.

2) 직접 상면해보는 면회를 통해서 우리의 일상생활의 우월성을 간접적으로 시위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3) 25년간의 북괴의 남한에 대한 허위선전을 폭로케 하는 계기가 된다.

4) 북송교포와 재일교포간에 면회를 통해서 재일교포의 북송을 저지시킨다.

5) 납북자와 월북자의 사망 혹은 행방불명의 경위를 확인케 하여 북괴의 비인도적인 행위를 폭로, 증오케 한다.

6) 북괴사회에서 소외된 월남자가족, 월북자, 재일교포들에게 통일의 희망을 주어서 북한에서의 저항세력으로서 보다 남한을 동경케 한다.

단 점 :

1) 일부 북한주민중에서 월남가족을 속이고 있는 주민들에게는 피해를 입힐 수가 있다.

2) 월남자의 생존여부를 확인시킴으로서 대남정치공작의 자료로서 제공,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

3) 면회를 시발로, 한국에서의 성급하고, 무원칙의 통일론이 대두될 가능성이 있다.

북괴측 : 장점

1) 면회자체를 악용하여 북괴내의 여타국민들에게 허위, 조작된 선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2) 월남자중 남한에서 극히 빈곤한 사람을 면회하여 역으로 북괴의 우월성을 선전할 위험성이 있다.

3) 북괴에서 저항세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월남자가족, 월북자, 납북자, 재일북송교포들에게 면회를 빙자해서 이들로 하여금 일시적이나마 공산정권에 추종케 한다.

단 점 :

1) 25년간 남한에 대한 허위, 조작된 선전이 일시에 폭로될 가능성이 있다.

2) 북한주민의 생활의 낙후성을 실증케 한다.

3) 다소의 사회적인 혼란과 주민의 통제가 점차 어렵게 된다.

치러야 할 대가:

한국측 :

1) 무분별하고, 성급한 통일론의 대두로 통일론에 혼란을 야기시킨다.

2) 반공법과 국가보안법의 다소의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므로 반공의식의 약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짙다.

북괴측 :

1) 대남혁명노선의 약화를 가져온다.

2) 저항세력에 대한 완화책을 실시해야 한다.

3) 수정주의경향 다소 인정해야 한다.

4) 중공으로부터 다소의 비난을 각오해야 될 것이다.

실용가능성:

※ 참고사항 :(1) 한국국회에서 1964년 이안섭 의원이 제창한 바 있다.

(2) 북괴측은 변화하는 방안은 제의한 적이 없다.

(다) 서신교류

1) 직계가족간 교류

동 서신교류 역시 월남자와 재북 가족간, 월북자와 재남가족간, 그리고 납북자와 재남가족간에 이루워지는 것으로서 쌍방이 직계 가족간에 한해서만이 서신이 교류된다. 동 서신의 교류방법은 우선 국제적십자

를 통해서, 그리고 동 기관의 일체 주선하에 실시되며, 내용에 있어서도 직계가족의 문안에 국한한다 그리고 접수의 확인방법은 동시에 쌍방이 서신교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일방이 먼저 했을 때 상대방은 받은 서신의 확인과 더불어 문안회답을 하는 식으로 실시된다. 어느편이 먼저 하느냐는 쌍방이 국제적십자를 통해서 합의를 본다.

2) 친척, 지인간에 교류

상기 직계가족간에 서신교류가 쌍방이 만족하게 진행되었을 경우, 보다 교류범위를 확대하여 실시한다.

3) 개인과 단체, 단체와 단체간에 교류

이상의 제교류가 상호 만족하게 이루워졌을 경우, 개인과 단체, 단체와 단체간에로 확대하여 실시할 수도 있으나, 동 교류는 서신내용의 기술이 곤란하며, 또 정치성을 띌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상당한 단계를 거친 연후에 이루워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장단점 :

한국측 : 장점

1) 서신교류를 실현함으로서 우선 국내 정치상에서의 야당으로부터 통일문제에의 "소극"적이라는 비난을 면할 수가 있고, 일부 국민의 불만을 해소시킬 수 있다.

2) 서신교류에 사용되는 종이, 필체, 우표인쇄, 봉투 등의 기술과 질의 우월성을 간접적으로 북괴주민들에게 시위

외 5 0

극 비 밀

할 수가 있다.

3) 북괴의 대남허위선전이 폭로된다.

4) 북괴의 경우, 회답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므로(학살당했기 때문에) 북괴가 궁지에 몰리고, 잔인성이 폭로.

5) 서신을 교류할 대상이 남한이 수적으로 월등히 많으므로 이것은 곧 한국사회의 우월성을 시사.

단 점:

1) 북괴가 계획적으로 악용할려고 할 때 일차적으로 방지 곤란.

2) 아방측의 주소로 북괴측이 대남공작에 이용.

3) 서신교류로 인한 급템푸의 통일론의 대두로 혼란가능성.

4) 서신교류를 빙자해서 북괴 간첩의 연락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

북괴측 : 장점

1) 북괴측이 이미 먼저 주장한 것이기 때문에 통일문제에 이니셔티브를 잡은 것으로 선전할 가능성이 있다.

2) 서신을 접수하는 북괴주민을 불순분자로 인정하여 이들과 회유해서 더욱 공산당을 지지토록 할 수 있다.

3) 서신을 불준으로 조작하여 북한주민들에게 남한에 대한 악선전, 허위 선전할 자료가 된다.

4) 대남공작에 수단으로 이용.

극 비 밀

단 점 :

1) 편지지, 봉투, 필체, 우표 등으로 남한의 우월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2) 편지를 받는 북괴주민은 그 사회에서 소외된 자들이기 때문에 내심 남한을 더욱 동경하게 된다.

3) 북괴에서는 교류된 편지에 대한 각종검열로 인하여 빚어지는 취약점 발로.

치러야 할 대가

한국측 :

1) 반공법과 국가보안법 개정이 불가피

2) 일차적으로 통일의 이니셔티브는 북괴가 쥐게 될 가능성.

3) 이것을 계기로 남한에서의 혁신정당, 용공정당의 대두와 혼란.

4) 이미 서신교류로 반공법에 저촉, 형을 받고 있는 자에 대한 처리문제

5) 이것을 계기로 임의로 하는 경우의 처리문제

6) 일시적인 혼란각오

북괴측 :

1) 저항세력. 적대계급에 대한 관대한 정책에로의 전환.

2) 이데오로기상의 약화로 인하여 수정주의 대두.

3) 남한해방론, 혁명론포기로 인하여 김일성체제의 약화.

4) 납북자, 월북자중 북괴가 이미 학살, 숙청자에 대한 서신회답요구시, 이에 대한 해명을 할 북괴지도층의 고민.

실현가능성 : 북괴가 현재까지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실현성이 있다고 보겠다.

월북, 월남자 명단 작성의 곤란성과 신부론으로 결렬가능성 (선예도 유)

(라) 인사왕래

1) 기자교류

우선 교류방법에 있어서는 역시 국제적십자나, 제3국을 통하여 쌍방이 선정한 기자의 수명을 이들 기관의 주선에 의해서 이행한다. 기자의 방문지와 활동범위는 쌍방의 합의에 의해서 하되 우선 관광지 고적지만을 순방하기로 한다. 그리고 귀환후 기자의 기사내용과 관광, 고적지 사진은 자유로이 게재할 수 있다.

2) 관광인교류

상기 기자교류에서 쌍방이 만족스럽게 이루워졌을 경우 보다 범위를 확대해서 쌍방이 선정한 인원을 지정된 관광지, 고적지에 관광단을 상호교류케 하는 것이다.

3) 풍습, 가정행사를 통한 가족교류

가족이 남북으로 분리되여 있는 조건하에서 남의 가족이 북의 가족의 결성식, 장례식, 회갑등 가정행사에 초청됐을 경

우 쌍방은 국제적십자를 상호방문에 한다.

장단점 : 장점

한국측 : 장점

1) 북괴의 관광지와 고적지의 시설, 구성이용도, 편의도면에서 아방보다 훨씬 빈약하기 때문에 아방의 우월성이 기자로 하여금 실증케 된다.

2) 남북기자의 질적인 면에서 비교해 볼 때 아방이 월등히 우월하기 때문에 오히려 북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3) 기자나 관광인들의 외모의 차림은 북괴주민들로 하여금 남한의 우월성을 인식케 할 것이다.

4) 고속도로를 통한 관광으로 역량과시

단 점 :

1) 자유주의체제가 가지고 있는 외관상의 사회무질서를 북괴인들에게 보여줌으로서 남한사회를 오해할 가능성이 있다.

2) 상품의 간판이나, 상품에 있어서의 외래어사용은 북괴인으로 하여금 한국의 주체성을 의심케 할 수 있다.

3) 또 이로 인하여 북괴가 종래 선전하여 왔든 소위 식민지예속성을 실증케 할 가능성이 있다.

4) 관광지의 자연조건이 한국이 불리하다. (온천, 산수등)

Ⅲ 급 비 밀

북괴측 : 장점

1) 관광지마다 북괴는 휴양시를 설치해 놓고 있기 때문에 남한기자나 관광인들에게 북괴의 사회복지정책의 우월성을 선전할 기회를 갖는다.

2) 질서정연하고, 조직적인 사회를 보여줄 수가 있다.

3) 관광지 주변도로에 인위적인 단장을 조작하여 선전효과를 꾀할 수가 있다.

단 점 :

1) 남한을 방문하고 온 귀환자들로의 입을 통해서 그간 북괴의 거짓 선전이 폭로된다.

2) 기자와 관광인들의 입국으로 인한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과 사상의 동요를 가져올 수 있다.

3) 이로 인한 자유화경향이 싹틀 가능성이 있다.

치러야 할 대가 :

한국측 :

1) 반공법, 국가보안법 수정과 이로 인한 제반 법적, 사회적 문제

2) 관광인을 통한 북괴의 합리적인 간첩행위와 연락수단으로 이용.

3) 반공의식 약화

북괴측 :

1) 사상적인 동요

Ⅲ 급 비 밀

2) 대남허위선전포기 내지 선략 전술 수정

3) 구 풍습, 관혼상제를 부 내지는 인정

4) 중공업정책 수정

실현가능성 :

기자교류에 한해서 그 실현이 가능하다. 하겠으나 기타 교류문제는 상당한 시간이 경과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참고사항 : 북괴측은 이미 인공교류를 주장한 바 있으나, 그 구체적인 내용은 밝힌 바 없다.

(바) 체육교류

1) 국제경기에 공동출전

우선 국제경기에 있어서 남북은 공동으로 출전할 수 있도록 쌍방이 출전방해 내지 허위선전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쌍방 무-드를 조성한다.

2) 남북단일대표팀 구성

상기 국제경기에서 상호협조적인 무드가 조성되었다고 인정할 때 제3국에서 남북 체육 대표자간에 단일팀구성, 출전문제를 협의한다.

3) 남북체육교류

최종적으로 남북은 IOC나 제3국의 기관을 통해서 쌍방 체육교류를 한다.

가) 서울-평양축구대회

나) 대학생경기대회

다) 부문별 경기대회

여자 : 농구 , 배구 , 탁구 , 육상 , 수영 ……

남자 : 〃 〃 〃 〃 〃

라) 고전경기

활쏘기 , 씨름 , 거네뛰기 등

장단점 :

한국측 : 장점 (1) 대부분의 경기에서 한국의 승산이 있다. (특히 개인기)

(2) sport 장비면에서 남북이 국산으로 한다면 한국이 우월하다는 것을 인식시킨다.

(3) 북괴의 선수들이 남한에서 내심 남북을 비교해서 스스로 남한의 우월성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4) 북괴인들이 점차 남한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함으로써 사상적인 동요를 가져온다.

단 점 :

(1) 축구를 비롯한 인기종목의 단체경기에서 패할 가능성이 있어, 남한의 국민들로 하여금 북괴의 전반적인 우월성으로 오인케 할 가능성이 있다.

(2) 체육장시설이 남한이 북괴보다 열세에 놓여 있음이 폭로.

(3) 체육인에 대한 내부가 남한이 북괴보다 열세에 있음이 폭로.

북괴측 : 장점

(1) 체육장 시설이 남한보다 월등하기 때문에 선전효과를 가진다.

(2) 체육인에 대한 대우가 남한보다 좋기 때문에 역시 선전효과.

(3) 축구를 비롯 단체 몇몇 경기경기종목에서 승산이 크다.

(4) 남한의 약점을 이용해서 정치공작의 비상발견

단 점 : (1) 장비면에서 북괴가 열세에 놓여 있음을 자기 선수들에게 폭로시키게 된다.

(2) 개인기 열세

(3) 귀환선수들의 입을 통해서 새로운 남한인식

치러야 할 대가 :

한국측 :

(1) 반공법, 국가보안법 수정

(2) 체육장시설 확장

(3) 체육인의 대우 개선

북괴측 :

(1) 체육종목의 다양화 시급

(2) 체육장비 개선

(3) 자유화 감수

(4) 사상 통오

참고사항 :

(1) 1964년 동경 Olympic 때에 남북이 단일팀 구성문제를 검토한 바 있다.

(2) 이것 역시 북괴가 교류를 주장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다.

(바) 예술교류

1) 개별예술인 교류

남북은 UNESCO나 제3국의 기관 또는 여타 적절한 체널을 통하여 남북간에 음악, 예술, 조각, 사진, 무용 등의 제 분야에 걸쳐 상호교류한다. 예술의 내용은 개개인의 특기를 중심으로 한 고전 즉 민속무용, 음악, 악기연주의 교류와 미술, 조각, 건축, 사진전시회의 교류로부터 시작해서 현대예술 제분야까지를 총망라한다.

2) 예술단체 교류

상기 개인기예술이 상호 원만이 진행되었을 경우 단체예술로 확대, 상호, 교류한다. 한국측이 북괴에 파견할 수 있는 것으로서는

가) 시교향음악단

나) 예그린음악단

다) 국악단

라) 각종 무용단

마) 기타 예총산하의 제 단체

장단점 : 장점

한국측 :

(1) 북괴보다 개인기에 있어 월등이 우세.

(2) 다양한 작품을 전시할 수 있다.

(3) 북괴의 4~50 배로 하여금 북고사상을 고취

(4) 예술에 필요한 실비가 우세

⑤ 한국의 예술이 북괴주민으로 하여금 사상적동요를 가져올 수 있다.

단 점 :

(1) 한국예술인이 북괴에 비해 일반적으로 대우가 낮고, 국가적으로 생활보장책이 없음.

(2) 북괴예술이란 순수하다기 보다는 공산주의의 사상과 리허리즘의 사상이 담긴 예술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3) 일반적으로 민속예술분야에 있어서 한국이 북괴에 비해 수준과 규모가 낮을 가능성이 있다.

북괴측 : 장점

① 북괴예술인은 정치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선전의 효과를 노릴 수 있다.

(2) 북괴는 남한의 약점을 소위 예술로 표현하여 선전효과를 노릴 수 있다.

(3) 민속예술 부문에서는 한국보다 우월할 가능성이 있다.

④ 남한예술인보다 대우가 좋고, 생활보장이 되어 있다.

⑤ 무대를 비롯한 극장이 웅장한 점에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⑥ 예술인을 통한 대남공작이 가능하다.

단 점 :

(1) 예술의 다양성이 없다.

(2) 예술에 필요한 장비의 질이 낙후

(3) 현대음악과 예술에 대한 낙후성

치러야 할 대가 :

한국측 :

(1) 반공, 국가보안법 개정

(2) 예술인전반에 대한 대우 개선책이 필요

(3) 민속예술 발전책 강구

(4) 대남공작수단 이용

북괴측 :

(1) 남한의 예술도입으로 주민들의 자유화사상 대두

(2) 남한의 예술(특히 유행가)
북괴에 보급으로 인한 수정주의 경향

(3) 현대음악, 예술에 대한 장려

(4) 혁명예술의 퇴조.

실현가능성 : 현재로서는 실현가능성이 희박하다.

(사) 문화영화교류

1) 생활문화영화 교류

동 문화교류 역시 UNESCO나 제3국의 기관, 또는 적실한 기타 기관을 통하여 남북이 문화영화를 교류, 극장에서 상영케 한다. 문화영화의 내용은 남북 공히 일상생활을 중심으로 제작, 소개하는 정도에서 끝인다. 상호 일정한 일시에 서울과 평양에서 상영케 한다.

2) 관광 { 문화재 / 고적영화 교류

관광지와 문화재 고적 전반에 걸쳐 영화화하여 남북주민들에게 소개하는 것이다.

3) 직업별, 부문별 문화영화 교류

동 영화교류는 각종 직업별(예: 은행, 관광공사)과 부문별(예: 공업분야, 농업분야)로 일의 내용설명과 특징 등을 상세히 소개해 주는 것으로 제작하여 상호교류한다.

4) T.V 방영교류

남북 공히 T.V에서 방영되고 있는 작품중에서 가장 비정치적이고 예술적 작품을 선정, 녹화하여 필림을 상호교환, 일정한 일시에 서울과 평양에서 각기 중앙TV방송국을 통해서 방영한다.

장단점: 장점

한국측:

(1) 문화면에서 북괴를 압도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파급 효과

(2) 한국생활문화의 다양성이 주는 북괴주민의 사상적 동요.

(3) 북괴의 대남 허위선전이 폭로.

단 점:

(1) 식민지문화라는 역선전을 당할 가능성이 있고, 북괴주민들에게 역으로 실증시킬 가능성이 있다.

(2) 조선고유의 문화로서는 자랑거리가 못 된다는 점.

(3) 문화의 주체성 결핍

북괴측 : 장점

(1) 북괴주민들에게 남한의 식민지문화, 미제문화라는 것을 실증시킬 자료를 갖는다.

(2) 문화의 주체성이 없다는 것을 약점삼아 역선전.

(3) 민족문화라는 미명하에 남한문화를 멸시, 경멸시킬 수 있다.

(4) 북괴대상문화의 우월성을 과시할 기회를 갖는다.

단 점 :

(1) 문화의 수준이 너무 낮다.

(2) 일상생활문화가 너무 단조롭다.

(3) 문명의 이기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4) 남한의 문화로부터 압도당할 가능성이 있고 북괴주민들의 모방할 가능성이 있다.

치러해야 할 대가 :

한국측 :

(1) 반공법, 국가보안법 개정

(2) 대북괴에 대한 현재의 인식으로 보아, 생각했든것보다 수준이 높다는 데에서 오는 정부에 대한 허위반공선전이 폭로.

(3) 따라서 다소 반공선전의 지양

(4) 반공의식 약화

북괴측 : ① 남한문화공영으로 인한 주민사상의 동요와 수정주의 대두 가능성

② 전쟁문화 지양

③ 혁명의식 약화

실현가능성 ; 부분적으로 (북괴중공업분야) 실현이 가능하다.

참고사항 : ① 북괴가 종래 막연하게 주장한 바 있다.

(이) 각종 출판물 교환

동 교환 역시 UNESCO나 제3국 혹은 적절한 방법으로 상호 교환한다. 교환내용은 일간신문, 잡지, 화보, 학술지 등을 교류한다. 대중에게 개방한다. 개방여하의 확인은 UNCURK로 하여금 하게 한다.

장단점 : 장점

한국측 : ① 우선 종류가 다양하고 내용이 다양하다.

② 출판물의 지질과 인쇄기술이 우월하다.

③ 각종내용의 출판물을 통하여 진정한 의미의 자유가 무엇인가를 느끼게 할 수 있다.

④ 남한의 자유스러운 분위기를 감지케 한다.

단 점 : ① 사회면에서의 남한의 약점을 이용하여 북괴 국내정지에 이용하는 자료를 제공하게 된다.

② 북괴가 남한에 대한 사실무근한 허위선전을 해서 남한사회를 교란.혼란케 할 수 있다.

③ 공산주의이론이 합법적으로 들어옴으로써 혁신세력

내지는 공산당의 합법적인 정치공작 활동을 제공케 한다.

북괴측: 장 점

① 합법적인 남한적화공작의 일환으로서 지면을 통한 정치공작을 할 수 있다.

② 지면에서 남한에 대한 중상모략을 함으로써 남한사회를 교란케 해서 주민들의 판단을 흐리게 한다.

③ 남한자료로서 북괴주민에 대하여 사회주의 우월성을 역선전할 수 있다.

단 점:

단점:① 북괴신문이 모두 정치적이고 또 천편일율적이고 단조롭기 때문에 남한주민들로부터 큰 효과를 기대할 수가 없다.

② 지질과 인쇄기술면에서 남한에 뒤지기 때문에 스스로 낙후성을 폭로하게 된다.

③ 북괴의 남한에 대한 중상모략, 허위선전이 결국 폭로하게 된다.

치러야 할 대가:

한국측:① 북괴의 남한에 대한 고의적인 중상모략, 허위선전을 일차적으로 방지할 수가 없다.

② 출판물을 통한 공산주의 이론 유입.

③ 국내 학생주민들의 불온서적 구독에 대한 처리문제.

④ 반공의식 약화

⑤ 반공법, 국가보안법의 기능마비

북괴측 : ① 혁명의식 약화

② 주민의 자유화사상 대두

③ 주민 통제완화

(자) 경제교류

1) 공동어로

동 공동어로는 남북한이 공동어로장을 설치하여 공동으로 조업하는 것이다. 남북 어업조합은 쌍방 합의에 의하여 현 휴전선상의 적당한 곳을 선정하여 이를 행한다.

2) 남북어로의 자유화

남북은 조업을 위해서는 각기 자유로이 남북의 해상을 왕래하면서 조업을 한다.

3) 상품교류

가) 남북공동상품 전시장 개설

남북은 휴전선상의 적당한 곳에 상품전시장을 설치하여 놓고 상호 상품만을 전시하며, 동 지역을 관광지로서 쌍방 합의하여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자유로이 관람케 한다. 단, 관광인의 수 등에 관해서는 사전합의를 본다.

나) 전시장에서 상품교류

동 전시장을 통하여 쌍방의 무드가 조성된 후, 어느 시점에 가서는 관광인들에게 기념용으로 1개 1개씩 자유로이 상

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한다.

다) 남북교역

동 전시장을 통해 쌍방 만족할만한 성과가 있을 때 남북은 공히 국민의 행복과 평화적인 목적을 위해서 필요로 되는 상품에 관해서는 물물교환 내지는 적당한 유통방법에 의해서 상호교역에 합의를 본다. 동 교역 역시 원만하게 진행되는 경우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제 1 단계 : 전시장을 통한 교역

제 2 단계 : 해상교역

제 3 단계 : 항구를 통한 교역

제 4 단계 : 육상교역

장단점 : 장점

한국측 : ① 어차피 어민들이 납북되고 있는 상황하에서 공동어로장을 설치하여 이를 방지.

② 현재 어민들의 납북을 완전히 사전에 방지할 수 없는 경우 '밑져야 본전' 격이 된다.

③ 어민들의 장비면에서 한국이 우월하다.

④ 쌍방이 선전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경쟁을 한다고 해도 결국 북괴는 종래의 폐쇄정책을 완화하게 된다.

⑤ 남북어업교류로 인하여 쌍방 영향을 받게 되는데, 결국 북괴의 타격이 클 것이고, 어민의 사상적 동

요를 가져온다.

⑥ 경제교류 중에서 공업품은 절대적으로 한국이 우월하다.

⑦ 상호경쟁의 경우 북괴는 종래의 중공업정책을 지양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로 인한 전쟁의식 약화.

⑧ 남한의 우월하고 다양한 상품으로 인한 북괴의 동요를 가져온다.

⑨ 상품을 통하여 남한의 우월성과 북한의 낙후성이 폭로된다.

⑩ 종국적으로 통제경제정책을 지양하게 됨으로써 외부에 개방하게 되고, 수정주의가 불가피 대두되고, 또 이로 인한 북괴지도층에 혼란을 가져온다.

단 점 : ⑴ 북한어민이 남한보다 생활보장이 되어 있다.

⑵ 남한어민의 낙후성이 폭로.

⑶ 이로 인한 한국어민이 북한의 정치공작의 대상이 된다.

⑷ 어선자체에 대한 시설이 남한보다 우월하다.

⑸ 남한의 경우 어민들이 생활이 비교적 낮기 때문에 북으로 월북의 가능성이 있다.

⑥ 상품의 경우 중공업품은 남한보다 훨씬 우월하기 때문에 역선전 당할 가능성이 있다.

⑦ 상품의 영문표시는 식민지예속화를 북한주민에게 실

증시킬 가능성이 있다.

⑧ 원료의 외국의존이 크다.

장 점;

북괴측: ① 일반적으로 남한보다 어민의 생활보장이 잘 되어 있다.

② 어선의 시설이 비교적 현대화되어 있다.

③ 중공업상품이 절대적으로 우월하다.

④ 남한상품의 약점을 이용하여 북한주민에게 정치적 효과를 노릴 수 있다.

⑤ 원료의 대부분을 자급자족한다.

⑥ 기계화를 앞세워 큰 정치적 효과를 노릴 수 있다.

⑦ 합법적으로 대남정치공작을 할 수가 있다.

단 점: ① 북괴어민들이 남한의 자유스러운 생활을 눈치채고 남으로 귀순할 가능성이 있다.

② 납북행위가 불법화된다.

③ 일반적으로 북한주민들의 생활의 낙후성이 폭로된다.

④ 주민들의 불만 노골화

⑤ 수정주의 대두

⑥ 사회적 혼란

⑦ 사상통제력의 약화

⑧ 상품의 질이 낮고, 단순.

지켜야 할 대가:

한국측 :(1) 한국경제의 어느정도 외국예속성 설정하게 될 우려.

(2) 정치적으로 역선전 당할 가능성

(3) 반공, 국가보안법의 무기력

북괴측 :(1) 중공업정책 지양하고, 경공업 육성

(2) 생활의 낙후성으로 인한 주민의 불만에 위협

(3) 수정주의 도입

실현가능성 : 어로교류는 가능성이 있다 하겠으나, 상품교류(경공업 제품)는 북괴가 반대할 가능성이 있다.

참고사항 : 북괴는 어업을 위한 상호 교류를 주장해 왔다.

(차) 군 축

1) 육·해·공군의 감군

동 군축은 부분적인 군축부터 시작 즉, 육군의 군축부터 시작해서 해·공군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그리고 현존병력 비례에 (혹은 인구비례) 따라서 군축을 행한다.

제 1 단계 : 현존병력 비례해서 육군 감군

제 2 단계 : 〃 해군 〃

제 3 단계 : 〃 공군 〃

장단점 : 장점

한국측 :(1) 현세계정세조류와 닉슨정책에 동조하게 된다.

(2) 육군에 있어서 비례감군은 역시 육군병력수에 있어서 우월을 차지한다.

⑶ 제 3단계 (공군) 감군은 상당한 시일을 고의적으로 끌어서 우월한 북괴공군기를 노후케 한다.

④ 북괴의 전쟁의식을 약화시킨다.

⑤ 북괴에 비해 공군의 열쇠를 만회할 시간적 여유를 얻는다.

⑥ 군사예산을 전공업분야에 돌려 자유화를 촉진시킨다.

단 점 : ⑴ 제대군인의 취업문제 즉, 실업인 처리문제

⑵ 군부의 반발 가능성

⑶ 미군의 한국에서의 완전 철수의 가능성

⑷ 두개 한국론의 합법화의 가능성

⑸ 평화통일 무드 급상승 가능성

북괴측 : 장 점

⑴ 노동인구의 부정을 메꿀 수가 있다.

⑵ 통일에의 이니셔티브를 발휘케 하고, 북괴의 평화통일로선이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될 가능성

⑶ 이것을 계기로 미 • 일과 외교관계개설 가능성

⑷ 한국의 고립을 기도 가능성

⑸ 공군의 우월점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⑹ 미군을 남한에서 완전히 철수시킬 구실을 삼는다.

⑺ 노농적위 140만은 거정규군으로서 항상 정규군으로 전환할 수 있다.

⑻ 동원 체제의 확립으로 유사시 쉽게 증강할 수 있다.

단 점 : ① 전쟁의식 고취를 지양해야 한다.

② 혁명의식 약화된다.

③ 대남 폭력혁명론 포기

④ 수정주의 요소 발생가능성, 동시에 권력구조의 변화 가능성

치러야 할 대가 : 한국측

① 북괴공군의 우월 유지로 인한 기습전쟁가능성

② 미군의 한국에서 완전철수를 위한 구실을 제공한다.

③ 군부에서의 반대

④ 실업자문제

<북괴측>

① 혁명, 전쟁의식 약화

② 대남 무력적화통일 포기

③ 대남 통일정책변경

④ 경제정책 변화

실현가능성 : 북괴가 이미 수차에 걸쳐 10만명력 감축을 주장한 바 있어 가능성이 있다.

(카) 평화협정체결

남북은 한반도를 평화적으로 통일하기 위하여 무력사용통일을 배제한다는 내용의 협정을 궁극적으로 체결하나, 다음의 몇 단계를 거쳐야 한다는 데에 쌍방이 합의한다.

1) 간접침투 중지

쌍방은 대소의 무력충돌을 야기시킬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중지하며, 나아가서는 정부전복행위 및 국민의 안녕 질서를 파괴하는 일체의 행위를 중지한다.

2) 심리전 중지

쌍방은 사회질서를 파괴하고, 국민생활에 정신적 위협이 되는 심리전 행위를 일체 중지한다.

3) 정치범 교환

이상의 제문제가 쌍방 원안이 진행되는 경우 쌍방은 그간의 투옥된 정치범을 교환 석방한다.

4) 평화협정 체결

장단점 : 장점

한국측 : ① 북괴의 무력 폭력 혁명을 포기케 한다.

② 남한에서의 골치꺼리 정치범, 미전향자 등을 북의 납북자와 교환한다.

③ 북괴의 간접침략의 위협이 방지된다.

④ 북괴의 무력불침략을 국제적으로 보장받는다.

⑤ 8.15선언의 발전책이 된다.

단 점 : ① 국방정책에 위배되며, 반공정책과 이율배반.

② 북괴가 협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손실을 보게 된다.

장 점 ;

북괴측 : ① 종래의 주장이 실현하게 됨으로써 그들의 대내외

선전에 효과를 보게 된다.

(2) 국방강화정책을 지양하고 국민생활향상부문에 투자를 할 수가 있다.

(3) 남한에 무원칙한 평화통일론을 부채질할 수 있다.

⊗(4) 북괴가 주장하는 통일문제의 외세배격의 주장을 실현하게 된다.

단 점 : (1) 공산주의 선전 불가능

(2)

치러야 할 대가 : 한국측

⊗(1) 남북이 통일문제에 직접 협상하게 된다.

(2) 반공강경파에 반대에 부딪친다.

(3) 미군의 한국에서 완전철수 가능성

(4) UN 통일론 주장 약화

북 괴 : (1) 종래 대남공작의 수포화

(2) 해외 혁명수출 불가(일본)

(타) 기상정보교환

남북이 상호기상에 대한 예보를 상호 방송케 하여 상호 협조무-드를 조성한다.

선의의 경쟁을 위한 방안

목 차

1. 개념의 정립 177

2. 경쟁의 형태 180

3. 경쟁의 구체적 방안 184

1. 개념의 정립

우리 국토의 분단이 국제적 압력에 의하여 형성되었고 또 고정화 되었다면 앞으로 이룩할 통일도 우리를 둘러싼 국제적 환경을 무시하고 시도될 수 는 없을 것이다.

지금 우리의 통일과 관련한 국제적 환경이 미•소의 양극체제로부터 미•소•중•일의 복잡하고 유동적인 사각•관계로 변화되었고 또 분단국가의 동시 UN 가입논의와 중공의 UN가입가능성 대두 그리고 닉슨 닥트린의 추진 현상 등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나라의 통일문제를 재 정리하겠금 압력이 가해지는 상태라 보겠다.

그러나 한국의 통일문제에 통일문제에 있어서는 국제정치에서 보다는 국내정치에서 그 활로를 또 그 주도를 잡아야 할것이다.

설사 미•소•중•일이 억지로 라도 한국의 통일방안에 합의하였다. 하드라도 혹은 UN 총회가 만장일치로 그 방안을 채택하였다 하드라도 통일이 꼭 이루어 지라는 법은 없다.

우리와 북괴의 대결은 그 시초는 국제적 압력 관계에서 비롯되었지만 오랜세월의 타성속에서 우리와 북괴관계는 이미 일시적인 충돌이 아니라 제도화한 대결인 것이다.

이러한 제도화된 대결안에서도 우리는 현 국제정세의 추이와 우리국민의 염원인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주도하에 보다 적극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있는 통일정책의 방향과 지표의 제시가 필요하다.

이 필요에 따라 1970년 8월 15일 대한민국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보다 새롭고 차원 높은 통일구상을 (8.15선언)제시하였다.

그 통일 구상의 하나로 박대통령은 「북괴에 대하여 더 이상 무고한 북한 동포들의 민생을 희생시키면서 전쟁준비에 광분하는 죄악을 범하지 말고 보다 선의의 경쟁 말하자면 민주주의와 공산독재의 그 어느체제가 국민을 더 잘살게 할 수 있으며 더 잘 살 수 있는 여건을 가진 사회인가를 입증하는 개발과 창조의 경쟁에 나설 용의는 없는가 하고 물었다」

대통령이 제안한 이 선의의 경쟁은 대립의 개념과 공존의 개념을 포괄하고 있다.

공존의 개념으로 받아들여 질때에는 역사적이고 문화적이며 비권력적으로서 통일논의의 정통성이 확립된다.

또한 박대통령이 8.15선언에서 「국토통일이 아무리 절실한 우리민족의 지상명령이라 하드라도 동족의 유혈을 강요하는 전쟁만은 피하여야 하며 통일의 길이 아무리 험난하다 할지라도 꾸준한 인내의 최대한의 양식을 발휘하며 평화적으로 해결하여야 될것」이라고 강조한 것은 공존의 개념에서 제안된 것으로 보아야 하겠다.

그러나 통일을 향한 선의의 경쟁이란 스포츠에 있어서의 선의의 경쟁과 같이 승패를 알지 못한채 주어진 규칙의 범위내에서 쌍방이 최선을 다하는 것과는 달리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또 승리하여 야만 된다는 즉 경쟁의 결과에 대한 부동의 확신을 전제로한 행동 방향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공존의 개념을 넘어선 대립의 개념이라 보겠다.

박대통령이 8.15선언에서 「우리는 김일성 일파의 전범 집단이

끝내 무력적화통일의 야욕을 버리지 못하고 폭력적인 침략을 감행하여 왔을 경우에는 이를 단호히 격퇴할 수 있는 힘의 배양도 또한 게을리 해서는 않된다는 점을 깊이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은 대립의 개념을 의미한다고 보겠다.

그리고 우리는 선의의 경쟁을 「긴장상태의 완화」속에서 추구하자고 하였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긴장상태의 완화란 무력 충돌의 가능성을 줄이자는 것이지 통일을 향한 민족적 결의를 냉각시키자는 것이 아니다.

결론적으로 박대통령이 제안한 선의의 경쟁은 오직 북역에 살고 있는 북한 동포들을 도와주며 구출하고 우리의 자유 민주체제를 한반도에 심기 위한 것이여야 한다.

2. 경쟁의 형태

대결로 부터 경쟁으로 옮겨가는 길은 결코 평탄한 행로가 아니며 그 형태와 방법도 많을 뿐 아니라 환경과 정세의 여건에 따라 달라지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우리는 같은 민족이면서도 25년이란 긴 세월을 완전 차단된 상태하에서 대립을 넘어선 적대의 관계속에서 사상과 사고와 문화를 달리하는 생활을 하여 왔기에 동일 민족이면서도 문화적으로 이질화 되었다.

더욱이 앞으로 5～10년이 지나면 해방 이후에 태어난 새 세대들이 주역계층을 담당하게 되므로 이때 이들은 동일민족이면서도 이민족에 대한 적개심 이상의 의식을 나타나게 될것이다.

우리가 지금 논하는 선의의 경쟁은 군사적 대결로 부터 정치적 경쟁으로 그 초점을 옮기자는 것이나 종국적으로는 대결의 지속에 끝이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경쟁이란 그 자체가 목적인 것이 아니라 종국적으로 한반도의 통일에 우위를 찾이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남북한이 아울러 성공한다면 우선 분단된 민족간의 긴장완화 계기가 마련 되겠지만 만일 어느 한쪽이 실패한다면 또 다른 위기가 일어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박대통령이 제안한 8.15선언도 민주주의와 공산독재의 그 어느 체제가 국민을 더 잘 살게 할 수 있는가를 경쟁하여 국민이 선택할 수 있게하자는 것으로 본다면 결국 어느 일방의

우위가 통일의 주도역을 담당하게 되므로 우리는 보다 대립적인 경쟁의 관점에서 그 방법을 찾아야 하겠다.

선의의 경쟁에서 무엇보다 전제되어야 할 문제는 전술한 바와 같이 긴장의 완화를 상호 진의로 받아들여 야 하는데 북괴가 이를 부정하는 현재로서는 그 의미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 경쟁은 우리의 우위를 목표로서 추진되어야 하기 때문에 1976년 제3차 5개년 경제 계획이 완료되면 우리의 경제능력은 북괴를 능가한다는 전제로서 이 문제를 다룬다.

<경쟁의 형태>

경쟁의 형태로는 첫째 한 분단상태의 고정하 각기 내부적인 발전을 통한 경쟁 형태와 둘째 북괴와 접촉 내지 공동 참여 속에서의 경쟁형태 세째 제3자의 인식 또는 인정, 지지를 통한 경쟁 형태를 들수 있다.

가. 내부적인 발전을 통한 경쟁 선의의 경쟁내용에서 이문제는 주류를 이룰뿐 아니라 거의 전부가 이것을 통한 경쟁형태로 나타날 것이다.

우리는 이미 어떤 의미에서든 이 경쟁을 하여 왔다고 보아야 겠다.

즉 대한민국에서는 계속 민주주의 신장에 힘써 왔고 경제 성장이 이룩되어 1976년 제3차 경제개발 계획이 끝나면 세계 중진국에서 상위에 속할 수 있는 처지에 있을 뿐 아니라 소비가 미덕인 시대로의 기틀을 닦고 있다.

이것은 분명 통일에서 우위를 점할려는 경쟁인 것이다.

또한 북괴도 최종적 목적이야 대남도발에 보루로서 이용할라고는 하나 어떻든 계속적인 계획 경제 수행으로 경제 성장을 꾀해 왔으며 김일성 일인 독재체제를 확립코져 많은 정적을 숙청했다는 것도 그를 나름대로 독재자로서의 정국의 안정을 위한 조치라고 보겠다.

따라서 북괴가 우리의 이 선의의 경쟁 제안을 받아 드리지 않는다 하드라도 이런 경쟁 즉 대립적 개념의 경쟁은 계속될 것이며 이는 통일의 주도와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불가결한 일이다

또한 북괴가 우리의 제안을 받아들여 긴장을 완화하고 무력도발을 포기, 선의의 경쟁에 나선다 하드라도 통일에서 주도와 우위를 점하자는 종국적 목적 의식이 있는 이상 이 경쟁은 같은 대립적 개념의 경쟁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어떤 의미에서든 경쟁 형태는 자체의 내부적 힘을 배양하는 경쟁형태가 주가 될 것이다.

나. 북괴와 접촉 내지 공동 참여속에서의 경쟁

이 형태는 북괴가 무력도발을 포기하고 남북한의 긴장완화가 이루어 지고 북괴가 진정으로 선의의 경쟁에 나설때 그 실효를 거둘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이 형태는 초보적인 통일논의가 이루어 져야 하며 이 상태에 접어 들때에는 협상과 교류가 이루어 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도 국한된 일부분 적으로 경쟁이 이루어 질 수 있는데 그것은 국제체육이나 국제상품 전시회, 국제예술공연,

국제적 발저, 국제적공헌등을 통해 경쟁이 이루어 질수 있다.

그리고 이 형태는 자체의 힘의 배양을 남북한간에서 선의적으로 겨루어 지면 보다 효과적이고 실질적이 겠으나 그렇게 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국제 사회에서 이루어 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다. 제 3자의 인식 또는 인정, 지지를 통한 경쟁

이 형태는 국제 사회의 지지 획득을 통한 경쟁인 것이다.

우리 국토의 분단이 국제적 압력에 의하여 이루어 졌고 또 우리의 통일문제가 국제적 환경에 영향을 받음이 사실일때 국제 사회내에서 누가 더 지지와 인정을 받는가 하는 문제는 통일문제의 주도와 우위 점령에서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우리와 북괴는 이에 많은 력량을 집중시키고 있으며 대한민국은 비적성 공산국가와의 접촉시도 그리고 북괴는 자유진영에까지 손을 뻗쳐 더 많은 지지 세력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이는 대립의 개념에서든 공존의 개념에서든 불가결한 경쟁이며 이는 또한 자체의 내적 력량배양을 통한 경쟁 못지 않는 중요한 경쟁 형태라 하겠다.

3. 경쟁의 구체적 방안

가. 남북한 각기 내부적 발전을 통한 경쟁

선의의 경쟁문제에서 중점이 여기에 있다는 것은 전술한바 있지만 여기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문제는 경제성장과 사회복지 자유와 기본권의 보장문제라 하겠다.

박대통령의 8.15선언에서도 「개발과 창의와 창조의 경쟁에 나설 용의는 없는가」라고 한 점은 이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핵심은 여기에 있다 하드라도 전반적인 면도 고찰되어야 하기에 여기에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요소별로 문제를 다룬다.

그리고 내부적 발전을 통한 선의의 경쟁의 구체적 방안이란 력량 배양이라는 문제와 결부되므로 이는 결론적으로 남북한의 력량을 비교하여 우리의 장점은 계속 신장시키고 단점은 이를 보완 장점으로 유도하며 북괴의 장점을 능가시키는 능력 배양의 문제라 하겠다.

(1) 정치적 측면

(가) 자유와 기본권의 보장

인간의 기본권리이며 민주주의 기본원측인 자유와 기본권의 보장은 진정 어느체제가 좋은가를 판가름 하는 척도가 된다.

<한국>; 의회, 민주주의 사법권의 독립, 자유경쟁체제, 등으로 보장되고 있다.

<북괴>; 푸로레타리아 독재 더나아가 김일성 일인독재 유지를

위해 자유라 기본권을 말살시키는데 북괴의 가장 약점 중의 하나라 보겠다.

(나) 정치의 안정

개발과 건설, 고도의 경제성장은 정국의 안정으로 부터 이루어지며 북괴와 선의의 경쟁도 그 안정의 바탕우에서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국>; 의회민주주의 제도로서 정권교체가 빈번하며 개인자유의 보장과 자유경제체제를 혼란 야기의 가능성이 많다.

<북괴>; 장기 집권으로 김일성 독재체제가 확립되었고 반대 세력의 철저한 숙청으로 당내 통일이 형성되었으며 노동당의 절대적 우위로 일관성 있는 정책 수행이 가능하다

따라서 정치적 안정면에서는 대한민국이 열세하다.

(다) 국민의 정치 의식 수준의 제고, 민주주의의 신봉, 국가관 지도층에 대한 신뢰등 정치의식의 제고는 앞으로 통일문제 해결에 중요한 비중을 찾이 하게 된다.

<한국>; 민주주의를 체험한 우리는 민주주의 우월성과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으나 새로운 세대들에게는 국가관이나 지도자에 대한 신뢰도가 미약하다.

<북괴>; 자유민주주의를 체험하지 못한 북한주민을 특히 젊은 세대들은 계속적인 사상교양의 강화로 공산주의 체제의 우월성이 머리깊이 밝혀 있으며 조국이란 국가관과 김일성을 비롯한 당 지도층의 절대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보다 강한 점이라 보겠다.

그러나 자유의 물결이 북한에 넘쳐흘러 들어 갈때 그들의 사고는 보다 쉽게 무너질 것이다.

(라) 국민단합

1970년대는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우리의 근대 민족사의 도정에서 민족 중흥의 성패를 가름하는 중요한 시기로서 민족의 단결과 힘의 집중은 중흥의 성패를 가름하며 또한 우리의 힘을 생산적인 목표에 어느만큼 집중시킬 수 있느냐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한국>; 지도자의 확고한 지도이념과 「비죤」을 제시하므로서 국민단합에도 유도시켜야 한다.

<북괴>; 강요된 것이기는 하나 당의 지도와 김일성의 유일사상에 집결시키고 있다.

(2) 경제적 측면

(가) 경제성장

박대통령이 제시한 8.15선언에서도 「어느 체제가 국민을 더 잘살게 할 수 있으며 더 잘살수 있는 여건을 가진 사회인가를 입증하는 개발과 창조의 경쟁에 나서자」는 것은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하여 국민이 잘살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경쟁을 말한다고 보겠다.

<한국>; 제 3 차 경제개발 5 개년계획이 끝나는 1976년에 가서는 한국의 경제가 북괴를 능가한다는 전제이지만 현재 한국의 경제성장율(총국민생산)은 9.7%(70년도)이며

일인당 국민소득 223.3불이다.

그리고 1976년에는 년평균 경제성장율을 8.6%로 목표하며 일인당 국민소득은 388.8불로 세계 상위중진국에 도달한다.

이러한 계획을 차질없이 수행할려면 정국의 안정과 국민의 의지가 무엇보다 뒷받침 되어 야 하겠다.

<북괴>; 북괴도 휴전이후 착실한 경제성장을 이루어 왔으나 1960년대에 들어와서 중.소 분쟁의 여파로 일정기간 성장의 순화를 가져왔다 그러나 60년 종말에 다시 정상화 되므로서 70년도 경제성장율은 9.4%이며 그중 공업성장율은 12.8% 농업성장율은 정체된 상태에 있으며 일인당 국민소득은 217불로 남한보다 미달된 형편에 있다.

그리고 북괴도 6개년 경제계획이 끝나는 1976년에는 공업 성장율을 년 14%, 국민소득을 년 10.3%로 목표하고 있다.

(나) 경제구조

경제구조는 산업별 구조, 부문별구조를 들수 있으나 여기에서는 부문별 구조가 여하히 형성되어 있느냐 또한 현대공업국가로서 발전 가능성을 살펴보겠다.

<한국>; 한국의 산업구조는 농림수산 26.4% 광공업 27.7% 사회간접 자본및 써비스가 45.9%로서 경제안정과 공업입국의 기반이 되는 공업부문의 비중이 미약하며 특히

그중에서도 중공업의 기반이 북괴에 비하여 열세하다.

<북괴>; 북괴는 농림수산이 18.3% 광공업이 64.2% 사회간접 자본 및 써비스업이 17.5%로서 공업기반이 확립되었다 그러나 이와같이 공업기반이 확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공업 특히 군수공업에 편중되어져 산업간의 평균이 이루어 지지 못하여 경제적 차질이 야기되며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경공업의 취약으로 경제가 주민과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 반면 군수공업을 위주로한 중공업 우선은 대립적 개념의 경쟁에서 장점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우리의 평화적인 통일의지에 가장 위협되는 요소라 하겠다.

(다) 경제요소(원료, 노동력, 공업능력) 경제요소중 원료와 노동력은 경쟁의 대상이 될 수 없으나 원료의 자급정책을 어떻게 하며 또 노동력의 질과 량을 여하히 보장하느냐 하는 문제는 경제발전의 중요한 요소라 하겠다.

원료중 지하자원은 북괴가 우리보다 유리하나 기타부문에서는 다같이 외국 의존에 달려 있다고 본다.

그리고 노동력도 남한은 인구 3,100만이고 북괴는 1,400만으로 우리가 북괴보다 2배이상의 인구는 노동력도 그만큼 많으나 우리는 여성노동력의 극소와 유휴노동력의 과다로 남녀 의무노동을 강요하는 북괴보다 별로 량적으로 많은 현상은 아니며 질면에서도 매일 자기노동에 대한 측정을 제도화한 북괴보다 양호한 편은 아니다.

<한국>; 공업능력 즉 기술 능력면에서 한국은 자유경제 자유경쟁 체제로 기술 의무교육이 불가능하고 또 공업시설이 북괴보다 미약하기 때문에 기술공 기술자의 수는 적으나 자유경쟁체제하 외국 기술의 도입 외국 유학의 자유로 고도의 전문가는 북괴보다 우위에 있다. 그러나 공업능력의 중심을 이루는 기능공 기술자의 양성이 부족한 우리는 앞으로 공업발전에 암영을 가져다 줄것이다.

<북괴>; 외국유학의 제한과 선진국 교류의 한계로 고급 전문가의 배양은 곤난하나 중학교 이상 학생의 기술 의무교육과 인문사회과학 계통의 억제 그리고 공업기반이 많은 북괴는 기술자 기능공의 수면에서 우리보다 우월하다.

(라) 경제의 외국 의존도

경제의 외국 의존도란 즉 자립경제의 확립을 말한다.

<한국>; 예산편성에 외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많은 차관을 가지고 있다.

<북괴>; 예산편성에 외원이 고려되지 않으며 우리보다 차관이 적다.

(마) 경제적 안정

경제적 안정은 고도의 경제성장, 경제의 자립, 경제구조의 균형 사회적 안정등이 이루어 지면 자연 경제적 안정이 이루어 지는 것이다.

<한국>; 정권의 교체 자유경제체제, 북괴 도발의 증대등으로 착실한 안정지속 여건이 불리하다.

<북괴>; 중앙집권적 통제경제의 지속으로 어느정도 안정요인을 갖고 있다.

(3) 사회 문화적 측면

(가) 안정된 사회구조의 형성

<한국>; 하층계급(저소득층)이 팽탕되고 상층계급(고소득층)이 국한되는 피라밑형의 사회구조이다.

이는 불안정 구조로서 중간층이 확대되어 타원형의 구조로 형성시켜야 한다.

<북괴>; 중간층이 없고 거의가 다 하층이며 극소수의 상층이 존재하나 거의가 동일한 생활환경 이기 때문에 안정되었다고 보겠다.

(나) 국민성

건전한 국민성 즉 국민의 질을 제고시키면 밝은 사회로 발전을 이룩할 수 있으며 국민성은 신뢰감 근면성 자주성 협동성 정의감 봉사성등을 들수 있다.

<한국>; 자의에 의해 이루어 지도록 유도해야 하며 개인 이기주의 증대는 이를 위협하고 있다.

<북괴>; 공산주의를 위해서만 있을수 있고 또한 강요당하고 있기 때문에 순수한 입장에서 찾기 힘들다.

(다) 분배의 공정

잘 살수 있는 사회란 공배를 공정히 함으로서 이루어

진다.

이 분배가 공정치 못할때 분쟁 불만 불신 혼란이 야기된다.

<한국>; 능력에 따라 혜택받는 자유민주체제에서는 어느정도 공정을 기하고 있으나 일부는 불로 소득층 내지 자본가에게 착취된다.

<북괴>; 상당량은 집권자에게 강제 수탈당하고 그 나머지로서는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 진다.

그러나 북한 주민들은 많은 량이 수탈됨을 인식하고 있다.

(라) 사회 복지 향상

<한국>; 문화 오락시설은 잘 가추어져 있으나 능력 있는자에게만 혜택되고 있으며 휴식면에서는 점차 향상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기타 사회보장면에서는 극히 빈약하다.

<북괴>; 문화시설은 거의 전부가 이용할 수 없으며 사회 보장면에서는 발전되었다.

(마) 교육문제

<한국>; 능력에 따라 개방되었으나 일부에 편중되어 있다.

<북괴>; 초보교육은 의무화하였으나 일정한 단계(중.고)에 달하면 거의 폐쇄되 있다.

또 질도 독재자의 우상화에 많은 비중을 둔다.

(바) 의식주의 향상

어느 사회가 살기좋은 사회인가를 국민이 선택하도록

하자는 문제와 바로 의식주 문제와 직결되었다.

<한국>; 비교적 자유롭고 풍부하게 공급된다. 그러나 격차가 심하다.

<북괴>; 가장 철저한 통제로 북괴의 가장 취약점 중의 하나이다.

반면 생활수준의 격차가 해소된다.

(사) 언론 출판 보도의 자유

<한국>; 완전 자유개방

<북괴>; 철저한 통제로 주민들의 귀와 사고의 바탕을 말살 한다.

그러나 철저한 통제로 일부 집권자의 영구집권 도구로 이용되며 체계적인 대내외 선전과 국론 통일이 가능하다.

나. 북괴와 접촉 내지 공동참여속에서의 경쟁형태

동 경쟁형태는 현 여건하에서도 소극적이나마 공동 참여속에 이루어 질수 있으나 적극적인 경쟁을 하자면 긴장 완화가 이루어 지고 대화와 교류가 선행되어야 된다.

동 경쟁형태의 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수 있다.

(1) 국제체육을 통한 경쟁

(2) 각종 국제전시회를 통한 경쟁

(3) 국제예술을 통한 경쟁

(4) 국제적 발명을 통한 경쟁

(5) 국제적 공헌을 통한 경쟁

(6) 남북한 상품전시회

(7) ~~교류(비정치적)를 통한 경쟁~~

다. 제3자의 인식 또는 인정, 지지를 통한 경쟁형태

동 경쟁형태는 외교적 질을 강화하여 국제사회에서 누가 많은 지지와 신임을 획득하는가 하는 문제라 하겠다.

이것은 우리의 통일에 크다란 힘이된다.

(1) 외교의 량적 확대

세계의 많은 국가와 연대를 맺고 그들로 부터 지지를 획득해야 한다.

<한국>; 대사급외교관계 81개국

총영사급 〃 8 〃

계 89 〃

<북괴>; 대사급외교관계 35개국

총영사급 〃 5 〃

무역대표부급 〃 8 〃

계 48 〃

(2) 외교의 질적 강화

<한국>; 대사급 81개국중 상주 37개국

총 상주국수 45개국

<북괴>; 대사급 35개국중 상주 31개국

총 상주국수 44개국

한국는 북괴보다 량적으로는 많으나 질적면에서 동일하며 특히

중립제국인 중근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영향력 있는 국가와 외교관계를 맺으므로서 우리보다 질적으로 우세한 면을 보이고 있다.

(3) UN 외교를 통한 경쟁

UN은 우리의 통일문제 해결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며 북괴가 대남 도발을 감행하였을때 UN의 결의에 의해 UN군이 참전 북괴와 싸웠으며 UN은 현재까지 북괴를 도발자로 낙인 찍고 규탄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UN 외교에서 우리가 우세한 입장에 있었다.

그러나 국제세력의 다원화, 중공의 강력국으로서의 대두와 UN 가입의 전망 그리고 분단국 동시 UN 가입 추세등을 앞으로 UN 외교에서 우리에게만 유리해질수 없다.

현재 북괴로 내면적으로 UN의 지지세력 확보에 외교력량을 집중시키고 있는 이때 우리는 보다 강력한 UN 외교를 전개 UN을 통한 통일여건 조성 경쟁에 전력해야 하겠다.

(4) 적성국과의 유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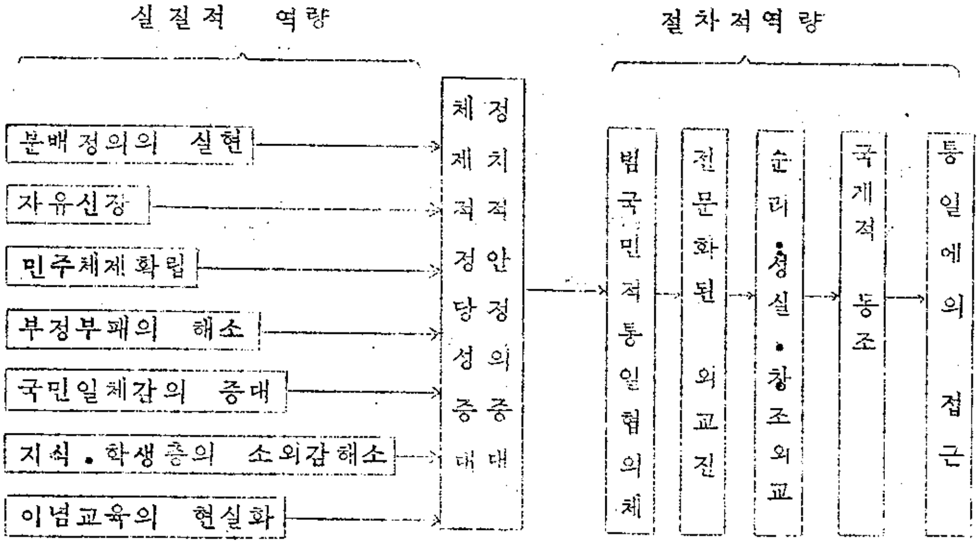
<한국>; 공산권과 유대 단절상태, 일부 비적성 공산권과 교류 시도

<북괴>; 미국을 제외한 전체 자유권과 교류(주로 경제문화교류) 미국과도 용공분자의 입국허용

豫告文破棄(71.12.31)

12. 결 론

지금까지 논한 것을 두가지 역량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하나는 실질적 역량이요 다른 하나는 절차적 역량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적 근대화, 분배의 정의, 자유신장, 민주체제확립, 부정부패의 해소, 국민일체감의 증대, 체제적 소외감의 해소, 이념정책의 조정등은 실질적인 체제적 역량의 배양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런것을 통하여 체제의 정당성과 안정이 증대되는 것이다. 반면 범국민적 통일협의체의 구성, 외교진 충원의 합리화, 그리고 순리적이고 성실하며 창조적인 외교자세의 확립은 절차적인 역량으로서 체제적인 역량이 통일목적에 충분히 효과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해주는 구비조건인 것이다. 도표로서 이를 아래와 같이 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과의 경쟁에서 우리의 입장을 유리하게 만드려면 우리의 약점을 제거하고 우리의 강점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공산체제와의 비교에서 우리의 약점으로 들 수 있는 것이 분배정의의 불충분한 실현과 심한 부정부패의 미해소라고 할 수 있다. 또 국민이 지역감정등으로 어느 정도 일체감을 상실한 것과 지식층과 학생층에서 찾아 볼 수 있는 현질서에 대한 어느 정도의 소외감 내지 불만도 우리의 약점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약점을 하루 빨리 해소함으로써 우리의 통일역량을 배양해야 할 것이다.

북한에 비해서 우리의 장점이라고 들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 자유요 민주제도이다. 그러나 자유가 제한되어 있다는 것은 그 만큼 우리의 강점을 무효화시켜 버리는 결과가 되어 보다 튼튼한 민주주의를 실현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도 우리의 강점을 그만큼 중화해버리는 결과가 된다. 이와 같은 우리의 장점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우리의 입장을 더욱 유리케 해야 할 것이다.

북한은 국제적으로 고립되어 있으며 경원시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도 만족할만한 국제적 위치를 획득치 못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북한과는 달리 더욱 순리적이고 성실성있는 외교적 자세를 취함으로써 국제적 동조를 증대하면 그만큼 우리의 입장이 강화될 것이다.